

연구용역보고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 방향**

2011. 2.

경기도 제 2 청사

제 출 문

경기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 방향>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02.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이상훈

- 연구기관명 :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허 훈 (대진대학교 지방정부정책연구소장)
- 공동연구원 : 강 석 찬 (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 윤 기 (연구위원 : 대진대학교 경제학과)

제 목 차 례

제1장 서론2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명칭 2

제2절 연구방법 및 서술 방법 3

제3절 연구의 요약 3

제2장 경기도와 주한미군의 만남 6

제1절 일본군의 항복과 해방 그리고 미군정의 실시 7

1.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알타회담과 포츠담회담의 개최 7
2.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일본의 항복 10
3. 한반도의 분단과 미·소의 남북한 분할 점령 11
4. 미군의 진주와 미군정의 실시 11

제2절 한국전쟁과 미군의 참전 13

1. 미군의 극동방위선(에치슨 라인) 선포 13
2. 한국전쟁의 발발과 UN 안보리의 소집 15
3. 미군의 참전과 경기도 내 주요 미군 전투 18
4. 한국전쟁의 교착상태와 휴전협정의 체결 20

제3절 경기도지역에 집중 배치된 주한미군 26

1. 미군주둔의 고착화 과정 26
2. 전후 복구와 한국군 증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34
3. 닉슨독트린의 발표와 미 제7사단의 철수 36
4. 도끼 만행사건의 발생과 미군의 적극 대응 40

제4절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재배치 42

1.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정책 변화 42
2.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전략(GPR)’ 46
3.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중요 내용 48

4. 제 2차 LPP에 대한 협의사항	46
----------------------------	----

제3장 주한미군 주둔이 경기도에 미친 영향52

제1절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관계의 시대적 변천 53

1. 경기도내 주한미군 주둔현황	53
1) 경기도내 미군기지	53
2) 경기도의 미군공여지 현황	55
2. 시대별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관계	57
1) 지역사회와 미군과의 밀월	57
2) 불편한 동거	59
3) 갈등의 표출	60

제2절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62

1. 결산동 - 옥지속의 외로운 섬 -	62
1) 인걸이 태어날 수 있는 인걸지형(人傑地形)	62
2) 옥지속에 갇히다	62
3) 지금은	64
2. 기지촌 - 잊고 싶은 현대사의 그늘 -	65
1) 기지촌의 형성과 매춘의 역사	65
2) 경기도내 기지촌	68
3) 끝나지 않은 기지촌 여성들의 삶	71
3. 혼혈아 - 피를 나눈 이방인 -	72
1) 내 어머니는 양색시	72
2) 혼혈아들의 삶의 질곡	74
4. 기지촌 여성운동	76

제3절 주한미군과 지역경제 79

1. 외화획득 및 생필품의 유입통로	79
1) 달러의 젖줄	79
2) 미제 암시장의 형성	80
2. 고용창출 및 지역사회 재건	82
1) 상권의 형성과 일자리 창출	82
2) 지역사회 재건 지원	84
3. 미군공여지로 인한 지역개발 억제	85
1) 도시발전의 왜곡	85

2) 미군공여지로 인한 재정손실 및 지역경제 피해	87
4. 미군의존형 기형적 경제구조	89
1) 미군의존형 경제	89
2) 보산동과 달라진 미군의 소비풍속도	90
제4절 주한미군과 지역문화	93
1. 부대찌개, 존슨탕	93
1) 부대찌개의 유래	93
2)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94
3) 부대찌개의 전국화	94
2. 양키문화 유입	95
1) 미8군 쇼와 대중음악	95
2) 동두천 락 페스티벌	97
3) 미군이 가져다준 독특한 커피문화	98
4) 최고의 브랜드 Made in USA	100
4) 미국문화의 전파자이자 훌륭한 영어교재 AFKN	102
3. 카투사	103
1) 카투사의 탄생	103
2) 전 세계에 하나뿐인 독특한 부대	105
3) 카투사 선발의 역사	106
4) 병영의 양극화	107
제5절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와의 갈등	108
1. 주한미군 범죄	108
1) 주한미군 범죄 추이와 유형	108
2) 유형별 주한미군 범죄사례	110
2. 주한미군 훈련 피해	113
1) 매향리 사격장, 포연속에 사라진 매화향기	113
2) 영평사격장, 지금도 계속되는 고통	114
3. 환경오염 피해	115
1) 주한미군과 영화 ‘괴물’의 탄생	115
2)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117
4. 미군 공여지	119
1) 쇠목마을과 공여지 반환운동	113
2) 공여지 관련 지역개발 제한사례	121

제1절 국가정책의 역사와 발전방향	124
1. 미군과의 첫 만남	124
2. 주한미군에 대한 국가정책의 흐름	125
1) 주한미군 관련 정책의 역사와 변화	125
2) SOFA의 체결(1962. 7. 9)	126
3) 현재의 미군정책	128
2. 주한미군에 관련된 정책의 시각과 발전방향	132
1) 주한미군을 보는 시각의 변화	132
2) 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34
3) 주한미군공여구역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35
4) 동두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36
제2절 자치단체 정책의 역사와 발전방향	138
1. 주한미군 관련 정책의 흐름	138
1) 택시기사의 국가상대 소송	138
2) 지자체의 환경오염 시정 요구와 공여구역의 반환	139
3) 지자체의 주한미군정책의 변화 촉구	140
4) 주한미군과의 직접교류정책	141
2. 주한미군 관련 정책의 발전방향	141
1) 주한미군 관련 국가정책의 보완 촉구	141
2) 직접교류사업의 발전방향	142
참고문헌	146

표 차례

<표 2-1> 아시아지역 주둔 미군의 감축상황(1969-1971)	37
<표 2-2>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주요 개정내용	50
<표 3-1> 경기도내 주요 시군별 미군기지 및 반환현황 (2010년 현재)	54
<표 3-2> 특별법 적용 공여구역 현황	56
<표 3-3> 비과세 면적 현황	88
<표 4-1> 주한미군에 대한 주요 시각과 입장	133
<표 4-2> 한미협력회의 개최실적	141
<표 4-3> 한미협력회의 안건처리실적	133

그림 차례

<그림 2-1> 1943. 11. 25 카이로회담	7
<그림 2-2> 1945. 2 알타회담	8
<그림 2-3> 경기도 문산에 건립되어 있는 미군 참전기념비	23
<그림 2-4> 미 제2사단 Red Cloud의 마크가 새겨져 있는 참전비	32
<그림 2-5>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지평리 전투 참전기념비	32
<그림 2-6> 경기도 오산의 기념비	33
<그림 2-7> 미 제2사단 6.25참전비	33
<그림 2-8> 1967년에 촬영한 푸에블로호 사진	36
<그림 2-9>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당시의 현장사진	41
<그림 3-1> 경기도의 미군기지 현황	53
<그림 3-2> 미군과 고아	58
<그림 3-3> 미군이 한국 지역사회를 위해 제공한 소방차	59
<그림 3-4> 동두천시 결산마을의 모습	63
<그림 3-5> 동두천시 몽키하우스의 모습	66
<그림 3-6> 기지촌의 모습	69
<그림 3-7> 1960년대 보산동거리	70
<그림 3-8> 업소수 및 여성수 현황	70
<그림 3-9> 혼혈인 현황	74
<그림 3-10> 두레방 모습	77

<그림 3-11> 1960~70년대 동두천에서 유통되던 미군 군표	80
<그림 3-12> 동두천시내 미군부대 위치	86
<그림 3-13> 제조업체 비율	89
<그림 3-14> 보산동 관광특구내 상가모습	91
<그림 3-15> 부대찌개	94
<그림 3-16> 동두천 락 페스티벌의 모습	98
<그림 3-17> 동두천의 양키시장	101
<그림 3-18> 미군범죄 발생추이와 유형	109
<그림 3-19> 사건현장 및 추모비 모습	111
<그림 3-20> 미 8군 영안실과 약품모습	116
<그림 3-21> 영평사격장 기름유출	118
<그림 3-22> 쇠목마을과 공여지 반환운동	119
<그림 3-24> 쇠목마을 공여지 반환운동 기념비와 해원탑	120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명칭

일본 제국주의 패퇴 후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열강들의 각축의 결과는 주로 경기도를 무대로 전개되었다. 동·서 양 진영의 타협의 결과는,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여 평화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민족을 분단시키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북쪽의 일부 구역을 북한에게 넘겨주었고, 주한미군의 대부분이 이곳에 주둔하여 경기도는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서구 민주주의 세계의 보루가 되었다.

주한미군이 경기도에 주둔한 것은 동·서 양 진영의 첨예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표상적으로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당시 역사는 이념적으로 부딪쳤지만 전장이 되고, 사람이 죽고 살고, 슬픔과 가난, 위로와 희망과 걱정이 솟는 것은 사람이 발붙이고 사는 경기도였던 것이다.

이제 주한미군 주둔 60년을 바야흐로 넘는 시점에 있다. 대한민국호의 현재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잘 살아내기 위해서 주한미군과 경기도의 만남을 총체적으로(holistic)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한미군과 경기도의 만남은 국가를 단위로 하는 거시사적 서술과 주민들의 애환과 그들에게 미친 서구의 미시적인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관찰하는 미시사적 관점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주둔의 원인과 배경을 거시적으로 본 뒤에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역사회의 영향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고 나서야 경기도와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개입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와 주한미군의 관계를 국제정세의 흐름과 정치역사, 그리고 사회경제상을 살펴본 후 경기도가 주한미군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기술순서는 첫 장에서 경기도와 주한미군의 만남을 해방 전후사의 배경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둘째 장에서는 점차 시계를 좁혀 경기도에 진주한 주한미군과 주민과의 접촉점에서 발생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경제, 사회, 문화적인 관점

에서 서술한다. 그리고 셋째 장에서는 미군주둔으로 인한 영향을 긍정적인 국가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서술방법

그동안 주한미군 관련 문헌(정치, 경제, 역사, 사회문화 등)을 망라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향토사가나 생존인물 인터뷰 등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서술방법으로는 편년체적 서술과 구술사적 서술, 르포르타주 서술방식 등 역사적 사건이나 흐름 등을 잘 나타내는 방법을 혼용한다.

제 3 절

연구의 요약

제2장은 경기도와 주한미군의 만남을 역사적으로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한국의 독립문제 등을 비롯한 전후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45년 2월에 개최된 알타회담과 동년 7월 일본에 대한 무조건 항복 요구와 소련의 대일 참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포츠담회담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대일전 참전으로 야기된 일본의 항복과정에 대해 살펴본 후, 미·소의 이념적 대립과 군사적 대결에 따른 한반도 분단과정에 대해서도 고찰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에 진주하고 있던 미군 제24군단의 한국 진주과정과 1945년 9월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까지 약 3년간 실시된 미군정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제2절에서는 1950년 1월 당시 미국의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이 밝힌 ‘미국의 극동방위선’(일명, 애치슨라인)의 내용과 한국전쟁의 발발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UN 안보리 소집 이후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 과정과 미군이 경기도 내에서 치른 주요 전투내용 및 활약상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하였고, 이 밖에도 1950년 10월 말 중공군의 개입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국전쟁과 휴전협정의 체결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경기도지역에 집중 배치된 주한미군의 실태와 전후

복구를 위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또한 1969년 7월 25일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이 꾀에서 발표한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의 내용과 그에 따른 미 제7사단의 철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이 밖에도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도끼만행사건과 이에 대한 유엔군의 적극적인 대응과정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제4절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시설과 토지는 반환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및 한·미 양국군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및 용산기지재배치계획(YRP)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로 인해 주한미군의 역할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경기도지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제3장은 주한미군 주둔이 경기도에 미친 영향을 미시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1절에서는 경기도내 주한미군의 주둔현황을 살펴보고, 시대별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관계,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주한미군에 대 지역사회정책 변화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제2절에서는 국가 안보와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는 등의 이유로 시내 대부분을 내어주게 된 동두천시의 변천과정과 미군이 주둔하면서 필요악처럼 생겨난 각 지역의 기지촌의 형성과 주둔지역의 이미지가 악화, 국제결혼과 혼혈아 문제 등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슈별, 그리고 지역별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3절에서는 경제가 어렵던 시절 달러 획득 및 생필품 유입의 통로 역할에서부터 부대 인근의 상권형성 그리고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고용 창출과 미군의 지역사회 재건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역할과 함께,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군용품 및 면세품을 거래하는 암시장의 형성과 미군공여지로 인한 지역개발 억제, 그리고 미군의 존형 기형적 경제구조의 형성 등 부정적인 측면 등을 경제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제4절에서는 미군부대에서 전파된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발생한 여러 문화현상(음식, 대중문화, 골프 등)에 대해 사례별로 분류, 서술하여 주민들의 생활상을 살펴보았다.

제5절에서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주요 갈등요인으로서 주한미군범죄와 미군의 훈련 중 발생한 주민 피해,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등을 사건별, 사례별로 분류·정리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초자료로서 정리하고자 하였다.

제4장은 이 연구의 결론으로 이제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한미군관련 정책추진방향의 역사와 발전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군의 첫 만남을 조명하면서 그동안 주한미군의 지위를 놓고 벌어지는 국

가정책과 주한미군 주둔지 및 공여지에 대한 국가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진단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한미군주둔지 및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정책은 국가안보 우선 및 주한미군 우선 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주둔지 주변 지역사회 및 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정책이 미흡하였다 할 수 있었다. 최근에 주한미군공여구역등주변지역지원특별법이 발효하여 지원정책이 펼쳐지고 있으나, 국가안보를 위해 부담해 온 비용에 비하여 미흡하고 형평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주한미군의 지위를 정한 SOFA를 개정하여 미군과 지역사회 간에 대등한 동반자관계가 되도록 국가정책을 바꾸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SOFA가 개정이 되도록 국가에 촉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둘째는 주한미군공여구역등지원특별법이 형평성을 잃고 있으므로 대표적으로 손실이 큰 동두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주한미군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동반자적 관계를 위해 직접교류를 늘리되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미군들을 끌어들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2013년에 주한미군주둔 60주년을 맞는 동두천 등에서 도 및 기초자치단체와 미국 및 주한미군과 협력하여 주한미군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매년 주한미군과의 국제 교류페스티벌의 개최 등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 백

제 2장

.....
경기도와
주한미군의 만남

제 2 장 경기도와 주한미군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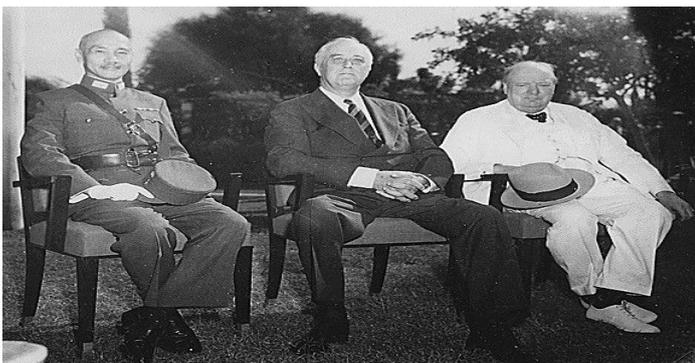
제 1 절

일본군의 항복과 해방 그리고 미군정의 실시

1.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알타회담과 포츠담회담의 개최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의 독립문제가 연합국 지도자들 사이에서 최초로 논의된 것은 1943년 3월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헐(Condell Hull) 국무장관이 이든(Anthony Eden) 영국 외상과 워싱턴에서 가진 회합 때였다. 이 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한반도를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중국, 소련 등 3국의 신탁통치 아래 두었다가 독립시킨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 한국문제가 본격적으로 공식 논의된 것은 일본 패전 후의 전후처리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루스벨트, 처칠(Winston Churchill), 장제스(蔣介石) 등 3국 정상들이 1943년 11월 22일 회동한 ‘카이로회담’에서였다. 이 회담에서 발표된 ‘카이로 선언’ 제3항에서는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념하여 ‘적당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 한국을 자유·독립시킬 것임을 결의한다.”고 선언하였다. 여기에서 ‘적당한 절차를 거쳐’라는 표현은 일본이 패망한 후 한국을 즉각 독립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탁통치를 거치게 만들겠다는 외교적 표현이다.



1943. 11. 25
카이로회담에 참석한
중화민국의 장제스(蔣介石)
총통,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총리

<그림 2-1> 1943. 11. 25 카이로회담

이러한 한국의 신탁통치 방침은 1945년에 열린 얄타회담과 포츠담회담에서도 거듭 확인되었다. 1945년 2월 8일부터 8일간 흑해의 휴양지인 얄타(Yalta)에서는 소련의 대일 참전과 전후 처리문제를 논의하게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총리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 등 3국의 정상들이 회담을 개최하였다. 얄타회담 중 루스벨트는 스탈린과 한국의 신탁통치문제를 논의하였다. 루스벨트는 “미국, 소련, 중국 세 나라가 20~30년 정도 한국을 신탁통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영국도 참여시켜야 하고, 신탁통치기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결국 미·소 두 정상은 한국을 신탁통치 한다는 사실 외에 그것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얄타회담에서 소련은 대일 참전의 대가로 동북아시아에서 사할린 등 러시아시대의 구 영토와 만주에서의 여러 권익의 회복을 보장받음으로써 전후 이 지역에 대한 세력팽창의 발판을 다시 마련하였다. 얄타회담은 이탈리아가 이미 항복하고 독일의 항복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전후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1943년 처칠은 욕심쟁이인 스탈린의 야욕에 대해 걱정했지만, 루스벨트는 일본과 독일을 고립시키기 위해 스탈린과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중에 이러한 루스벨트의 생각은 너무 안이한 것이었음이 드러났지만, 세 나라의 정상은 회담을 통해 전후 전범국가와 그 점령지역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1945. 02 얄타회담.
영국 처칠 총리,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소련의 스탈린의 모습

<그림 2-2> 1945. 2 얄타회담

그런데 가장 주목할 점은 얄타회담이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분단과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의 기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루스벨트는 이 회담에서 독일 항복 이후 90일 이내에 소련이 태평양전쟁에 참전해 줄 것을 요

청하였고, 중국의 동이 없이 몽골의 독립, 뤼순(旅順)항과 만주철도에 대한 소련의 이권을 승인해 줄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는 일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과정에서 당시 강력했던 일본 관동군의 해체를 소련군에게 떠넘김으로써 미군의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마지막 정상회담인 포츠담회담에서도 한국문제는 특별한 언급 없이 ‘카이로선언’을 확인하는 데 그쳤고, 신탁통치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미·영·소 3국의 외상회담에 위임되었다. 즉, 1945년 7월 22일 일본에 대한 무조건 항복 요구와 소련의 참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영국, 소련 3국 정상 간에 개최된 포츠담회담은 이튿날 ‘포츠담선언’ 발표를 통해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한국문제와 관련해서는 ‘카이로선언’의 내용을 그대로 재확인함으로써, “한국이 적절한 시기에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명백히 하였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관한 협의를 위해 회담에 수행했던 미국과 소련의 참모장들은 별도의 군사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 두 나라의 작전범위를 나누었다. 양국 참모장들은 공군의 작전범위를 만주 창춘(長春)에서 함경남도 우수단 부근에 이르는 선으로 분할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한반도 점령을 위한 육군의 작전구역 설정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이 무렵 마샬(George C. Marshall) 미 육군참모총장은 작전국장인 헐(J. E. Hull) 중장에게 미군의 한반도 진공에 대해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것은 갑자기 떨어진 지시는 아니었다. 미 정부 내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소련이 한반도를 단독으로 점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헐 중장은 최소한 인천과 부산이 미군의 작전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서울 북방에 선을 그었는데, 그것은 북위 38도선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계 일부에서는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된 북위 38도선이 바로 이 포츠담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의 군당국자 사이에 논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사실 여부를 떠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때까지 미국이 종전 후의 한반도의 정치적 장래에 관한 구체적 설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은 불행하게도 일본 식민지통치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국토의 분단이라는 또 다른 민족적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2.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일본의 항복

1945년 4월 루스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먼(Harry S. Truman)은 소련의 참전을 막기 위해 원자폭탄 사용을 결정하게 되었다. 사실 미국은 소련군의 진군을 막고 태평양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8월 9일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함으로써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일본은 그 이튿날 ‘천황제 유지’를 조건으로 ‘포츠담 선언’을 수락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미 소련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진군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아시아에서는 전범국가도 아니었던 한국이 분단되었다. 아울러 미국의 원자폭탄 사용은 결과적으로 일본이 전범국가에서 ‘핵 피해국가’라고 주장하게끔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전황이 연합국 측에 유리하게 급진전되자, 미국은 일본 본토와 한반도에 대한 진공계획을 군사적 점령과 일본군의 무장해제 계획으로 전환하였다. 미국 정부는 8월 11-12일 이틀간에 걸쳐 개최된 국무성·국방성·해군성 간의 ‘3성 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의 건의를 받아들여 8월 15일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북에서는 소련군이, 그 이남에서는 미군이 각각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다는 ‘일반명령 제1호’를 맥아더 사령관에게 훈령하였다. 이 ‘일반명령 제1호’의 내용은 곧 미국, 소련 및 중화민국 정부에도 전달되어 그대로 수락되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수락한 후, 일본에 진주한 맥아더 원수는 9월 2일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하지(John R. Hodge) 중장의 24군단을 9월 8일 인천에 상륙시켰다. 한편 소련군은 1945년 8월 9일 함북 나진 공습을 시작으로 12일에는 청진에 상륙하였고, 8월 24일 평양에 진주해 군정사령부를 설치하고,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기 이전인 8월 말에는 38도선까지 내려와 북한 전역을 완전 장악하였다.

이 북위 38도선은 당초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고, 그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잠정조치로 설정된 군사적 분계선이었지, 한반도이 정치적 분할을 기도한 경계선은 아니었다.

소련의 세력팽창으로 인한 동·서 냉전의 시작과 함께 미·소 양국의 점령지역인 한반도에 2개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군사분계선인 38도선은 북한에 주둔했던 소련군이 1945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걸쳐 남한과의 철도·전신·전화·우편·교통 등을 단절함으로써, 남북의 왕래가 끊기고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이 시작되었다.

3. 한반도의 분단과 미·소의 남북한 분할 점령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크게 외인론과 내인론이 대립해 왔다. 외인론(外因論)이란 분단의 원인을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부 강대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내인(內因論)이란 우리 민족 내부의 분열 또는 좌우대립이 분단을 초래했다는 주장을 말한다.

학계 일부에서는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된 북위 38도선이 바로 이 ‘포츠담 회담’에서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후였다. 학계에서는 한반도의 분단이 사실상 냉전시대의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편의주의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한반도가 38도선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것은 미국의 대소전략에서 비롯된 군사적 편의주의이자 정치적 고려라는 것이 미국의 공식견해이다.

한반도 분단은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세력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미국은 한반도에 38도선을 확정된 장본인의 하나라는 점에서, 소련은 분단 고착화에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은 분단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한반도통일에 빚을 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그레이(Arthur L. Grey)는 “미국에 의한 38도선 이남 점령계획은 북한에 진주하기 시작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한반도 분단선이 38도선으로 획정된 것은 1945년 7월 연합국의 마지막 전시 회담인 포츠담회담 때 결정된 것이 아니라, 포츠담회담 후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기 시작한 1945년 8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미국의 3성조정위원회(SWNCC: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됐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4. 미군의 진주와 미군정의 실시

일본의 항복에 따른 한반도의 미·소 분할 점령은 한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독립만을 애타게 기다려 온 민족의 염원을 짓밟은 강대국들의 약소민족에 대한 횡포였다.

그 후 소련의 세력 팽창정책으로 인한 동·서 냉전의 시작과 함께 미·소 양군의 점령지역인 한반도의 남과 북에 2개의 정권이 탄생하였다. 군사분계선인 38선은 북한에 주둔했던 소련군이 1945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걸쳐 남한과의 철도·전신·전화·우편·교통 등을 단절함으로써 남북 간의 왕래가 끊기고 한반도의 분단

이 시작되었다.

당신 북한지역의 상황을 보면, 치스차코프(Ivan M. Chistiakov)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소련 제25군이 1945년 8월 26일 평양에 진주하였다. 그 뒤를 이어 소련 제1전 선군 정치부의 지시를 받고 김일성 일파가 ‘정치·행정일꾼’으로 입북, 로마넨코(Andrei Romanenko) 소장 휘하의 소련 점령군 사령부 정치부에 소속되어 북한의 소비에트화에 앞장섰다.

이들은 동년 10월 10일 북한에 친소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 ‘서북5도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설립함으로써 북한 단독정권의 기반을 다졌다.

한편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1945년 9월 19일 서울에 미 군정청을 설치하고, 아놀드(Archibald Arnold) 소장을 군정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미군정 당국의 초기 점령 정책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제치하에서 사실상 망명정부의 역할을 해온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미군의 진주 직전 국내에서 여운형과 안재홍 등이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를 인정치 않았다. 둘째,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전 조선 총독이 맥아더 장군의 승인을 받아 계속 치안권을 행사하던 일본 총독부 기관들의 도움을 얻어 현상을 유지하면서, 소련과 한반도 신탁통치 안을 협상하여 종국적으로 미·영·중·소 4대국에 의한 신탁통치로의 이행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미군정의 정치적 중립주의는 국내에서 남조선노동당(약칭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의 준동을 가능케 하여, 남한 내의 정국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했다. 그러는 동안 38선은 군사분계선에서 점차 정치적 분단선으로 굳어져, 결국 국토와 민족이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미군은 한국을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군정 초기에 있어서 그들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했고, 한국 내의 정치사정을 알지 못했다. 하지(Hodge)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는 미군정은 공산주의자를 거부하는 입장에서 공산주의라고 생각되는 요소는 무조건 척결하기 시작하였다. 불행하게도 미군정은 공산주의자들과 통일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자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

더구나 외세를 통한 한반도의 인위적 분단은 패망한 일본에 의해 이미 조성된 사회·경제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한편 북한에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소련의 정책과 미국의 견제정책은 한국인을 우익 혹은 좌익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미군정은 민족청년단 및 대한독립청년단을 포함하는 많은 우익단체에 대하여 자금 및 조직 지원을 하였고, 이를 통해 좌익운동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오히려 미군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각종 정치폭동이 남한을 휩쓸었다.

한편 최초의 미 군정청 행정기구는 군정장관 밑에 7개 과와 8국으로 구성되었다. 7개 과는 총무·외무·인사·기획·회계·지방·재산관리과이며, 8국은 경무·재무·광공·학부·농공상·법무·체신·교통 등으로 되어 있었다.

그 후 1차 개정(1946. 3)과 2차 개정(1946. 12)을 거쳐 1947년 6월에 형성된 과도 정부는 종래의 13부 6처를 13부 1특별국으로 통폐합하였고, 또한 인사위원회와 중앙경제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중앙경제위원회 안에 물가행정처와 식량행정처를 두었다. 이 때 만들어진 기구는 그대로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까지 존속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초기에는 그들의 군정 수행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제 식민통치 시절의 관제를 그대로 답습하였고, 일본인 관리들을 대부분 고용함으로써 조선총독부 관제와 다를 바 없는 상태였다. 또한 미 군정청은 서구식 행정제도를 맹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당시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 행정상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미군정은 일제가 제정했던 정치범처벌법을 비롯한 식민통치 악법을 폐지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인권보호 영장제를 도입하였으며,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을 제정·공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복지행정기구의 확대와 노동조합의 설립 허용, 미국식 교육의 시행 등을 미군정제도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제 2 절

한국전쟁과 미군의 참전

1. 미국의 극동방위선(애치슨 라인) 선포

신생 대한민국 정부의 최우선 외교과제는 UN으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승인을 얻고 UN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정통성과 유일 합법성을 인정받아 통일을 위한 UN의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48년 9월 1일 조병옥 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7개 자유 우방국들에 파견하여 대한민국 정부 승인을 요청했으며, 동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UN총회에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장면 박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미국 등이 제안한 한국의 독립승인안은 UN총회 정치위원회를 거쳐 12월 12일 총회에 상정되어 48대 6(기권 1)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이러한 UN총회 결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처럼 제3차 UN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대한민국의 독립이 승인되자, 1949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많은 우방국들이 한국 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는 외교절차를 밟았다.

한편 이승만 정부는 국제적 정통성 확보와 함께 안보차원에서는 미군의 계속 주둔과 자위능력 보존을 위한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원조 획득을 외교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즉, 이승만 정부는 반공국가의 건설과 자유 우방과의 결속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국가의 방위체제 확립을 위해 모든 우방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지지와 군사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외교에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월 26일 한국에 대한 정치·경제·군사적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와 ‘미국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한·미협정(KMAC)’과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MDAP)’을 체결하였다.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이 체결되기 2주 전인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은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안전과 권익”이라는 주제의 정책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에서 ‘미국의 극동 방위선,’ 이른바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이 거론되었다. 이 연설내용의 어느 한 군데에도 미국의 “태평양 방위 대상지역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구절은 없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국명을 거명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커밍스(Bruce Cumings)를 비롯한 일부 수정주의학자들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애치슨 성명을 통해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는 함정을 팠다.”는 주장을 했으며, 미 공화당도 의회에서 “미국이 한국전쟁의 발발을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사실상 애치슨 장관의 연설이 있기 전부터 남침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남침을 위해 1950년 1월 중국인민해방군의 조선인 부대 1만 4천 명을 북조선군에 편입시킨 후, 스탈린과 한국전쟁을 공모하기 위해 1949년 2월부터 1950년 3월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나 소련을 극비리에 방문하였고, 1950년 4월에는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을 만난 바 있다.

이처럼 남침준비를 끝낸 김일성은 스탈린의 지시를 받고 6월 25일 새벽을 기해 소련군이 작성한 ‘선제 타격작전계획’에 따라 인민군을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시켰다.

이처럼 이승만 정부는 국가 존립에 가장 중요한 안보에 총력을 경주하고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북한군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무기 부족으로

한국전쟁을 예방하지 못한 것은 초기 우리 안보외교의 대실패였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전쟁의 발발과 UN 안보리의 소집

누가 한국전쟁을 주도하였으며, 왜 시작되었는가 하는 물음은 1953년 7월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는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즉, 한국전쟁의 기원과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전쟁연구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 왔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한국전쟁 연구는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한 연구였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한 논쟁을 대별하면, ① 소련·중국·북한의 아시아 적화전략의 일환으로서의 남침설, ② 미국과 남한의 공동전략에 의한 북침설, ③ 남북한이 모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선제공격을 했다는 중간설이 있다. 그러나 남침설은 부인할 수 없는 통설이 되어 왔으며, 주로 좌경 내지는 수정주의 학자들에 의한 북침설과 중간설은 한때 학계에서 흥미있는 추론정도로만 받아들여졌다.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한 수정주의적 해석은 1952년에 발간된 스톤(I.F. Stone)의 『한국전쟁 비사』가 최초였다. 이 책에서 그는 한국전쟁이 미국과 한국의 공모에 의해 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스톤의 저서 이후 수정주의자들은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해 여러 각도에서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들 수정주의자들의 논리를 정리해 보면, ①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이 한국전쟁의 발발을 가져왔다는 주장, ② 이승만정부의 북진통일론이 북한의 대남도발을 촉진시켰다는 주장, ③ 남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약의 강화가 북한을 자극했다는 주장 등이다. 또한 할리데이(J. Holliday), 콘데(D.W. Conde) 등은 스톤과 같이 명백한 북침설의 입장에 서있지 않고, 다만 기습적 전면 남침설을 부인하고, 이승만의 선제도발에 의한 북한측의 역공 가능성 또는 남한군의 북침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개진했던 정도에 머문다.

그런데 북침 가능성으로 경도되어 있던 할리데이는 최근 들어 남침이나 북침이냐 하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다만 급진적 시각에서 미국과 남한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고만 쓰고 있다.

이처럼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시 한국전쟁에 관여했던 주요 국가들에서 전쟁 관련 기밀문서들이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1977년에는 미국무부에 의해 한국전쟁에 관한 당시의 기밀문서들의 상당 부분이 공개되었다. 또 한국전쟁의 분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전쟁 중에 미군이 노획한 북한

문서'가 공개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러시아에서 한국전쟁 관련 구 소련문서를 공개함으로써 한국전쟁은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남한에 의한 북침설이나 남침유도설이 아닌 '북한에 의한 남침설'이 정설임이 확인되어졌다.

사실상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국전쟁은 선제적이고 전면전이었으며, 사전에 주도 면밀하게 준비된 것이었다. 1993년에 러시아의 전 대통령인 옐친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드미트리 볼코고노프 대장은 “한국전쟁의 이면”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전쟁의 발발과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한국전쟁은 김일성의 적극적 발의와 스탈린의 전폭적 지원 그리고 모택동의 동의에 의해 발발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의 발발과정]

1949년 3월 :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전쟁계획을 보고한 후, 귀로에 중국 북경에서 김일성과 모택동간의 회담이 개최됨.

1950년 1월 : 김일성이 당시 북한주재 소련대사였던 슈티코프 장군에게 전쟁 동의를 요청하고, 동년 2월 스탈린이 이에 동의함.

1950년 5월 초 : 바실리예프 중장 등 소련 군사고문단이 '선제타격 작전계획'을 작성하여 김일성에게 전달함.

1950년 6월 18일 : 북한 인민군 7개 사단에 남한에 대한 정찰명령이 하달됨.

1950년 10월 : 스탈린은 유엔군의 개입으로 북한군이 궤멸되자 모택동에게 동·서진영 간에 제3차 세계대전을 불사하고라도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택동이 이에 적극 찬성함. 소련군은 무기와 군수 지원역할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힘.

그런데 스탈린은 비밀전문을 보낼 때 모택동에게는 '필리포프'라는 가명을 그리고 김일성에게는 '편시'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한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남침에 의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즉각 미국 정부에 대해 군사지원을 요청하였다. 북한군의 남침을 소련의 세계 적화전략의 시도로 인식한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정책을 이제까지의 '최소 개입'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환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6월 25일 오후 2시(한국 시간 6월 26일 오전 4시)에 긴급 소집된

UN 안보리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전투행위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청하는 미국의 제안을 9대 0(기권 1)으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UN 안보리의 결의를 무시하고 남침을 계속하자, 6월 27일 안보리는 “회원국들에게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그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결의했으며, 같은 날 트루만 대통령은 맥아더 미 극동군 사령관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해공군의 지원을 즉각 개시하라.”고 명령하였다.

또한 동년 7월 1일 영국과 프랑스는 “UN군 사령부의 설치와 UN 회원국들의 무력 원조를 미국 정부의 단일 지휘 아래 둔다.”는 공동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하여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 호주,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그리스, 터키, 태국 등 16개국 군대로 UN군이 편성되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즉시 맥아더 장군을 UN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북한군을 격퇴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는 세계 역사상 UN이 침략자 격퇴를 위해 취한 최초의 집단적 제재조치였다.

미국 정부와 UN의 이러한 단호한 결정은 한국 정부를 크게 고무시켰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남침으로 수도를 임시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겼으나, UN군의 반격으로 북한군을 물리치면 오히려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UN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1950년 7월 12일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약칭 대전협정)을 체결하였다. 7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한반도에서 공산군과의 전투행위가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UN군 사령관에게 위임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외교적 결정은 지금까지 UN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권이 귀속되는 근거가 되었으며, 일시 주권의 제약이라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UN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계속 우리에게 불리하여, 후퇴를 거듭하던 UN군은 낙동강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고 격전을 벌였다. UN군은 영천에서 국군 제8사단이 북한군 제15사단을 섬멸시킨 후부터 반격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UN군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여 9월 25일 서울을 탈환함으로써 29일 이승만 정부는 서울로 환도하였다.

그리고 10월 1일 국군 제3사단 23연대가 마침내 조국통일을 위하여 강원도 동해안의 양양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 날을 ‘국군의 날’로 정하였다. 10월 2일 맥아더 UN군 사령관은 북한 정권의 항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했으므로, UN군은 10월 7일 UN총회가 UN군의 38도선 이북으로의 북진을 허용하는 UN결의의 통과(47: 5, 기권 7)를 기다렸다가, “북한군의 붕괴만이 UN군의 목표임”을 선언하면서 이튿날 38도선을 넘어 북진하였다.

UN군은 파죽지세로 북진, 북한 주민들의 환영 속에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했으며, 10월 25일에는 국군 제6사단 7연대가 압록강변의 초산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대규모의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함으로써 UN군은 1951년 1월 4일 다시 서울을 포기하고 후퇴하였다.

3. 미군의 참전과 경기도 내 주요 미군 전투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맥아더 UN군 사령관은 주일 미 보병 제24사단장인 딘(Dean) 소장에게 미군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으로 이동시키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1950년 7월 1일에 선발대로서 제21연대 제1대대(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일본으로부터 부산에 공수되어 7월 2일 대전으로 향발하였는데, 이것이 UN군과 미군의 첫 출병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진주한 미 제24사단의 장교와 병사들은 최고 지휘관에서 최하급 병사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한국에 대해 무지했던 것은 한국 진주군의 선정이 군사적 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취해졌기 때문이다. 단지 한반도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군 병력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진주군으로 선정된 미 제24사단은 한국 진주 및 한국에서의 군정실시에 관해 거의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한국에 파견되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미군들에게 한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일본인들이었다. 미군은 한국을 경시하고 일본을 중시했고, 일본인을 신뢰했으며, 한국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하였다. 미군을 해방의 은인으로 환영하려는 한국인과 한국정세를 미국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인해 미 제24사단의 장교들이 한국에 진주할 때 머리 속에 지니고 있던 한국인관과 한국정세관은 일본인들을 통해 전달된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형성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미군들의 왜곡된 한국인관 및 한국정세관은 미군으로 하여금 한국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한국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연출하여 그들을 환영하러 인천부두에 나왔던 인천시민들을 앞에 두고 마치 적지에서 지상작전을 감행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한편 1950년 7월 5일 미 보병 제24사단의 주력부대가 상륙을 완수하고 금강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으나, 북한군이 금강을 도하하였으므로 제24사단은 다시 대전으로 후퇴하였다. 한편 미 제24사단과 제1군단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금천, 대전, 수원으로 진격하고, 미 제24사단은 1951년 1월 3일 38도선 방어 당시 동두천 북쪽에서 한탄강을 끼고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 때 미군은 주진지와 보

조진지까지 작업을 마치고 완전한 방어진을 구축하였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1951년 1월 4일 다시 서울 후방으로 철수하였다.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은 동년 1월 27일 한강 남안의 적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여 미 제1사단과 제9군단에 전면 공격의 태세를 갖추게 하니 1월 31일에 미 제9사단은 여주-이천-용인 일대로부터 미 제24사단의 우측에 미 제1기갑사단이 좌측으로 공격을 시작하여 여주-양평 간의 적을 격퇴하고, 2월 초에는 양평-남한산으로 진격하였다. 또한 계속 진격하여 Kansas(영평천-한탄강-임진강 하구) 전투에 참전하여 중공군 제40군과 대치하여 금화-서울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 제25사단(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은 1950년 7월부터 한국전에 참전하였다. 미 8군 사령관 리지웨이는 “1951년 1월 25일을 기하여 대규모 전투수색대를 여주-수원선으로 주둔시켜 적을 교란시키고,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라”는 작전 명령에 따라 진격을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은 미 제1기갑사단과 함께 이천을 탈환하였다. 미 제25사단은 수원 남쪽까지 진출한 다음, 1월 26일에는 인천-수원선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반격의 서막을 열었다.

한편 미 제1군단은 1월 31일 금양장-수원-칠용곡 일대로부터 우익인 미 제3사단과 좌익인 미 제25사단이 광교산-수리산 일대의 적에 대한 공격을 하였는데, 이 때 미 제25사단에 아군 제1사단의 15연대가 배속되었다. 연대는 미 제25사단의 최일선으로서 미륵동 일대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2월 3일 창곡산의 적을 격퇴하고, 계속하여 2월 9일에는 관악산을 탈환한 다음, 2월 10일에는 동작동에서 노량진에 이르는 한강 남안을 확보하였다.

미 제25사단도 영등포-소사-인천 일대를 점령하였고, 1951년 3월 22일 08시를 기하여 군단장은 미 제25사단에 작전지시를 하여 포천을 점령하라는 명령에 따라 미 제24연대는 수위봉-해룡산을, 제65연대는 호조산-감악산을, 제27연대는 주엽산-왕방산을, Turkey 여단은 주엽산-국사봉을 각각 목표로 공격하였다.

드디어 미 제25사단은 187공수연대와 함께 3월 28일 동두천과 포천을 점령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적 1,892명을 사살하고, 94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4월 22일 미 25연대는 사령부를 영평에 두고, 제35연대를 영평천 북안리 시소성리에, 주력은 한탄강 북안으로 하여 철원군 남쪽까지 진출하였다. 이어 방어태세에 돌입하여 Kansas(영평천-한탄강-임진강 하구) 전투에 참전하기도 하였다.

미 제3보병사단(사단장 Robert H. Soule)은 1950년 9월 23일 부산에 도착한 후 이틀만에 작전에 돌입하였다. 동년 11월 12일 사단 부대와 원산에서 합류해 가장 큰 전투를 치루었다.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으로 인해 후퇴한 미 제1군단은 1951년 1월 31일에 금양장-수원-구룡곡 일대로부터 군단 우익에 미 제3사단이, 좌익에 미 제25사단이 광고산-수리산 일대의 적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제3사단은 2월 2일 광고산을 탈환하고, 4일에는 판교리-문이산 일대로 진격한 다음, 좌 인접한 아군 제15연대의 진출에 힘입어 용이하게 청계산을 탈환하여 10일에는 천호동-잠실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1951년 3월 14일부터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 시내로 진출하여 3월 16일에는 미 제3사단이 퇴계원-쌍문동 일대를 점령함으로써 70여일만에 수도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 이어 3월 23일에는 미 제3사단이 의정부를 점령하고, 3월 28일에는 포천과 동두천을 점령하였다. 4월 중순에는 연천 일대에까지 진격하여 적 101명을 사살하고 449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미 제3사단은 4월 24일 사령부를 전곡에서 동두천으로 옮긴 후 초성리-적성 남쪽으로 진격하여 계속 적을 물리쳤다.

한편 미 제7사단은 1952년부터 1970년까지 18년 동안 동두천시에 주둔하였으며, 한국과 인연이 깊어 우리 민요인 아리랑을 사단가(師團歌)를 정해 부르고 있는 유일한 사단이다.

미 8군 사령관인 맥아더 원수는 주일 미 제7사단과 새로 편성한 미 제1해병사단으로 편성한 제10군단을 상륙군단으로 재편성한 다음,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하기 위해 1950년 9월 15일 인천에 무사히 상륙시킨 후, 이어서 김포 비행장과 서울을 탈환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낙동강에 포진해 있던 한·미 양국군이 총반격을 개시하기 시작하였고, 미 제7사단의 일부 병력이 영등포에서 수원으로 남진하여 인민군의 후방을 위협하자, 인민군은 낙동강 전선의 주력부대들의 퇴로가 끊길 것을 우려해 9월 23일 드디어 총 후퇴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미 제2사단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단으로서, 1950년 7월 23일 일부의 단위부대가 부산에 도착하였다. 동년 8월 24일 전후사단이 도착하여 미 제24사단의 일부가 함께 낙동강에서 전투를 시작한 후 1951년 1월 31일 강원도 원주에서 중공군과 전투하였다. 동년 2월에는 흥천 근방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의 겨울공세를 저지하는 등 막대한 승리를 거둬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우수부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4. 한국전쟁의 교착상태와 휴전협정의 체결

1950년 12월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세는 UN군의 패배와 후퇴를 가져왔고, 미국의 군사전략을 한반도 통일전략에서 종전전략으로 바꾸어 놓게 되었다. 맥아더는 군대

의 증원을 호소했지만, 미국은 세계전략상 중공군보다도 소련군과의 전면전을 두려워한 나머지 트루만 대통령은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전쟁은 다시 UN군이 승기를 잡게 되었다. 전쟁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워커(Harris Walton Walker) 중장의 후임으로 온 리지웨이(M.B. Ridgway) 중장은 병력으로 맞붙는 대신 화력으로 중공군의 인명손실을 최대화하는 작전으로 나갔고, 그 결과 1951년 3월 18일에는 서울을 재수복하고, 다시 공산군을 38도선 이북으로 퇴각시켰다.

이때 미국은 다시 38도선 문제에 봉착했으며, 종전협상에 유리한 정도로만 38도선 이북의 제한적 진격을 허용하는 어정쩡한 선에서 맥아더는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대부분의 UN 참전국들은 38도선 이북으로의 진격에 반대했으며, “만일 미군이 단독으로 북진한다면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참전국도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무승부를 위한 전략’으로 기울어 ‘전전(戰前) 원상의 회복’이라는 선에서 한국문제를 해결하기로 태도를 굳혔다. 결국 트루만 대통령은 중공의 참전가능성을 끝까지 부정하고 확전과 만주 폭격을 주장해 온 맥아더 UN군 총사령관을 4월 11일 전격 해임하고 리지웨이 장군을 후임으로 임명한 후 휴전을 주도해 나갔다.

그 후로 38도선을 두고 UN군과 공산군 간에 밀고 밀리는 대공세와 대반격이 한동안 계속되었지만, 그 기조는 휴전협상에서 우월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지리한 공방이었을 뿐이다. 특히, 신임 밴 플리트(J.A. Van Fleet) 미8군사령관의 지휘로 제1차(4월), 제2차(5월) 춘계공세에서 전황을 유리하게 이끈 다음에는 38도선을 확보한 선상에서 휴전협상에 의한 해결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갔다.

한편 1951년 공산군의 춘계공세가 실패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자, 중공과 북한도 소련에 장비 지원과 함께 휴전의 필요성을 UN군측에 인식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51년 6월 애치슨 국무장관의 요청을 받은 미국의 소련문제 전문가 케난(George F. Kennan)이 당시 주UN 주재 소련대사인 말리크(Yacob A. Malik)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휴전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하였고, 6월 24일 말리크는 미국의 CBS방송을 통해 정식으로 휴전을 제의하였다.

드디어 1951년 7월 리지웨이 UN군사령관은 휴전회담을 제의하였고, 이에 중국인 민해방군의 펑더화이(彭德懷)와 북한의 김일성은 UN군이 제안한 원산 앞바다의 병원선이 아니라 개성으로 하자며 역제의를 해왔다. 7월 10일에 공산측의 주장대로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드디어 열렸다. UN군측 수석대표는 미 해군 극동지역 사령관인 조이(Turner Joy) 부제독(중장)이었고, 한국군 대표는 당시 제1군단장인 백선엽(白善燁) 소장이었다. 공산측 수석대표는 소련 국적을 가지고 있던 남일(南日) 북한

군 총참모장이었다.

그런데 개성은 회담장소로서 적당하지 않은데다, 8월 4일 중공군의 개성지역 침범으로 장소를 중립지대 안에 있는 판문점으로 옮기기로 양측이 합의, 10월 25일부터 휴전회담은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1951년 8월 공산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중지하고 억지 주장을 펴자, 미 합동참모본부는 미군이 군사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경우 원자폭탄을 사용키로 결정하였다. 트루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미 공군은 35대의 폭격기로 8월 2일 나진항을 공격하였다. 또 원폭이 존재하는 목적과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동년 10월 ‘허드슨 하버(Hudson Harber)’라는 암호명 아래 한반도에서 몇 차례 원자폭탄 투하연습까지 실시하였다.

결국 이러한 UN군측의 군사적 압력 과시 앞에 휴전협상이 재개됐는데, 우리 정부는 휴전회담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한반도가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기 전에 휴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휴전회담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북측대표인 남일은 회의의제를 군사문제에서 벗어나 정치의제화하려고 했고, 순수 군사전문가로 대표단을 꾸린 UN측은 당황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5개 의제가 정해졌는데, 그것들은 ① 의제의 선택, ② 군사분계선문제, ③ 휴전감시방법 및 그 기구문제, ④ 포로에 관한 협정, ⑤ 쌍방관계국 정부에 대한 권고 등이었다.

하지만 휴전회담 중에도 ‘피의 능선 전투’ 등 적대행위는 계속되었고, 이는 휴전회담의 교착상태를 의미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군사분계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미군은 공산측에 38도선을 포기하라고 하였고, 그들은 38도선을 고집하였다. 미군은 큰 희생을 치르며 확보한 현재의 적과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싶었고, 적은 휴전회담을 빌미로 열세를 만회하려는 속셈으로 회담은 평행선을 그었다. 당시 수석대표 조이(Turner Joy)는 군사분계선을 현재의 군사접촉선을 경계로 두고 그 분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20마일을 비무장지대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비무장지대구상이 나온 것이다. 그는 현재 제공권과 제해권 모두 UN군이 유리하므로 공산측이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강박하였다. 그러나 공산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후 1951년 8월 17일에 분과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서 UN측은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그 선을 중심으로 너비 4km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고 8월 20일에 수정제의하였다.

한편 미군의 한국 철수를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행정부가 1953년 1월 출범하였다. 동년 3월 5일 소련의 통치자 스탈린이 사망하자 공산권 내에서도 조기 종전을 원하는 분위기가 고

조되었으며, 북한에서도 남로당계의 속전파(續戰派)가 제거되었다. 이런 가운데 2월 22일 UN군 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가 부상포로를 우선 교환하자는 제의를 했고, 이러한 제의를 스탈린 장례식에서 돌아온 저우언라이(周恩來)가 받아들였다. 이로써 동년 4월 11일 협상을 가로막고 있던 ‘부상포로 교환협정’이 판문점에서 조인되고, 4월 26일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재개되었다.

그러자 한국에서 휴전반대의 움직임이 다시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4월 한 달 동안 휴전 반대와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대규모 군중시위가 꼬리를 물었고, 국회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전국적으로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승만이 내세운 북진정책에 호응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이 무렵 이승만의 북진정책은 UN과의 정책공조면에서는 불협화음과 위기에 직면했지만, 국내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하였다. 미국은 이승만의 이러한 반대행동을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보면서도, 그에 대한 한국 내의 대대적 호응을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

그러던 중 4월 22일 이승만 대통령은 “UN이 공산측과 휴전 이후 중공군을 압록강 남쪽에 잔류시키는 협정을 맺는다면, 한국군을 UN의 지휘권에서 철수시킬 것”이라는 각서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이것은 전부터 이승만이 휴전반대를 위해 사용하던 위협수단이었다. 그러나 북진에 관한 국내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은 이것을 단순히 공갈로 보기가 어려웠다. 특히, UN군을 관장하고 있던 클라크는 한국군의 단독행위 가능성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반대와 단독 북진을 표명한 직후인 4월 26일 클라크 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감금·제거 및 임시정부 수립계획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즉, 미국은 골칫거리인 이승만 대신 좀 더 다루기 쉬운 인물을 한국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미국에게 생소한 선택이 아니었다. 1952년 ‘부산정치파동’ 당시 미국은 이미 이러한 이승만 제거계획을 세운 바 있었기 때문이다. 5월 4일 미8군사령관 테일러(M. Taylor)는 이러한 기존의 계획을 토대로 하여 ‘에버레디 계획(Ever ready operation)’을 작성했다. 그것은 한국군이 UN군의 작전권을 벗어날 경우 반항적인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그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며, 필요할 경우 UN군 지휘 하의 군사정부 수립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한국측과의 사전협의 없는, 다시 말해 공산측과의 타협을 통한 종전정책의 강행으로서, 이승만의 반대를 넘어 전쟁을 종결지으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휴전회담 한국측 대표 소환과 단독북진 주장을 포함하여 더욱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미 국무성과 국방성

그리고 합참의 관계자들이 한국문제에 관해 광범위한 토론을 벌였는데, 그 회의에서는 ① 한국군을 동원해 이승만을 감금 후 새 정부를 수립한다. ② 이승만의 휴전동의 및 협조 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약속한다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결국 합동회의에서 격론 끝에 이승만을 제거하는 대신에 미·필리핀 방위조약이나 ANZUS조약과 유사한 성격의 상호방위조약을 한국과 맺기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에버레디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이러한 합동회의의 결론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즉각 수용되었으며, 클라크 UN군 사령관과 브릭스(E.O. Briggs) 주한 미국대사에게도 통보되었다. 그 내용은 한국이 휴전에 협조하고, UN군의 지휘권 안에 남아 있겠다는 조건 하에서 미국은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통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UN군과 공산군 양측은 오랜 쟁점이었던 포로교환문제에 관해 합의에 도달했고, 그 결과 1953년 6월 8일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럼으로써 휴전은 목전에 다가왔고, 이승만의 북진정책은 위기에 봉착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6월 17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현재의 휴전안은 대한민국에는 사형집행 영장”이라고 경고한 후 반공포로들을 전격 석방하였다. 즉, 이승만은 6월 18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UN군에 수용되어 있는 전국의 공산포로들 가운데,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 2만 7,366명을 극비작전을 통해 수용소에서 과감하게 석방 또는 탈출시킨 것이다. 이러한 반공포로의 석방으로 인해 휴전회담은 다시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승만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미국에게 휴전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파기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UN군 사령부의 권위를 인정치 않으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한동안 보류했던 이승만 제거계획인 ‘에버레디 계획’을 다시 고려하기도 했다. 전격적인 반공포로 석방이 이루어진 당일 이러한 소식에 충격을 받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닉슨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등 핵심인사가 모두 참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직접 이승만 대통령을 ‘친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적’이라고 언명하였다. 또한 아이젠하워는 “위험을 중식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 신속한 방법은 쿠데타”라며 “이런 행동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사태를 수행할 만한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한국 내 인사들을 동원해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국의 최종 선택은 이승만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

을 무마하기 위해 방미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이 이를 거부하자, 딜레스 국무장관은 자신을 대신해 국무성 극동담당 차관보인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을 대통령 특사로 한국에 파견하였다. 그는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 결국 이대통령으로부터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 대신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이 협상은 마무리되었다.

7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은 “UN군이 한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한국군을 그 휘하에 남겨둘 것”이고, “휴전에 서명은 않겠지만, 그것을 방해하지도 않을 것”이며, “휴전 이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로버트슨에게 보냈다. 그 대신 미국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한국에게 약속했다. 첫째, 휴전 이후 한·미간에 방위조약을 체결한다. 둘째, 한국 복구를 위한 장기간의 경제원조를 제공한다. 셋째, 한국군의 전력을 육군 20개 사단으로 증편하며, 해군과 공군의 장비를 지원한다. 넷째, 휴전협정에 따라 공산측과 진행할 정치 회담에서 90일이 지나도록 별 진전이 없을 경우, 한·미 양국은 이 회담과는 별도로 한국 통일방안을 협의한다.

이처럼 한·미간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휴전협정 체결을 위한 길이 완전히 열려 7월 10일 휴전회담이 속개되었다. 1951년의 회담 개시 후 2년 1개월 동안 무려 575회의 공식 회의를 가진 끝에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천막’ 안에서 전문 5조 36항으로 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UN군을 대표해서 1952년 5월 7일 리지웨이(M.B. Ridgway) 대장의 후임으로 UN군 최고사령관에 부임한 해리슨(William K. Harrison) 중장과 북한 및 중공군 대표 남일 대장이 조인하였다. 또 문산에서 클라크(Mark W. Clark) UN군 총사령관이, 평양에서 김일성과 쑹더화이(彭德懷) 중국인민해방군 사령관이 각각 확인함으로써 쌍방은 공산측이 고집하던 38도선이 아니라 UN군측의 처음 주장대로 당시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경계선에서 2km씩 후퇴하여 폭 4km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3년 1개월간에 걸친 지루하고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온 한국전쟁은 일단 종식되었다. 오늘날 비무장지대의 골격은 이때 정해진 것이었다. UN군 최고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그리고 중국인민해방군 사령원 사이에 맺어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조가 그 근거이다.

미군은 휴전 직후 곧바로 주요 전선에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경기도의 비무장지대 외곽인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등 경기도의 주요 지역에 전투부대가 배치되었다.

제 3 절

경기도지역에 집중 배치된 주한미군

1. 미군 주둔의 고착화과정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일주일 후인 1953년 8월 4일 미 국무장관 덜레스(J.F. Dulles)가 방한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을 통해 두 사람은 8월 8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조약과 성명에는 당시의 현안에 관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모두 표현되어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핵심은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과 함께 미국이 UN군과는 별개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제4조가 바로 그 근거가 되었다.

한편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자체의 군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보장받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여타면에서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이러한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 ‘한·미 의사합의록’이었다. 거기에는 한국군의 규모에 대해 ‘경제안정과 확보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부속문서를 통해 총 72만 명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병력을 유지시키도록 미국이 원조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또 7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 반대급부로 북진정책을 포기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상실함으로써 주권의 일부를 침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53년 12월 26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평화조류에 대한 기여로서 한국에 있는 미 지상군을 점차 감축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조만간 2개 사단이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흘 뒤 덜레스 국무장관은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는 신방위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적이 재차 남침할 경우 중국 본토를 폭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미국의 철군 움직임에 대해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반대여론이 비등하였다.

이에 미국은 한편으로는 일련의 한·미 고위군사회담을 통해 철군에 따른 한국군 증편과 화력증강문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약속을 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 철수를 진행시켜 나갔다. 특히, 미국은 철수미군 장비의 한국군 이양을 통해 국군 전력증강을 조속히 추진키로 약속하였다.

1953년 당시 한국에는 미군 8개 사단(육군 7개 사단과 해병대 1개 사단) 약 32만 5,00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처음 철수가 시작된 것은 1954년 3월 14일이었는데, 이날 미 제45사단 일부가 모든 장비를 한국군에게 넘겨준 채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어서 제40사단도 철수하기 시작했다. 두 사단은 동년 6월까지 철수를 완료함으로써 미군 철수의 1단계가 완료되었다.

동년 8월 18일 미 국방성은 주한미군 4개 사단의 철수를 발표했는데, 이로써 미군의 2단계 철수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 제25사단과 제3사단이 10월 말까지 철수를 완료했으며, 11월 6일에는 제24사단도 철수하였다. 미 지상군 철수와 함께 미 공군도 철수하기 시작했다. 우선 제15전술정찰 중대와 제49전투폭격 대대가 일본으로 이동했고, 9월 1일에는 미 제5공군사령부가 오산에서 나고야(名古屋)로, 제8전폭 연대는 규슈(九州)로, 제3경폭 연대는 사세보(佐世保)로, 제18전폭 연대는 필리핀의 클라크(Clark) 공군기지로 이전하였다.

그 결과 1955년에는 8만 5,000명의 미군만이 남았고, 1957년에는 미 육군 제1군단 산하의 제2사단과 제7사단 7만 명 정도만 한국에 주둔하였다. 제24사단 1진이 한국을 떠나던 11월 20일 미 8군사령부도 용산에서 일본 도쿄 근교의 자마(座間) 캠프로 이전하여 미 극동지상군 사령부와 재통합되었다.

제5대 미 8군사령관 테일러(Maxwell D. Taylor) 장군은 미 극동군사령관 겸 UN군 총사령관 헐(John E. Hull) 대장으로부터 한국,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 육군에 대한 지휘권을 인수하여 미 극동지상군사령관 겸 제8군사령관에 취임했다.

그러나 1955년 7월 26일 미 8군사령부는 새로 사령관으로 부임한 화이트(Isaac D. White) 대장과 함께 다시 용산으로 복귀했다. 이번에는 1년 8개월 전에 통합한 미 극동지상군사령부도 함께 왔다. 이에 따라 서울의 미 8군 전방사령부는 미 극동지상군사령부 겸 제8군사령부로 개칭되고, 일본의 자마 캠프는 후방 사령부로 개칭되었다.

휴전 무렵 한국군은 14개 사단에 45만 명으로 155마일 휴전선 중 60% 정도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휴전 양해사항으로 한·미간에 합의되었던 한국군 사단 증설문제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53년 12월 15일 한국군 제1군이 창설되었으며, 이듬해 10월 31일에는 제2군이 창설되었다. 1954년 3월 13일 해병 제1여단이 창설되어 미 제1해병사단으로부터 지휘권을 이양받았으며, 3월 21일에는 제1야전군사령부가 신설되어 미 제10군단으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리고 국군 20개 사단 편성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창

설된 6군단이 1월 20일 포천에서 미 제1군단으로부터 작전권을 이양받았다.

이 무렵 한·미 양군의 방어편성은 다음과 같다. 미 제8군은 미 제1군단으로 하여금 휘하의 미 제2사단과 제7사단 그리고 한국군 제1군단, 제5군단, 제6군단을 작전통제하여 서울 북방의 서부전선을 방어토록 했다. 대신 동부전선의 방어는 한국군 1군이 전담했으며, 한국군 2군은 후방지역에 대한 통제를 담당했다. 주한미군이 이렇게 서울 이북의 서부전선에 집중배치된 것은 북한의 기습공격과 같은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

1957년에 들어오면서 미국은 한국군 규모의 감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미국이 내세운 명목상의 이유는 양보다는 한국군의 현대화가 급하다는 것과 지나친 군비부담으로 한국의 경제개발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주한미군의 현대화 및 핵무장화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의 핵심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었다. 1957년 7월 15일 미 8군사령부는 “제7보병사단이 7월 중으로 현대적인 부대편성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현대적 부대편성’이란 원자전에 대비한 ‘펜토믹(Pentomic)’ 사단으로의 개편을 의미했다. ‘펜토믹’의 ‘펜트’란 미 국방성을 뜻하는 펜타곤(Pentagon)을 뜻하는 것이며, ‘토믹’은 원자탄이란 뜻의 ‘아토믹(atomic)’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한국에는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280mm 핵대포와 지대지 미사일인 어니스트 존(Honest John)이 도입되었다.

한편 한국기간 중 미군은 동두천과 의정부 등 주로 경기도지역에 주둔하게 되었다. 동두천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1951년 7월부터이다. 먼저 미 제24사단 휴양소가 2~3개월 가량 존재하였고, 그 후 중남미계 부대인 미 제3사단 6연대가 1952년부터 1953년까지 주둔했으며, 흑인 부대인 제25사단 24연대 등이 주둔하였다.

1951년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자, 민사처(民事處)에서 주민들을 소개(疏開)하기 시작했으며, 이 때 주민소개는 UN경찰이 담당하였다. UN경찰은 주로 황해도민으로 결성되었으며, 미군속(美軍屬)의 형태로 미군부대 경비를 명목으로 운영되었다. 1952년 11월 말 경 주민소개가 끝나고, 1956년 토지징발증이 발급되었으며, 토지징발 보상은 국방부 관재과에서 담당하였다. 가옥 보상은 전무하였고, 토지에 한하여 국가발행채권과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채권의 특성으로 인해 중간에 소실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나 가옥주 그리고 그곳에 고향을 둔 사람들만 어려운 생

활고를 겪게 되었다. 아직까지 토지보상금이나 가옥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미군이 동두천 주변기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나 미군이 사용료를 내는 일은 없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물의 설비, 비품, 정착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참고로 그 동안 주한미군이 수용한 건물 총수는 1만 5백여 개이며, 그들이 기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은 9천만 평으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처럼 넓은 토지는 거의 전부 미군에게 무상으로 주어지고 있다. 또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6조 1항은 미군에게 한국의 용역시설 사용순위에서도 우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용료나 요금도 할값으로 내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한국군이 내는 전기료의 43%와 휘발유의 25%만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지시설 사용의 각종 혜택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경기도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미군은 보병 제24사단, 제25사단, 제3사단, 제7사단, 제2사단 등 모두 5개 사단이었는데, 제24사단, 제25사단은 주둔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3사단, 제7사단, 제2사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제3사단은 1952년부터 1954년까지 약 2년간 동두천에 주둔했으며, 당시 사단장은 소울(Robert H. Soule) 소장이었다. 제3사단은 1950년 9월 23일 부산에 도착한 후 이틀만에 작전에 돌입했으며, 동년 11월 12일 사단부대와 원산에서 합류해 가장 큰 전투를 치루었다. 제3사단은 이듬해인 1951년 3월 14일부터 한강을 도하하여 3월 16일 퇴계원-쌍문동 간을 점령함으로써 70여 일만에 수도 서울을 되찾게 되었다. 이어 3월 23일에는 의정부를 점령하고, 3월 28일에는 포천과 동두천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제3사단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1년 3개월 후인 1954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포트 배닝으로 귀환하였다.

또한 미 제7보병사단은 1917년 12월에 창설되었으며, 1952년부터 1971년 3월 철수할 때까지 약 20년간 동두천에 주둔하였다. 제7사단은 우리 민요인 아리랑을 사단가(師團歌)로 정해 불렀을 만큼 한국과 인연이 깊은 미군부대였다.

제7사단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직후 김포 비행장과 서울을 탈환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제7사단은 휴전 이후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가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미국이 한국 정부에 미군 감축계획을 통고함에 따라 1971년 철수하게 되었다. 한·미 양국 정부는 10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1971년 2월 6일 한국군 현대화와 장기적 군사원조 제공, 주한미군 2만명 감축과 한국군의 휴전선 방위 전담, 북한의 무력침공에 공동 대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중추인 제7사단의 철수가 현실화되었다.

1971년 3월 27일 제7사단이 철수함에 따라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던 미 제2사단이 동두천지역으로 이동했고, 제2사단이 담당했던 지역은 1971년 3월부터 한국군 제1사단이 인수했다. 제7사단은 한국 철수 이후 1971년 4월 2일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에서 해체되었다. 제7사단의 철수로 주한미군 병력은 총 6만 3천명에서 4만 3천 명으로 감축됐으며, 주한미군은 18년만에 판문점을 제외한 모든 휴전선에서 제2전선으로 물러나고 한국군이 155마일 휴전선의 방위를 전담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한편 미 제2보병사단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현재까지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다. 제2사단은 1917년 10월 제1차 세계대전기간 중 창설되었으며, 머리에 깃털장식을 한 인디언의 옆모습을 사단마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닉네임도 ‘인디언 헤드’라고 불리고 있다.

제2사단은 산하에 제9, 제23, 제38보병연대를 기간부대로 하여 주로 미 제9군단에 편입, 전투를 치렀다. 제2사단은 1950년 7월 23일 일부의 단위부대가 부산에 도착했으며, 동년 8월 24일 전후 사단이 도착하여 제24사단의 일부와 함께 낙동강에서 전투를 시작한 후 1951년 1월 31일 원주에서 중공군과 전투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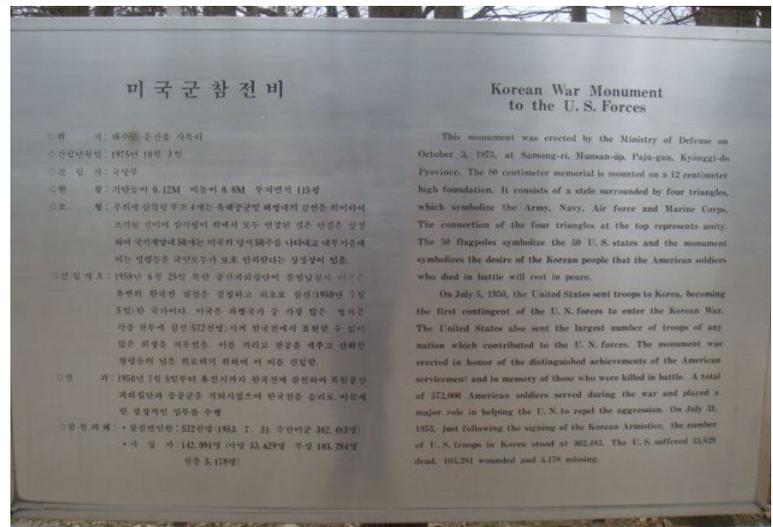
또한 제2사단은 1950년 초 최초로 KATUSA를 창설한 사단으로,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1954년 9월 미 본토 조지아주 피트 루이스로 철군하여 1957년까지 그곳에 뿌리박고 있었다. 그 후 1958년 3월 사단 병력을 대폭 증강시켜 1965년 7월 미 제1기병사단과 임무를 교대하라는 명령에 따라 재차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한편 제2사단은 1970년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던 제7사단이 철수한 이래 한국에서 유일한 전투부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세 차례 우수부대 표창을 받을 만큼 한·미 군사관계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군이 보유 중인 육군 현역사단은 대략 10개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작전단위로 전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단은 유일하게 미 제2사단뿐이다.

제2사단 병력은 한국군 제5군단과 제6군단 중간지역, 즉 북쪽의 임진강과 한탄강, 남쪽의 한강, 동쪽의 북한강과 각 하천지역에 둘러싸인 전역에 주둔하고 있다. 제2사단은 판문점 경비와 임진강 정면을 주로 경비하고 있지만, 비무장지대(DMZ)에는 직접 병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2사단은 서울을 중심으로 근접경로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재차 전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제2사단과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른바 인계철선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

참고로 UN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전투기념비 가운데 경기도

지역에 건립된 기념비들을 화보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3> 경기도 문산에 건립되어 있는 미군 참전기념비



<그림 2-4> 미 제2사단 Red Cloud의 마크가 새겨져 있는 참전비



<그림 2-5>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지평리 전투 참전기념비



<그림 2-6> 경기도 오산의 기념비 : 1950년 7월 5일 UN군 선봉대인 미 제24사단 소속 제21보병부대 및 제52 야포대대 소속 1개 중대로 편성된 스미스 전투부대 406명의 장병들이 북한군을 상대로 최초로 벌인 전투와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는 기념비.



<그림 2-7> 미 제2사단 6.25참전비

2. 전후 복구와 한국군 증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최고 32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파견했고, 미군 및 UN군의 운영비와 한국군에 대한 직접 군사원조비로 모두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전비를 쏟아부었다. 또한 미국은 전쟁기간 동안 한국군에게 연간 3~4억 달러에 달하는 직접적인 군사물자 원조도 했으며, '상호방위원조법'에 의해 1,500만 달러에 달하는 물자 및 교육원조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전쟁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비교적 적은 전비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한편 미국은 한국군을 대폭 증강시키는 비용도 부담했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한국군은 10만 명에 채 미치지 못하다가 3년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60만 명이 넘는 대군으로 성장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군대를 증가시키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UN군사령관에게 이양된 상태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군대증강을 꾀할 수도 없었다.

본격적인 한국군 증강은 1952년 이후에야 가능했다. 동년 3월 미 8군사령관인 밴플리트(J.A. Van Fleet)는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군 증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것은 동년 5월에 새로 부임한 클라크(M. W. Clark) UN군사령관에 의해 본격 추진되었다. 그는 동년 6월 한국군 9만 2천 명의 증원과 2개 사단 증편안을 미 합참에 건의했는데, 그 중 9만 2천 명의 증원안은 7월에 허가되었다. 이어서 10월 말에는 한국군을 12개 사단과 6개 독립연대로 증강시키고, 육군과 해병대의 병력상한선을 46만 3천 명으로 늘리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출범한 뒤인 1953년 1월에는 2개 신규사단의 창설이 승인되었고, 4월에는 병력상한선이 52만 5천 명으로 늘어났다. 마침내 5월에는 최종안이 확정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한국 육군을 1953년 8월까지 20사단으로 확장하고, 군단을 2개에서 6개로 증편하여 추가로 창설되는 사단을 지휘하며, 육군 병력상한선을 65만 5천 명으로 늘린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1953년 말까지 한국군 위주의 전투준비태세를 완료하고, 1954년 중반까지는 미군 4개 사단과 2개 군단의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1954년에 체결된 '한·미 합의의사록'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계속했다. 1950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군사원조를 살펴보면, 무상군원(無償軍援)으로 군원계획이 54억 7천만 달러, 국제군사교육훈련이 1억 7천만 달러였으며, 유상군원(有償軍援)으로는 해외군사판매 50억 5천만 달러, 상용판매 14억 3천만 달러, 해외군사판매 차관 23억 5천만 달러 등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초까지 군사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무상군원은 1977년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후

‘한국군 현대화계획’의 재원 중 1/3 정도는 미국의 해외군사판매 차관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한국이 자체 충당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차관 역시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미국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1986년으로 공식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일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군 전력 증강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는 1960년대 말까지는 미국이 거의 전적으로 부담했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토지를 무상으로 공여하고, 그에 부수되는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을 면제시켜 주는 정도의 부담만 졌다. 이러한 부담은 1966년에 체결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토지와 시설 등의 부동산을 제공하고(SOFA 제2조), 그 이외의 미군 유지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SOFA 제5조 1항).

그런데 1969년 ‘닉슨 독트린’ 선언과 함께 미국은 한국에 대해 공동방위를 위한 비용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토지와 시설 이외에 공동방위를 위한 직접적 비용 지원을 한국측에 요구한 것이다. 1974년 ‘연합방위증강사업’을 시작하면서 미국은 한국이 연합방위시설에 공동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한국은 전쟁 예비탄약 및 미군 전용탄약의 저장·관리를 맡게 되었고, 전투력 증강에 필요한 군사시설의 건설을 지원하였다. 1976년부터는 ‘주한 미 합동군사지원단’의 운영비도 부담했으며, 1983년 이후부터는 ‘한·미 연합사령부’와 ‘한·미 연합야전사’의 운영비의 일부도 부담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등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적 능력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자 미국은 한국에 대해 본격적인 비용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무역과 재정분야에서 쌍둥이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인건비 외의 주둔비용, 즉 운영 및 유지경비를 의미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하라고 한국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그 결과 한국은 1989년에는 4천 5백만 달러, 1990년에는 7천만 달러를 연합방위증강사업과 군수분야 사업에 지원하였다.

3. 닉슨독트린의 발표와 미 제7사단의 철수



<그림 2-8> 1967년에 촬영한 푸에블로호 사진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124특수부대 대원으로 구성된 31명의 무장 게릴라가 한국군 복장을 하고 서울에 침입했다. 이들 무장공비들은 청와대를 기습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28명이 우리 군과 경찰에 의해 사살되고, 2명은 다시 북으로 도주했으며, 김신조 1명만이 생포되었다. 1월 23일에는 원산 앞 바다 16해리 공해상에서 활동 중이던 미 해군정보함 푸에블로(Pueblo)호가 북한군에 의해 나포됐다. 선체는 북한에 압수당하고 승무원 82명과 유해 1구만 236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푸에블로호는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동경 127° 54.3', 북위 39° 25')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의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되었다. 이때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원산 해안 기점으로 12마일을 벗어나는 공해라고 주장하며 승무원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제7함대의 구축함 2척을 출동시켰다.

동년 12월 23일 미군 육군 소장 길버트 우드워드(Gilbert Woodward)가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푸에블로호의 북한 영해 침입 및 첩보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와 사과하는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해결되었다.¹⁾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듬해인 1969년 7월 25일 미국의 닉슨(Richard M. Nixon)

1) 푸에블로호는 현재 평양의 대동강변에 전시되어 있으나, 미국 해군은 현재 푸에블로호를 취역함정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선체를 미국에 반환할 것이라는 언론기사가 한때 보도되기도 했다.

대통령은 꺾에서 ① 동맹국들과 체결한 조약상의 책무를 지키고, ② 맹방의 자유 또는 미국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핵우산을 제공하며, ③ 기타의 침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자위(自衛) 노력에 의거한다는 내용의 미국의 새로운 대아시아 기본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어 미국 정부는 1970년 2월 18일 공포한 ‘외교교서’를 통해 “아시아의 방위는 1차적으로 아시아 국가 자신이 저야 한다.”는 위의 전략을 전 세계에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때부터 이 전략을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은 ① 미국과 동맹한 나라들과의 협력, ②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라에 대한 군사적 대결의 감행, ③ 평화를 위한 교섭의 중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항목은 동맹국들의 자조(自助)와 미국 지상군 부담의 경감을 강조한 것으로, 단순히 베트남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후 미국 역대 정권의 기본전략으로 이어졌다.

‘닉슨 독트린’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 주둔 미군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아시아지역 주둔 미군은 1969년 초의 72만 7,300명에서 1971년 말 28만 4,000명으로 감소했다.

<표 2-1> 아시아지역 주둔 미군의 감축상황(1969-1971)

구 분	1969년 1월	1971년 12월	감축분
베트남	549,500	159,000	390,500
한 국	63,000	43,000	20,000
태 국	47,800	32,000	15,800
일 본	39,000	32,000	7,000
필리핀	28,000	18,000	9,100
합 계	727,300	284,000	443,300

출처: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 Report of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C.: G.P.O, 1972, p. 50.

‘닉슨 독트린’에 따른 미군의 감군정책으로 인해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는 한국이었다.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는 이미 존슨(Lindon B. Johnson) 행정부 시절부터 한반도에서의 단계적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연구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닉슨 대통령은 1969년 2월 이 연구를 계속 진행시킬 것을 승인하였다. 이듬해인 1970년 3월 닉슨 대통령은 이

러한 국가안보회의의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또한 주한 미국대사인 포터(William Porter)의 자문을 거친 후 ‘국가안보 결정 비망록 48호(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48)’를 발령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으로부터 미보병 1개 사단 2만 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곧바로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다만 로저스(William Rogers) 국무장관과 레어드(Melvin Laird) 국방장관이 미국 내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조금씩 언급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 7월 6일에야 미국은 포터 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러한 미국측의 통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당시 주한미군 규모 6만 3천 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할 때 적정 규모이며, 아직 5만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돼 있는 상태에서 미군 2만 명을 갑자기 철수시키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 1개 사단의 철군을 일방적으로 운운하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비취볼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미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군이 이루어질 경우 정일권 국무총리 내각이 총사퇴한다는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완강했으며, 대신 미국이 한국군 현대화계획을 위해 향후 5년간 15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 1971년 2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간에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군 현대화의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발표가 있었다.

결국 1970년 10월 15일 주한미군 사령부가 경기도 운천에 있는 미 제7사단 제1여단 사령부인 캠프 카이저(Camp Keiser)를 폐쇄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철수계획은 진행되었다. 당시 한국에 주둔한 미 지상군은 1개 군단, 2개 사단 규모였다. 그러나 1개 사단이 철수하면 군단사령부가 유지될 리 만무했고, 1971년 7월 미 육군 제1군단이 해체되었다. 제7사단이 철수하되 산하의 포병과 탱크장비를 이양 받아 한국군에 배속시켜 한·미 제1군단 혼성사령부를 만들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미군 감축에 따른 병력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서부전선의 미 보병 제2사단을 후방으로 돌려 북한군과 직접 대치하는 휴전선의 지상방어 임무는 한국군이 전담토록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1971년 3월 말까지 미군은 휴전선 일대에서 철수를 완료하였고, 대간첩 작전지휘권을 비롯한 모든 지역의 방어책임을 한국군에 이양했다. 이로써 한국군은 공동경비구역(JSA) 주변 500m를 제외하고 18년 만에 처음으로 155마일 휴전선 전체의 방위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미군 철수시 사전 협의조항’을 무시

한 채 일방적으로 1971년 3월 동두천 및 포천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7사단 병력 약 2만 명을 철수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은 4만 3,00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철군결정으로 우리 정부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으며,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국토방위를 위한 핵무기 개발과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추진에 앞서 국내의 정치적 안정과 자신의 정치권력 강화를 위해 ‘10월 유신’을 단행하게 되었다.

미 제7사단의 철수·해산과 3개 공군비행대대의 철수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따라 최전선에 배치되었던 미 제2보병사단의 후방이동 배치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2사단이 후방으로 이동배치되었다고 해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미군은 비무장지대의 최전방으로부터 물러났을 뿐, 여전히 서울 북방에서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대신 한국과 미국은 연합방위체제의 일환으로 ‘한·미 제1군단’을 창설했다. ‘한·미 제1군단’은 예하에 미군부대 없이 한국군 제1군단, 제5군단, 제6군단을 작전통제하면서 과거 미 제1군단이 지키던 서부전선에 대한 방어를 담당했다. 1973년 3월에는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한국군이 모두 철수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군이 서부전선에 대한 방어를 포기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동년 7월 제3군단을 창설했다. 그 후 한국군 제3군단은 문산지역을 방어하는 한국군 제1군단을 작전통제하고, ‘한·미 제1군단’은 한국군 제5군단과 제6군단을 작전통제하는 것으로 임무가 분담되었다.

한편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 한국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카터(Jimmy Carter)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정책 때문이었다. 1976년 카터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무렵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감정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 한국에서는 1972년 이후 유신체제가 형성되어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억압하는 반인권적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미국민의 감정이 호의적이지 않았다. 또한 1971년 주한미군 철수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핵개발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러자 1977년 초에 출범한 카터 행정부는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선거 공약이었던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정책화하기 시작했다. 카터 대통령은 동년 1월 26일 ‘대통령 검토 비망록(Presidential Review Memorandum)’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예비계획을 작성토록 지시했다. 그 후 동년 5월 5일에는 ‘대통령 명령(Presidential Directive)’을 통해 철수일정이 공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1978년까지

미 제2보병사단의 1개 전투여단 6,000명을 즉각 철수시키고, 이어서 1980년 6월 말까지 두 번째 여단과 모든 비전투병력(9,000명)을 철수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잔여 병력과 미군사령부 그리고 핵무기의 완전철수는 198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계획은 동년 7월 26일에 개최된 제1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당시 브라운(Harold Brown) 미 국방장관의 언명으로 한국에 공식 통보되었다.

그러나 카터의 철군안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남침위협에 시달리던 한국 정부의 반발은 물론, 일본의 불안감도 극도로 높아졌다. 브라운 국방장관, 밴스(C. Vance) 국무장관 등 카터 행정부 내의 고위관리들뿐만 아니라 미 의회 의원들, 언론, 군부도 카터의 철군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당시 미8군 참모장이었던 싱글러브(John Singlaub) 소장은 ‘워싱턴 포스트’지의 인터뷰에서 카터 대통령의 철군정책에 노골적으로 맞서다가 본국으로 소환되고 말았다.

카터의 철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소련의 극동함대가 급속도로 증강되고 있고, 북한군의 전력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강하며 진진배치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1978년의 미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였다. 아울러 미 제2사단을 재배치하고 그들의 장비를 한국에 이양하는 데 모두 15~24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철군정책은 급속히 힘을 잃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카터 대통령은 1979년 2월 9일 “북한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작업이 끝날 때까지 철군계획을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고, 동년 7월 20일에는 결국 1981년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중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카터 행정부의 철군정책은 1978년 3천여 명의 미 지상군만 철수한 채 종료되고 말았다.

4. 도끼 만행사건의 발생과 미군의 적극 대응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45분경 관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북한지역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유엔군측 제3초소 앞에서 미군 장교 2명과 사병 4명, 한국군 장교 1명과 사병 4명으로 이루어진 11명의 한·미 장병들이 5명의 한국인 노무자들의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호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느닷없이 북한군 30여 명이 나타나 “가지치기 작업을 중단하라”고 억지를 쓰고 시비를 걸었다. 그리고 이들은 도끼와 쇠파치로 미군 장교 2명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9명의 한·미 장병들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한편, 유엔군 트럭 3대와 초소를 모두 파괴하는 등의 만행을 자행해 세계를 다시 한 번 놀라게 했다.



<그림 2-9>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도끼 만행사건 당시의 현장사진

현장에 있던 한·미 양국 장병들은 무방비상태로 이 만행에 대항할 여유가 없었으며,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일단의 한국군 장병들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에는 북한군이 도망간 후라 손쓸 틈이 없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포드(Gerald R. Ford) 대통령과 키신저(Henry A. Kissinger) 국무장관은 북한의 폭력 도발행위를 결코 묵인할 수 없는 만행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책임을 북한이 져야 한다.”는 매우 강경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주한 미군사령부는 전투 준비명령인 ‘데프콘 3(Defence Condition 3: DEFCON)’를 발동하였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밤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오키나와 등지의 F-4 전폭기 1개 대대(약 25대)와 미국 본토의 아이다호(Idaho)주 ‘마운틴 홈(Mountain Home)’ 기지에 있던 최신예 F-11 전폭기 1개 대대(약 15대) 그리고 일단의 해병대를 한국에 급파했다. 또한 8월 20일에는 미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미드웨이호와 레이저호를 한국 해역으로 급거 출동시키는 등 강력한 군사적 응징태세를 취하였다.

북한의 김일성도 8월 19일 오후 5시를 기해 북한군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북한군 전 부대에 전투태세 돌입명령을 하달하였으며, 북한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번 사태는 미국측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이다.”라며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하고 나왔다.

1968년의 ‘1.21사태’때 청와대 뒷산까지 무장공비가 침투했던 사건을 아주 위협적으로 여겼고, 또 같은 해 1월 23일의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 미국이 아무런 보복

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종이호랑이란 소리를 들어서서는 안 되며,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미 양국의 합동작전을 통한 보복을 미국측에 제의하는 등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박정희 대통령 및 한국군 수뇌부와 협의한 끝에 8월 21일 오전 7시 ‘데프콘 2(전쟁 돌입상태)’ 하에서, 백악관이 직접 명령을 내려 ‘도끼 만행사건’을 초래한 문제의 미루나무 절단작업을 단행케 하였다. 미군은 만일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조금이라도 대항할 경우에는 즉각 개성과 연백평야까지 진격하는 국지전계획까지 세워놓았었다.

미국은 미루나무를 베는 동안 해군 기동부대와 비행편대 등과 함께 병력을 한국에 집결시키는 등 군사력을 과시했다. 이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베트남전에서 사용했던 무장 헬리콥터 ‘건쉽(Gunship)’ 26대와 F-4, F-111 등 전투기 그리고 괌에서 온 B-52 전략폭격기 3대 등이 공중을 순회했고, 한·미 양국군으로 구성된 300여 명의 긴급 반격부대가 유엔군측 작업과정을 엄호하였다.

이러한 한·미 양국의 초강경태세에 북한의 김일성은 인민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8월 21일 스틸웰(Richard G. Stilwell) 유엔군 사령관 앞으로 사상 처음 사과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처럼 북한군에 의해 자행된 ‘도끼 만행사건’은 한·미 양국과 북한 간에 많은 군사적 긴장을 초래한 끝에 결국 김일성의 사과로 막을 내렸다. 유엔군과 북한군 양측은 사건현장인 관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둘로 분할, 경비한다는 데 합의하고 서명함으로써 사건을 매듭지었다.

제 4 절

주한미군의 역할 변환과 재배치

1.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정책 변화

한·미 동맹관계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오늘날 세계는 전통적 군사위협 외에 대량살상무기, 테러, 재해·재난, 기후 변화, 에너지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사전략의 개념, 전력의 구조와 규모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정착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되었고,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을 두고 포괄적 전략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다양한 미래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발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양국은 상호 협의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평화 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작전,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동북아 군사정책을 재검토한 내용으로는 1990년 4월 발표된 「21C 아시아·태평양 전략보고서(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EASI)」와 1992년 8월 위의 보고서를 수정한 EASI II가 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하여 미국은 역내 세력으로 계속 잔류한다. ② 탈냉전의 국방체제 구축과정에서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적당한 수준의 책임 분담을 고려한다. ③ 향후 미국은 해군력 증강과 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군 및 지상군을 계속 배치한다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 7월 동경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밝힌 ‘신태평양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의 내용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주요 이해관계를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국 방위공약의 지속적 실천과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과 미국 간의 안보협력관계의 재확인, ②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억제, ③ 공동안보에 대한 도전을 논의할 수 있는 다자간 안보대화 및 지원, ④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지원 등이다.

사실상 클린턴 행정부의 동북아정책은 역대 행정부의 정책과 비교해 볼 때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미국은 먼저 정치이념적인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산시키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 보호를 위해 동북아지역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유지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체제를 확산시킴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클린턴 행정부의 동북아정책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와의 쌍무적 안보동맹을 기초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진배치전략에 급격한 수정을 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방위비 삭감차원에서 아·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액을 대폭 증액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은 안보공약의 준수와 한국 민주주

의 절차의 제도화에 쏠리게 되었다. 클린턴(B. Clinton) 행정부는 양자의 연계를 중시한 데 비해, 한국은 양자의 분리를 희망했다. 안보공약의 준수와 관련하여 미국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① 상호 양해 하에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 방위조약을 통해 양국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 ② 한국군의 현대화노력을 지원하여 한반도 군사균형을 유지하는 것, ③ 방위에 관련된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 ④ 연례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을 지속하는 것, ⑤ 유엔군으로부터 한국군으로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대비하는 것, ⑥ 한·미·일간 합동방위문제를 개선하는 것 등이었다.

또한 2001년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안보의 핵심적 목표를 미국 중심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 유지와 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두게 되었다. 국가가 아닌 비국가적 행위자의 테러행위는 종래의 봉쇄나 억지와 같은 전통적 전략개념으로는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안보관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사건은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선제공격을 정당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공식화한 ‘부시독트린(Bush Doctrine)’은 기존의 동맹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자체의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 계획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핵무기의 국제적 관리체계인 NPT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량살상무기의 거래 차단과 이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WMD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등을 주요 정책으로 표방하였다.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일차적 관심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만한 경쟁대상국이 등장하는 것을 저지함과 동시에, 기존의 동맹관계를 축으로 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2001년 9월에 발표된 「4개년 국방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에서는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D. Rumsfeld)로 대변되는 강경파의 국방전략과 지침이 소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안보공약의 이행과 미군의 전진배치가 기본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압박하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짓고, 「핵태세보고서(NPR)」에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강경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미국은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 용산기지의 이전, 미군 주력부대의 한강 이남 배치를 포함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결정하였다.

한편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는 2003년 3만 7,500명에서 2004년 3만 2,500명, 2007년 2만 8,50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었으며, 2008년 말에는 2만 5,000명까지 감축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상은 2008년 4월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한·미동맹의 조정을 통해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역할과 협력범위가 확대되었고, 호혜적이고 성숙한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한·미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긴밀한 군사안보 공조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08년 4월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2009년 6월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청사진을 담은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였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통해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할 것임을 명문화하였다.

북핵 및 탄도미사일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 원칙하에 양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 해적, 조직범죄와 마약, 기후 변화, 빈곤, 인권침해, 에너지 안보, 전염병과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논의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2009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만나는 ‘2+2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7월 한·미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양국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의 독자적 대북 금융제재 강화, 대규모 한·미 연합해상훈련 실시 등 외교·국방분야에서 대북 압박전략을 시행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였다.

앞으로 양국은 한·미동맹을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역내 기구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태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2.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전략(GPR)’

냉전시기 동안 미국은 수많은 군사전략들을 발표해 왔지만, 부대편성이나 배치 등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탈냉전시기인 1990년대 중반부터 구체적인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과 동시에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전략’이 발표되어 군사적·전략적·정치적으로 산유국들이 많이 산재하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지역으로 이동하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미국의 국방비 지출 또한 냉전시기보다 탈냉전시기에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전략(Global Posture Review: GPR)’은 미국 정부가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는 해외주둔 미군의 전면적인 개편계획을 말한다. 이른바 ‘럼즈펠드 독트린’으로 불리는 GPR은 2001년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출범 이후 럼즈펠드 국방장관 주도로 검토돼왔으며, 2003년 11월 부시 대통령이 GPR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GPR의 핵심은 21세기 새로운 테러와 안보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해외주둔 미군의 기동성과 첨단 전투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외주둔 미군 병력을 재배치하고 기지를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GPR은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과 같은 새로운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전략으로, 함대와 전투기, 병력의 수를 중심으로 한 정태적 전력개념에서 벗어나 미군 체계를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용산과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도 GPR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냉전시기 동안 미국의 군사전략은 공산주의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력 중심의 재래식 작전으로서, 병력의 수적 우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의 군사변환은 걸프전쟁(1990), 코소보전쟁(1999), 아프가니스탄전쟁(2001), 이라크전쟁(2003)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병력의 수적 우세보다는 무기의 질적 우세로 정보기술의 발달과 최첨단 무기를 이용하여 소규모의 병력들이 비대칭적으로 병행하여 신속하게 전쟁을 끝내버리는 군사변환체제를 이루었다.

또한 냉전시기에 있어서 미군기지는 공산주의국가인 소련, 중국, 동유럽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등에 미군병력을 주둔시켜 이 상태로 별 이동변화 없이 50년간을 지속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변환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전략(GPR)’에 따라 설정된 해외주둔 미군기지는 기능별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첫째,

전력투사기지(Power Projection Hub: PPH)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전개할 수 있는 중추기지로, 미국 본토와 괌 그리고 하와이 등 해외보다는 주로 미국 내 기지에 적용된다. 둘째, 주요 작전기지(Main Operation Base MOB)는 대규모 병력이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상설기지로, 동맹국과 초현대식 지휘체계를 갖추는 형태를 말한다. 주둔 병사들은 2~3년 장기복무를 전제로 가족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기지이다. 셋째, 전진작전지점(Forward Operating Site: FOS)은 유사시 증원을 전제로 한 기지이다. 넷째, 안보협력대상지역(Cooperative Security Location: CSL)은 소규모 연락요원만이 상주하는 지역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 주요 작전기지 또는 전력투사기지와 주요 작전기지의 사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일부가 신속대응군으로 운용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는 ① 주한미군의 일부가 신속기동군으로 운용되더라도 그로 인해 한반도 안보가 위협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며, ② 주한미군 병력이 이동할 때에는 한·미 양국의 사전 협의제도를 명문화해야 하고, ③ 한·미 연합군의 해외파병은 절대로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2003년 9월 호언(A. Hoehn) 미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는 다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전략(GPR)’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미군이 영구 주둔하게 될 전력투사기지는 미국 본토와 괌, 영국”이며, “일본, 한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에 있는 대규모 미군기지는 축소되고, 대신 중동, 중앙아시아, 남유럽, 아프리카지역에 최첨단 무기와 장비를 갖춘 소규모 병력만 주둔하는 전진작전기지를 설치하여 언제나 신속하게 병력을 순환할 수 있는 미군기지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일본 도쿄에 주둔하고 있던 요코다 미군기지의 제5공군과 제13공군을 통합하여 미국령 괌으로 이전하였고, 2003년 11월 25일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을 4년(2004~2008) 동안 단계별로 12,500명을 감축시켜 괌과 남중국해,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 국가들로 재배치시켰다. 또한 한국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2004년 10월 22일 주한미군 2개 헌병소대 70명을 이라크로 차출하였고, 이듬해인 2005년 1월 6일 주한미군 350명과 구난헬기 8대를 남중국해 인근국가로 이동시켰다.

또한 주한미군의 재편으로 한국방위의 역할을 한국군에게 이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신속대응군으로의 역할로 바뀌어 중동에서 벵골만을 거쳐 말라카해협에서 오키나와까지 해상수송로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해양안보구상

(RMSI)이나 미사일방어(MD) 계획에 참여케 하였다.

한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전략(GPR)’에는 주한미군의 감축 및 후방 분산 배치도 포함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이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의 지휘체계는 현재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제2사단사령부 등 3원화 다층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은 주한미군의 재편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 미태평양사령부에 대한 대규모 재편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이러한 미태평양사령부의 재편 목적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을 가장 신속적인 해외파견군으로 전환해 동북아 및 중동지역에서 유사시 작전을 신속 전개할 수 있는 기동군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 일환으로 지난 2004년 미 제2사단 2여단을 차출하여 이라크에 파병한 바 있다.

이처럼 미태평양사령부가 재편될 경우, 주한미군사령부 및 미8군사령부는 하와이로 이전되거나 축소 또는 해체되어 미래형 거점 사령부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미 제1군단사령부는 일본으로 옮겨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의 미군에 대한 지휘권도 주일미군사령부나 미 제1군단사령부가 맡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결국 미국이 한국에서 한 발을 빼게 되는 결정적 상황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3.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중요 내용

21세기에 들어와 한·미 양국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재배치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주한미군기지과 훈련장은 대체로 인구가 밀집되고 도시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경기 북부와 서울 인근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환경문제 유발과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된 민원의 소지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지와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주한미군의 주둔 및 훈련여건도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군과 기지조정에 관해 협의해왔다. 즉, 한·미 양측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설치된 한·미합동위원회 및 그 산하의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통해 각 해당 사안별로 주한미군 공여토지의 반환 및 이전 협의를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²⁾을 구상하게 되었다.

2)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란 전국의 주한미군 시설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시설과 토지를 반환하는 계획을 말한다. 2001년 11월 제3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LPP 협정은 2002년 1월, LPP 개정협정은 2004년 12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그런데 주한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크게 ‘용산기지 이전계획’과 전국에 산재한 나머지 미군기지를 재배치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1987년에 검토를 시작하여 미국측에 기지이전을 제안하였다. 미국 역시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을 개선하고, 한·미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측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하여 양국 정부는 1988년 3월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1990년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위한 한·미 양국간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이전비용과 세부 이행에 대한 합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보류되다가 2001년 12월 협의를 재개하여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시 용산기지의 조기 이전에 합의하였고,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본격 추진되었다.

당초 국방부는 한·미 양측이 이전원칙에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일정을 2003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2003년 4월부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를 가져왔으나, 양국간의 입장차이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2004년 1월 6차 회의에서 현안들을 최종 마무리하였다. 6차 회의의 결과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와 UN군사령부를 포함한 서울 주둔 미군기지가 2007년까지 모두 평택과 오산으로 이전된다. 단, 용산기지 내의 드래곤 힐 호텔과 한·미 업무협조단원 50명을 남기고, 연합사령관 및 부사령관의 연락사무소를 국방부 인근에 새로 마련키로 합의했다.

2004년 1월까지 반환된 곳은 미8군 골프장 부지 9만 평과 아리랑택시 부지 3천 2백여 평이다. 골프장 부지는 1990년에 체결한 한·미 합의각서에 따라 1991년 우리 정부에 반환된 뒤 현재 용산가족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리랑택시 부지는 2003년 3월 합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03년 12월 반환되었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에 30억~40억 달러(4조~5조 원)가 소요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이 가운데 대부분을 한국이 지원하는 방안에 접근, 우리측 부담분은 30억 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사업단의 김기수 단장은 2010년 12월 23일 “미국의 사정으로 사업기간과 비용이 2011년 초에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단장은 “우리측이 들여야 하는 비용은 협상 중인 관계로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반환기지 매각비용으로 이전비가 충당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000년 3월 주한미군과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협의한 이후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왔고,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상의 해당 기지에 대한 공동실사 등의 실무준비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01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로 미국측과 공식적인 합의도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여 미국측이 처음에 제기한 17개 기지 외에도 서울, 인천, 부산 등의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도시발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통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반환하도록 협의를 진행했다.

2001년 11월 제3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토지 관리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했고, 2002년 3월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합의된 내용은 미측이 28개 기지 및 시설 214만 평과 훈련장 3개 지역 3,900만 평 등 4,100여만 평을 반환하는 대신에, 한국측은 신규 토지 154만 평을 공여하고 한국 정부가 이전을 요구한 9개 기지 대체시설을 건설 및 제공하며, 한국군 훈련장을 미군측과 공동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 7,400여만 평의 주한미군 공여지는 2011년까지 43% 수준인 3,200여만 평으로 조정되며, 주요 기지는 41개에서 23개 기지로 통·폐합한다는 것이었다.

4. 제2차 LPP에 대한 협의사항

‘연합토지관리계획’은 한국 내 미국 군대와 시설 그리고 구역을 통합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2002년 10월에 국회 비준동의 후 발효되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후 대한민국 토지의 균형된 개발과 효율적 사용을 지향하고, 주한미군 부대방호 향상 및 균형적인 준비태세 증진을 위하여 미 제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 주한미군 감축 추진 등에 따른 군소기지의 통폐합 등을 위한 전면적인 기지체계 조정과 시기를 재검토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LPP 개정협정이다.

<표 2-2>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주요 개정내용

제1차 LPP (2002. 10, 국회 비준동의)	제2차 LPP (2004. 12, 국회 비준동의)
◎ 미국측 부지 반환 : 4,114만 평 - 28개 기지 : 214만 평 * 서울, 파주, 의정부, 인천, 부산 등 - 훈련장 : 3,900만 평 *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반환	◎ 미국측 부지 반환 : 5,049만 평 - 35개 기지 : 1,100만 평 * 미 2사단 7개 부대 추가(886만 평) - 훈련장 : 3,949만 평 * 미 2사단 훈련장 49만 평 추가
◎ 한국측 신규부지 제공 : 154만 평 * 의정부, 평택, 이천, 부산, 포항, 김천 등	◎ 한국측 신규부지 제공 : 362만 평 - 평택(서탄/팽성) : 349만 평 - 포항 10만 평, 김천 3만 평

LPP 개정협정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핵심권역 및 기지로 통·폐합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활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서울, 부산, 인천, 춘천 등 도심에 위치한 미군기지의 이전으로 도시발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누적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2007년 3월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종합계획'에 합의하였고, 동년 11월 평택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2010년 9월 현재 부지조성 공사와 도로·전기·가스·상수도 등 기반 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재배치지역의 이주민들을 위한 도로 개설, 상·하수도,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 편의 지원사업과 정부가 평택시의 종합발전계획을 지원하는 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반환 예정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3월 기존의 환경조사 절차를 개선한 '공동환경 평가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반환 예정기지 내의 환경오염을 치유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한 2020년을 목표로 주한미군의 복무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1~2년 근무하던 것을 가족과 함께 최대 3년까지 연장하여 근무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주한미군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주둔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부대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운영유지비의 절감이 가능하며, 21세기 양국 국민 간의 교류 증대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시행은 주한미군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훈련여건과 주둔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미군 관련 민원 및 지자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군소기지들을 폐쇄하여 전체 기지수를 축소하고 기지를 지역별로 대형화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장

.....
주한미군 주둔이
경기도에 미친 영향

제 3 장 주한미군 주둔이 경기도에 미친 영향

제 1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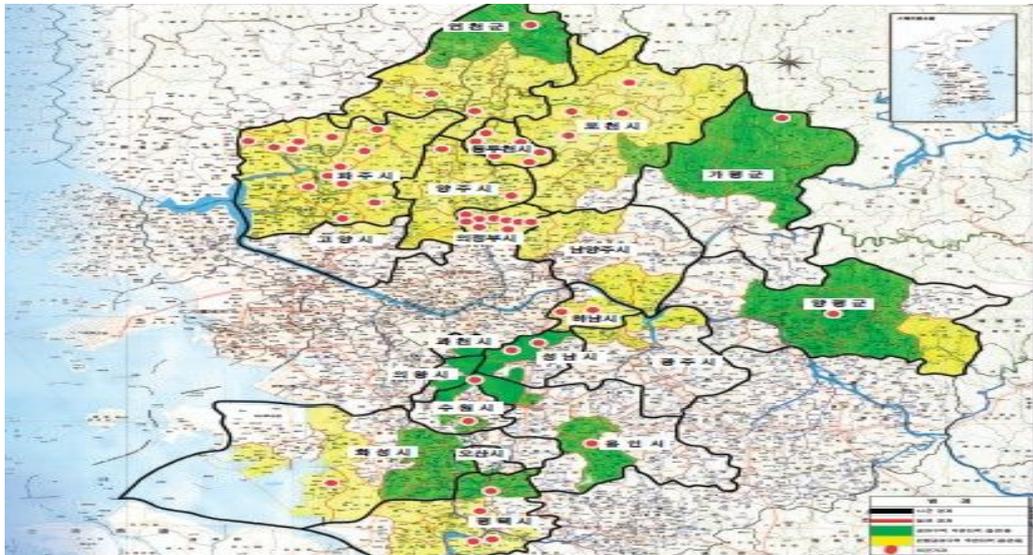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관계의 시대적 변천

1. 경기도내 주한미군 주둔현황

1) 경기도내 미군기지

경기도는 주한미군의 주력부대인 미8군 소속 제2사단의 사령부 및 예하병력과 미 7공군사령부가 있는 지역으로 주한미군 주둔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국 93개 미군기지 중 51개가 주둔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병력과 화력의 과반수가 포진해 있다. 특히 동두천시, 과천시, 의정부시, 평택시에 경기도내 주한 미군병력의 대다수가 집결해있다. 이밖에 하남시에 소규모 미군부대가 있으며 화성시 매향리에는 미 7공군의 공군 사격훈련장인 쿠니 에어 레인저 사격장이 포천시에는 미 제2사단의 사격 및 전차훈련장들이 있다.

<그림 3-1> 경기도 미군기지 현황(자료 : 경기도)



경기북부지역 중에서 파주시는 가장 많은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으로 공동경비구역경비대대를 포함하여 총 9개의 미군부대가 있으며 대부분의 부대가 미제 2사단의 지휘를 받는 대대급 및 중대급 부대로서 파주, 금촌, 문산 등지에 산재해 있다. 파주시에는 이밖에 대규모 사격훈련장인 불스아이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미군부대와 함께 지금은 모두 반환된 상태이다.

<표 3-1> 경기도내 주요 시군별 미군기지 및 반환현황 (2010현재)

시 군	기 지 명	소재지	면적(평)	반환여부	반환년도
의정부 (9개소)	캠프 에세이온	자금동	93,019	○	07.5.31
	캠프 홀링워터	의정부1동	72,027	○	07.5.31
	캠프 카일	금오동	43,912	○	07.5.31
	캠프 라파디아	의정부동	41,371	○	07.4.13
	캠프 시어스	금오동	39,076	○	07.5.31
	캠프 레드클라우드	가능동	252,889	미반환	(2011)
	캠프 스탠리	고산동	743,403	미반환	(2011)
	캠프 잭슨	호원동	496,711	미반환	(2011)
	캠프 콩코드	가능1동	3,083	해당없음	-
파 주 (13개소)	캠프 에드워드	월릉면	76,088	○	07.5.31
	불스아이 #1 훈련장		25,948,149	○	2005-2009.
	불스아이 #2 훈련장	적성면	1,702,584	○	06.9.11
	캠프 하우스	조리읍	192,392	○	07.4.13
	캠프 게리오웬	문산읍	86,254	○	07.5.31
	캠프 자이언트	문산읍	51,779	○	07.4.13
	캠프 스탠톤	광탄면	82,060	○	07.4.13
	캠프 보니파스(민통선)	군내면	43,491	○	07.4.13
	리버티 벨(민통선)	군내면	20,268	○	07.4.13
	캠프 그리브스(민통선)	군내면	71,614	○	07.4.13
	찰리 블록(민통선)	과주읍	8,464	○	07.4.13
	후리덤 브리지	장단면	17,466	○	07.4.13
파평산 ATC	천현면	49	해당없음	-	
동두천 (6개소)	캠프 님블	상패동	20,171	○	07.4.13
	짐 볼 스 훈련장	탑동동	3,613,823	○	05.9.2
	H-220 헬리포트	보산동	63,151	미반환	(2008)
	캠프 캐슬	동두천동	62,611	미반환	(2008)
	캠프 케이시	보산동	4,278,937	미반환	(2011)
	캠프 호비	광암동	4,251,417	미반환	(2011)
평택 (4개소)	평택 CPX에리어훈련장	송화리	132,368		(2008)
	오산 니아모	고덕면	738,966		(2008)
	캠프 험프리	대추리	1,506,068	해당없음	-
	오산에어베이스	서정동	2,170,630	해당없음	-

동두천시는 우리나라에서 2010년 현재도 주한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는 지역이고, 1952년부터 1970년대까지 미 제7사단이 장기 주둔하기도 했다. 동두천시에는 미 제2사단의 본체이자 주력부대인 캠프 케이시를 위시하여 캠프 캐슬, 캠프 호비, 캠프 님블, 그리고 짐볼스 훈련장 등 모두 6개의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으며 현재는 캠프 님블과, 짐볼스 훈련장 만이 반환된 상태이다.

의정부시에는 미2사단의 사령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비롯하여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캠프 에세이온 등 총 9개의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군부대가 이미 반환된 상태이다.

평택시는 미7공군의 사령부가 있는 K-55기지(오산 에어베이스)와 K-6기지(캠프 험프리) 등 2개의 주요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있다. 한·미양국이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기지부지용으로 평택지역에 349만평을 신규 공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평택지역에는 기존의 K-55기지(오산 에어베이스)와 K-6기지(캠프 험프리)외에 주한미군사령부,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추가로 주둔할 예정이며 미 국방부의 주한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한수 이북지역의 미2사단도 향후 평택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해 오고 미2사단 또한 평택지역에 재배치될 경우 평택지역에는 수만명의 미군, 미군가족, 미국 국적의 군무원들이 거주할 전망이다.¹⁾

2) 경기도의 미군공여지 현황

미군공여지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한다. 미군공여지는 미군기지와 시설뿐만 아니라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용도별로 미군기지와 훈련장 등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 전용공여지, 사격훈련장 안전지대, 미군 송유관, 수도관, 전선 및 기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지역공여지, 군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 사용권이 부여되는 임시공여지 등으로 구분된다.

미군공여지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 주한미군 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여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SOFA 제5조 2항은 ‘아무런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군의 사용을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를 대신해 해결해야 한다.

미군공여지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문제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도시계획 측면에서 기형적인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군기지가 대부분 도시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 및 교량의 건설, 건물신축 등의 세부사업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의 자연스런 발전방향을 왜곡시키며 공간적 비효율성을 유발하여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국적으로 주한미군에 공여된 시설과 구역의 면적은 SOFA가 발효된 직후인 1969년에는 277개 기지, 4억 2,644만평이었으나 1970년과 1972년 2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감소된 바 있고, 그 후에는 소폭의 상승과 감소를 겪으면서 2006년 현재 약 7천6백만 평에 이르고 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의 공여지 면적이 222.66km²로 전국의 공여지 면적 251.48km²의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전북 10.38km², 경남 4.78km² 순으로 미군공여지는 대부분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 내에서는 파주시의 공여지 면적이 93.56km²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동두천 40.63km², 평택 26.87km², 화성 23.79km²순으로 이들 4개 지역의 공여지 면적이 경기도 공여지 면적의 83%, 그리고 전국 공여지 면적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두천의 경우는 공여지 절대 면적에 있어서도 파주에 이어 전국에서 2번 째로 큰 규모일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5%로 비율면에서는 압도적인 1위 규모이다. 도시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그것도 시내의 알짜배기 땅을 미군공여지로 내어주고 있는 곳이 동두천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공여지 면적이 28.82km²에 불과하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동두천시 한 지역에서만 40.63km²의 지역이 공여되었다는 것은 지난 50여년간 동두천 지역과 그 주민들이 부담한 안보비용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동두천 내 주요 미군 기지 가운데 Camp Casey 한 곳의 면적만 해도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군공여지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국 광역시 전체의 공여지 면적보다도 크다.

<표 3-2> 특별법 적용 공여구역 현황

시도 시군구	행정구역 면적 (km ²)			공여구역 면적		
	총면적 (A)	대상지역 면적(B)	비율 (B/A)	평	km ² (C)	비율 (C/B)
전국	99,953.84	11,951.70	12.0%	76,072,461	251.48	0.3%
부산	763.46	58.68	7.7%	386,259	1.28	0.2%
대구	884.46	193.71	21.9%	1,241,988	4.11	0.5%
인천	994.12	43.49	4.4%	158,531	0.52	0.1%
광주	501.41	10.38	2.1%	369,728	1.22	0.2%
대전	539.64	86.57	16.0%	40,359	0.13	0.0%
경기	10,182.51	5,199.11	51.1%	67,354,487	222.66	2.2%
수원시	121.05	37.94	31.3%	327,633	1.08	0.9%
성남시	141.82	66.55	46.9%	545,335	1.80	1.3%
의정부시	81.60	81.60	100%	1,785,491	5.90	7.2%
평택시	453.07	354.35	78.2%	8,128,032	26.87	5.9%
용인시	591.45	165.42	28.0%	36,146	0.12	0.0%
화성시	688.23	426.69	62.0%	7,197,915	23.79	3.5%
파주시	672.56	672.56	100%	28,300,658	93.56	13.9%
포천시	826.41	773.66	93.6%	4,606,672	15.23	1.8%
하남시	93.07	75.95	81.6%	374,416	1.24	1.3%
양주시	310.24	310.24	100%	3,417,894	11.30	3.6%
동두천시	95.66	95.66	100%	12,290,110	40.63	42.5%
양평군	877.73	549.47	62.6%	5,324	0.02	0.0%
연천군	695.61	695.61	100%	336,391	1.11	0.2%
가평군	843.39	489.00	58.0%	2,470	0.01	0.0%
강원	16,873.25	2,867.52	17.0%	964,194	3.19	0.0%
충북	7,431.44	62.25	0.8%	5,202	0.02	0.0%
충남	8,599.67	290.55	3.4%	12,508	0.04	0.0%
전북	8,052.66	119.59	1.5%	3,140,036	10.38	0.1%
경북	19,025.96	2,154.18	11.3%	938,451	3.10	0.0%
경남	10,520.89	602.44	5.7%	1,445,653	4.78	0.0%
제주	1,848.19	263.23	14.2%	15,065	0.05	0.0%

자료: 행정자치부

2. 시대별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관계

1) 지역사회와 미군과의 밀월

미군은 한국 전쟁시 북한의 남침에 맞서 우리를 도와 피를 흘리며 싸워주었고 휴

전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또한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인 1950~60년대 주한미군은 군수물자를 비롯한 각종 물품의 유입, 고용 창출, 지역사회의 재건지원 등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시기부터 전쟁 피난민들에게 임시거처 및 미군식량물자를 제공하는 등 피난민구호에 적극적이었던 미군은 휴전 이후 가옥보수 및 건설, 전쟁고아 보호 등 전후 한국사회의 피해복구와 재건을 위해 체계화된 대민지원정책을 전개하였다. 휴전 후 주한미군은 「Armed Forces Assistance to Korea Program」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병원, 학교, 고아원, 공공건물, 일반주택 등의 건설을 지원하였는데 휴전 후 첫 2년 동안에만 총 3천여채의 건물이 새로이 지어졌으며 여기에 들어간 재원은 1955년 달러가치기준으로 약 4천 8백만 달러에 달했다.²⁾ 이러한 미군의 모습은 당시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매우 고맙고 또 친근한 존재로 비쳐졌다. 물론 이 시기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1957년 양주에서 피엑스 물품을 운반 중이던 열차 내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을 진압하던 중 한국인이 미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듬해에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기지 근처의 주민들이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 매를 맞거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술집 여종업원이 말을 듣지 않거나 서비스가 나쁘다고 매를 맞거나 삭발을 당하는 등 보고되지 않은 가혹행위도 반복되었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최우선을 두었던 당시 정부정책과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상당부분 의존해야 했던 취약한 국가경제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과 부작용들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림 3-2> 미군과 고아



<그림 3-3> 미군이 한국지역사회를 위해 제공한 소방차

2) 불편한 동거

197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시절에 도움을 받았던 미국에 대한 의리가 점차 퇴색하고 미군으로 인한 불편한 현실을 반영하는 실리가 힘을 얻게 된다. 즉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어렵고 암울했던 시절을 막 빠져나와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불편한 시기에 주한미군과 지역주민들은 함께 살게 된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에 주었던 경제활성화, 생필품 유입, 지역사회 재건 지원 등과 같은 여러 긍정적인 측면들의 효과가 많이 감소하여 국가안보라는 명분 이외에는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갈등을 봉합할 별다른 유인책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1966년부터 1969년까지는 휴전선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긴장이 새롭게 고조되는 시기로 휴전선 방위 및 북한침투의 방지는 한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에게도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주한미군의 지역사회정책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주한미군의 대민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급속도로 그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1971년 미7사단이 2만여명의 병력과 함께 철수하면서 휴전선의 최전방 방위는 한국군 제1군이 맡고 미2사단은 한국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미2사단은 최전방 근무시기와는 달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병력이동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각종 군사훈련은 기지부근 지역주

민들에게는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 훈련장을 오가는 전투차량이 일으키는 교통사고에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전 국민이 예민하게 반응하였고 훈련의 피로를 풀고자 주말에 외출 나온 병사들이 일으키는 말썽이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비쳐지는 주한미군은 병력이동 및 군사훈련으로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집단 그리고 틈만 나면 매춘으로 시간을 보내는 집단이었던 것이다. 한국전쟁기간 및 전후 한 동안 지역사회에게 보여주었던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모습은 사라지거나 잊혀지고 이제는 부정적인 모습이 더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 시기에든 한국인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대적인 북한의 존재였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의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한국전쟁도발과 그 후 계속되는 남침위협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했고 또한 미군철수 논의를 금기시켰다.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국민들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제외하면 해도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즉각 체포되는 상황이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시민의식이 제고되면서 주한미군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더 이상 덮어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지난날 권위주의적 정권이 고압적인 언론검열을 통해 주한미군과 관련된 한국인들의 불만을 잠재웠다면, 1980년대 들어 미국을 한국에서의 권위주의적 통치의 공모자로서 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더욱이 1987년 여름, 민주화운동의 성공은 계속되는 경제발전과 함께 한국인들의 민족 자긍심과 자신감을 북돋웠으며 오랫동안 논의가 금기시되어 온 주한미군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그들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980년대는 한국인들이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던 예전의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반면에, 주한미군은 한층 더 군사적인 업무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시기였다. 이 시기 주한미군의 지역사회정책은 거의 기능하지 않았고 주한미군과 지역사회는 상호간에 이방인으로서 별개의 집단으로 존재할 뿐이었다. 즉 주한미군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섬에 불과했다.

3) 갈등의 표출

미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의 계속되는 남침위협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위협이 더 이상 절박한 것이 아니라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1990년대까지 주한미군은 북한의 또 다른 남침을 저지하려는 자신의 사

명을 잘 수행해 왔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위협을 성공적으로 잘 막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미군주둔의 명분과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주한미군과 한국사회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³⁾ 여기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시민의식의 제고와 함께 국내·외 환경변화도 크게 작용했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 그리고 소련의 해체와 함께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자본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간의 대결구도가 그 의미를 크게 상실했으며 또한 남북한간의 화해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도 예전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과거 억압적인 권위주의 정권과 미국과의 연계성에 대한 의구심도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또한 반미성향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주한미군과 한국사회의 갈등은 한층 더 크게 증폭되었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일련의 남북교류사업은 남과 북이 협력하여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한국사회에 가져다주면서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는 점점 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외관상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이 주둔으로 인한 불편함을 계속 감내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진보적 성향의 일부시민단체와 급진적인 정치세력들은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2002년 6월 발생한 여중생 전차사망사건과 이에 연루된 두 명의 미군병사들의 재판(무죄방면)결과를 보면서 미군군사법정이 한국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인들은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된다.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만은 크게 증폭되었으며 주한미군과 한국사회간의 갈등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여중생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작된 집회는 시간이 갈수록 반미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반미시위는 미국과 주한미군에게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의 일부 강경파 정치인과 관료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섭섭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둘러싸고 이주대상 원주민과 우리나라 국방부와 의 갈등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치사회세력의 가세로 이념적 대립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결론적으로 2000년 이후 현재까지는 적어도 한국사회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과의 갈등 및 긴장관계가 가장 극대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여 백

제 2 절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1. 결산동 - 육지속의 외로운 섬 -

1) 인걸이 태어날 수 있는 인걸지형(人傑地形)

서울에서 불과 약 30km 떨어져 있을 뿐인데 오지마을로 불리는 곳이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속한 결산동 마을이다. 결산동(결산마을)은 미2사단 주력부대가 주둔하는 캠프 케이시 영내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는 곳으로, 2010년 MBC의 6.25특집 MBC 프라임 「육지속의 섬마을 결산동이야기」가 방영되면서 세상의 이목을 받게 되었다. 이 마을은 1952년 미군이 주둔하면서 땅과 집을 싼값에 징발당한 주민들이 부대 뒤로 물러나 살면서 생긴 ‘육지 섬’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는 동두천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리운다. 현재 52세대 151명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소요산에 들어앉은 계곡 마을로, 마을의 지형이 풍수지리로 보아 산수가 수려하고 소요산의 정기를 받아 인걸이 태어날 수 있는 인걸지형(人傑地形)이라 한 데서 걸뢰(傑山)로 불리었으며 시내 중심지와 인접해 과거 제법 융성했었으나 한국전쟁을 거치며 이 마을의 운명은 급반전됐다

2) 육지속에 갇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군이 동두천에 최초로 주둔하기 시작한 1951년부터 육지속의 섬으로서의 결산동의 역사는 시작됐다. 한국전쟁의 전선이 고착되면서 미군 보병 제24사단이 주둔하게 되자 동두천시의 42%에 달하는 논, 밭, 임야 심지어 집까지 정부에 징발되어 미군에게 제공됐다. 1952년에 결산동 일대에 미군이 1,415만 m² 규모의 공여지를 확보해 ‘캠프 케이시’를 짓는 과정에서 마을 땅은 헐값에 징발당했고, 시내와 통하는 길이 기지에 가로막히면서 결산동은 육지속의 섬이 되었다. 이로 인해 결산동 주민들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립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마을의 입구와 남쪽은 미군부대가 진을 치고 있어 통행이 불가능하고 동북쪽은 소요산 줄기가 가로 막고 있다. 이 마을이 외부와 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마을 뒤로 나 있는 산길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군부대를 경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 만만치 않다. 산 속 길을 이용하면 걸어서 3시간, 차를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소요된다. 70년대 중반 기지통행허가증(패스)이 나오기 전까지 주민들은 3시간 정도 산길을 걸어 시내로 나가야 했다. 지금도 이 길은 좁고 포장도 안 돼 겨울철 눈이 내리면 빙판으로 변하고, 여름에 비가 오면 패어진 길에 바위가 빠지고, 불어난 계곡물로 발이 묶인다. 어쩔 수 없이 미군부대를 통과해야 한다. 미군부대를 통과하려면 미군기지 관리부대가 발급한 통행허가증을 출입할 때마다 제시해야 한다. 미군은 70년대 중반 통행허가증(패스)을 처음 발급하면서 손바닥만한 파란색 통행증 10개를 마을 공용으로 내줬다. 주민수가 230명쯤 되던 시절이라, 급히 외출할 일이 생기면 패스를 찾아 이집 저집 뛰어 다녀야 했다고 한다. 개인이 통행증을 갖게 된 것은 그로부터 3년쯤 후였다. 통행허가증은 3년마다 재교부 받는데 미군이 내준 통행허가증이 없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 손님을 맞으려면 마을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인 미군 부대 정문으로 마중 나가 직접 확인을 받아야 드나들 수 있고 외부 성묘객들도 보름 전에 신청해야 한다. 사실상 '도심 속 민간인 통제구역'이다.

지난 2004년까지만 해도 미군부대에 비상경계명령이 내려지면 바깥으로 출근도 못하고, 귀가도 못하는 진기한 풍경이 이뤄졌다. 언제 출동할지도 모르는데 민간인이 출입하게 되면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금도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미군이 아침운동 하는 시간엔 급한 볼 일이 있어도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할 수 없다. 미군들이 달리기 등 아침운동을 하는데 위험요인이 된다면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연한 한국 땅에서 이런 불편을 60년 가까이 겪으며 살고 있다. 바로 경기도 동두천시 결산동 이야기다.

<그림 3-4> 동두천시 결산동 마을 모습



캠프호비 내 결산동 마을위치



결산동 마을 모습

3) 지금은

그러나 이런 불편을 딛고 지난 반 세기동안 마을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미군과의 기묘한 동거속에서 이웃 공동체라는 독특한 생활방식을 일궈내며 자신들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결산동에 사는 52세대 150여명 중 외부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출퇴근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이 어렵고, 문화·복지·의료혜택을 보려면 이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모두 시내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곳에는 주로 고향을 떠날 수 없는 노인들이 다음 세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결산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낡고 오래되었다. 마을의 안길도 좁고 위험하다. 이곳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당시 공무원의 출입마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건축자재 운반에 불편이 많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 마을은 농지도 적고 마땅한 소득원도 없다. 현재 이 마을에는 교회와 절이 각 1개씩 있고 경로당을 겸한 마을회관이 하나 있을 뿐이다. 한때는 이곳에도 학교가 하나 있었다고 한다. 동두천초교 결산분교인데 1967년부터 1999년까지 11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되어 지금은 빈 터로 남아 유적비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이 마을에는 학생 3명(초1, 중1, 고1)이 부모의 도움(매일 차로 통학시키고 있음)으로 미군부대 밖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

2004년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를 점유하던 미 2사단 기지의 평택 이전계획이 확정되면서 결산동이 겪어온 질곡의 역사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결산동 주민들은 조금만 참으면 그동안 겪었던 모든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경기북부 미군부대들이 2011년까지 모두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부대 평택 이전이 2016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은 눈앞이 캄캄하다. 지난 50년 이상 겪었던 불편을 앞으로도 계속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살아서 자유롭게 시내를 다닐 수 없을 것 같은 걱정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결산동 주민들과 동두천시민들은 미군부대 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2011년까지 완료하고,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으로 반세기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보상이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2. 기지촌 - 잊고 싶은 현대사의 그늘-

1) 기지촌의 형성과 매춘의 역사

한국전쟁이 끝나고 분단과 함께 한반도 곳곳에 미군기지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한국 현대사에서 지우기 어려운 흔적이 남는다. 미군부대 주변에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여성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기지촌이 바로 그것이다. 기지촌은 그 생계수단이 여성의 성매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상당부분이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지촌 경제의 핵심은 미군과 기지촌 여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그들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던 시절이었다. 미군과 기지촌 여성들, 그리고 외국인 전용 술집인 클럽들과 미군부대 피엑스에서 흘러나온 외제품 판매책, 암달러 상, 포주, 그리고 미장원, 세탁소, 양복점, 양품점, 사진관, 기념품점, 초상화점, 당구장, 국제결혼 중개업 사무소 등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특수한 형태와 기능을 갖는 기지촌이 형성되었고 기지촌 경제가 정착되었다.

기지촌 경제의 많은 부분이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상 미군을 대상으로 한 매춘은 그 곳에서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으며, 이는 파괴된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택한 기지촌 여성들의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미군주둔의 유지와 달러획득을 위한 한국 정부는 기지촌에서 이루어지는 매춘에 눈을 감았고,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젊은 미군병사들은 본능적 욕구를 해소하였다.

한국전쟁 후 기지촌 매춘의 역사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⁴⁾ 첫 번째 시기는 한국전쟁 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역에 미군 주력부대들이 진주하고 미군기지촌이 형성되면서 기지촌 매춘이 정착되고 확산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기지촌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는 미국정부의 원조와 함께 한국경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당시 기지촌여성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가난한 기지촌 여성들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에 의해 미국으로 초청된 가족들은 미국이민 1세대가 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한국정부가 기지촌매춘에 깊숙이 개입하고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서 기지촌 매춘은 공창의 성격을 띠게 된다. 1971년 미군당국은 미군들이 불결한 환경 속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기지촌 정화사업을 요구했다. 미군 철수설이 나오던 60년대 말 6만 2천여 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이 4만 5천여 명으로 줄어 불안해하던 한국 정부는 미군의 이런 정화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

고 청와대 직속기구로 ‘기지촌정화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기지촌정화위원회는 그 전까지는 보사부에서 개인병원에 의뢰하거나 미군들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성병진료를 매주 실시하도록 하고 전국의 기지촌에 성병진료소와 성병관리소를 세운다. 당시에는 보건소도 많지 않았고 약품도 턱없이 부족한 시절이라 인원과 관리는 한국정부에서, 약품은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한·미 합동관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모두 미군들의 편의와 건강을 위한 사업이었을 뿐 기지촌여성들의 환경과 생활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성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지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병관리소라는 일종의 수용소로 보내졌다. 당시 대표적인 성병관리소는 동두천에 있는 ‘몽키하우스’를 들 수 있다. 몽키하우스의 정식명칭은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다. 왜 몽키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미군들이 영창을 속칭 몽키하우스라고 부르면서 연유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원숭이 집이라는 이름에서 원숭이가 철창 속에 갇힌 모습을 연상한다면 당시 기지촌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의 편견 속에서 외면당했고 인간이하의 멸시를 당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도 동두천시 소요산입구에 가면 성병관리소 ‘몽키하우스’가 폐허가 된 채 흉물스런 모습으로 기억하기 싫은 역사의 현장으로 남아있다.



현재의 몽키하우스



몽키하우스 내부 모습

<그림 3-5> 동두천시 몽키하우스의 모습

세 번째 시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전통형 매춘’과 새로운 ‘산업형 매춘’이 혼재한다는 점이다. 해방 후 1970년대 이전까지 한국사회는 산업화과정에서 급속히 도시화되면서 농촌이 급속히 해체되는 변화를 겪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무작정 상경을 하였

고 역전에서부터 인신매매조직에 걸려들면서 매춘을 하게 되는 것이 1970년대 초반까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농촌의 해체과정에서 절대적 빈곤 때문에 고향을 떠나 서울이나 도시로 가서는 미군기지촌이나 특정지역에서 집단을 이루며 포주와 연결되어 행해지는 매춘을 ‘전통형 매춘’이라고 한다.

반면 산업형 매춘이란 산업화 과정에서 남녀의 고용차별이 빚어낸 음성적 매춘을 말한다. 1970년대에 들어 한국경제의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정책으로 여성노동력이 과출부, 행사, 하청 등의 비공식적 노동부문 등에 제한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접객서비스업 부문의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면서 새로운 직종인 호스티스, 마사지걸, 안마사, 면도사 등에 여성이 대거 고용되면서 간접적 매춘행위를 하게 된다. 이처럼 외관상으로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사업장 내의 노동자이지만 실상은 매춘여성과 다를없는 신종직업을 ‘산업형매춘’이라고 부른다. 당시 산업형 매춘의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매춘관광을 꼽을 수 있다. 80년 말부터 기지촌 매춘은 과거 전통적인 매춘과는 전혀 다른 산업형의 성격을 띠게 됐다. 유입되는 여성들도 생계형보다는 호스티스, 마사지걸 등 서비스형 종사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들은 철저히 ‘돈’에 따라 움직여 이직도 심했다. 이러한 산업형 매춘이 기지촌에 출연하면서 기지촌의 매춘대상이 미군은 물론 한국남자들에게까지 확대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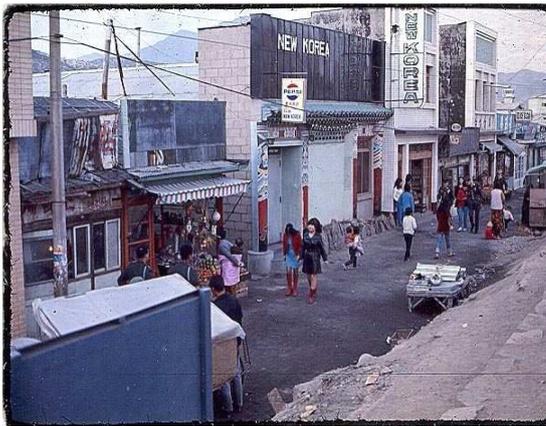
네 번째 시기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기지촌은 주로 외국인 여성들에 의한 매춘이 주를 이룬다. 90년대 접어들면서 미군이 기지촌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윤금이씨 사건 등이 터지자 위험하고 보수가 적은 기지촌에서 한국 여성들이 급격히 떠나는 현상이 빚어졌다. 따라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게 된 포주들은 이 공백을 필리핀과 러시아 여성들을 통해 메워나가면서 외국인여성들에 의한 성매매가 시작되었다. 외국인여성들에 의한 성매매는 기지촌 여성들의 수요를 채우는 것 이외에도 한국정부와 미군, 그리고 기지촌의 포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기지촌내에서의 한국여성들의 사건 사고가 문제였던 한국정부로서는 외국인 여성들의 기지촌 유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으며 포주입장에서는 기지촌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들은 한국보다 가난한 국가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한국여성들보다 적은 급여를 줄 수 있고, 도움을 청할 가족과 친구도 없는 외국이어서 통제가 훨씬 쉬웠다. 그러자 기지촌을 찾는 한국 남성들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생겨났고, 이러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한국 남성의 선호는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되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시키게 되었다.

2) 경기도내 기지촌

경기도는 전국 34개의 미군기지 중에서 65%에 달하는 22개의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는 18개의 미군기지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미군에 의한 범죄나 기지촌의 인권침해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경기도 내에서 기지촌은 동두천시와 평택시, 의정부시, 과주시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 기지촌들은 그 지역마다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경기북부지역에서 성매매하면 떠오르는 마을이 있다. 경기도 과주시 과주읍 연풍리 300번지 일대, 지금은 사라져 버린 기지촌의 전설 용주골이다. 용주골은 인근 의정부와 동두천처럼 미군부대에 의존한 기지촌으로 급성장한 마을로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인신매매당할 때 가장 먼저 끌려오는 곳이었다. 당시 기지촌 여성들에게 의하면 이곳에 한번 끌려오면 죽거나 다른 기지촌으로 팔려가지 않는 한 벗어날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한다. 클럽보다는 포주집들이 많이 있었고 아가씨들을 사려는 다른 지역의 포주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용주골에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들이 자리잡은 것은 한국전쟁시기인 1951년도 늦여름, 당시 전쟁포화 속에서 온전하게 보전된 4~5채의 가옥을 중심으로 성매매여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에는 주한미군 2사단이 과주읍에 주둔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점과 클럽이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1956년 미군휴양시설이 세워져 서부전선에 근무하던 미군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1960년대 성매매여성의 숫자는 1,000여 명이 넘었다고 한다.⁵⁾

1960년대 용주골에서는 ‘용주골 사람치고 포커 못치는 사람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며 주말이면 과주지역 주둔 미군들뿐만 아니라 서부전선의 모든 미군들까지 몰려들면서 용주골은 흥청거렸다. 매일 아침마다 취한 미군들이 흘린 달러를 줍기 위해 골목을 누비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기지촌과 함께 흥청거린 용주골 경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1969년 닉슨독트린 발표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1971년 문산에 있던 미2사단이 동두천으로 이전하면서 그렇게도 악명 높았던 용주골 기지촌은 쇠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지촌여성들은 새 삶을 찾지 못하고 대부분 동두천의 기지촌으로 대이동을 하였다.



보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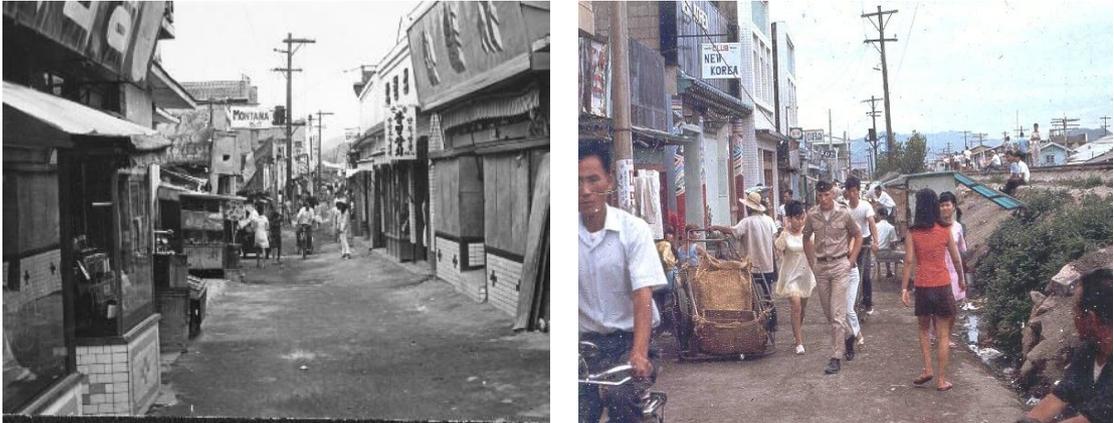
용주골

〈그림 3-6〉 기지촌의 모습 (사진: 동두천시민연대)

기지촌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름은 동두천이다. 동두천 출신들은 기지촌이 부끄러워 고향인 동두천을 거꾸로 '천두동'으로 말한다는 웃지 못할 애환이 있을 정도로 동두천은 기지촌의 대명사였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3분의 1이 동두천을 중심으로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두천 기지촌의 경우에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기지촌의 모습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동두천시에는 보산동과 광암동(일명 턱거리) 2개의 기지촌지역이 있는데 새움터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에는 612명의 여성들이 67개의 업소에서 일하거나 미군과 계약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한국인 여성비율은 17.4%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여성들은 외국인 여성들이다. 보산동 기지촌은 동두천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지촌으로, 미 보병 2사단 사령부인 Camp Casey 정문 앞 길 건너에 철도길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주한미군 중에서도 학력이 낮고 범죄자가 많은 보병 사단의 사병을 상대로 하는 기지촌이기 때문에, 미군범죄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이다. 1992년에는 윤금이씨가 이곳에서 미군에 의해 살해당했으며, 그 이후로도 이기순씨, 신차금씨, 이정숙씨 역시 이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살해되거나 의문사로 발견되었다. 주한미군이 감소하면서부터는 클럽과 기지촌여성들의 수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새움터 조사에 따르면 보산동에는 2001년 당시 약 51개의 클럽과 7곳의 포주밀에서 각각 425명과 10명의 여성들이 일하였으며, 약 40여명이 미군과 계약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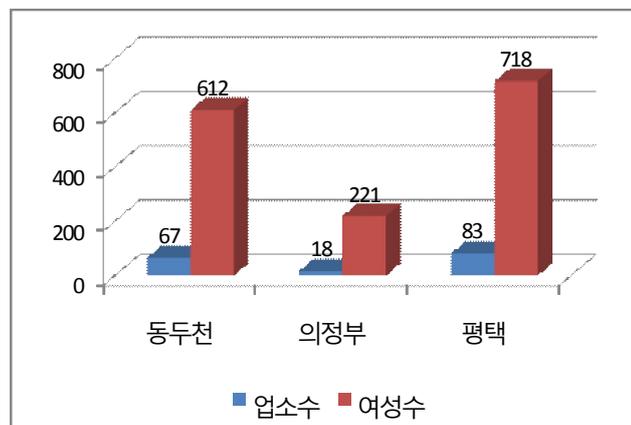
의정부의 대표적인 기지촌은 캠프 스탠리(Camp Stanley)앞의 고산동 기지촌과 캠프 레드클라우드(Camp Red Cloud)앞의 가능동 기지촌(일명 노랑다리)이다. 고산

동기지촌은 미군기지가 1970년 파주 봉일천에서 고산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되었다. 이곳은 예부터 배가 많이 생산되던 지역으로 배나무가 많다하여 배벌, 뺏벌로 불렸다고도 하며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빠져 나갈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뺏벌’ ‘뺏벌’마을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의정부시 고산동 116번지로 마을 입구에는 기지촌 여성상담센터인 두레방이 있다.



<그림 3-7> 60년대 보산동거리 (사진: 동두천시민연대)

논밭이 있는 평범한 시골마을이었던 이곳은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1970년대 기지촌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의 수가 1,000명이 되었다고 한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미군기지주변의 경기는 침체되어있다.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빠져나가고 동남아시아 계통의 여성이나 러시아 여성들이 대체 고용되어 있으며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수도 감소하여 현재는 154명의 여성이 13개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3-8> 업소수 및 여성수 현황

평택시의 기지촌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평택시 신장동 지역의 기지촌의 경우, 1990년대 들어 그 규모가 계속 커져가는 산업화된 기지촌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기지촌의 형태를 모두 정비해서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나, 동두천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눈에 띄지 않으며 미군과 한국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유입되는 여성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고립된 분위기의 다른 지역의 기지촌과는 달리, 평택시 신장동의 기지촌 주변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이나 립살롱들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안정리의 경우에는 이런 유흥업소들이 미군전용 클럽들 사이에서 함께 영업을 하면서 거대한 유흥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2002년 새 움터조사에서는 83개 업소에서 718명의 여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재는 1,243명의 여성들이 87개의 클럽에서 일하거나 미군과 계약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끝나지 않은 기지촌여성들의 삶

전쟁으로 너나없이 어렵고 힘들었던 60~70년대, 전쟁고아가 되어,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혹은 막연한 동경심에서 달랑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미군기지촌으로 뛰어든 꽃다운 여성들이 있었다.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여성들은 ‘양공주’, ‘양색시’라는 손가락질과 냉대속에서도 한국경제의 밑거름이 된 ‘달러벌이의 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 그들에게 남은 것은 늙고 병든 몸과 ‘양색시’, ‘양갈보’라는 세상의 차별과 멸시뿐이었다.

이제는 기지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도 많이 변화했다. 90년대 이후 서비스위주의 산업형 매춘의 확산과 2004년 이라크 파병으로 인한 미군 감소로 인해 파주, 동두천, 의정부 등 경기도의 주요 미군 기지촌은 규모가 축소되었고, 기지촌 주변 젊은 한국 여성들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미군을 상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한국인에서 필리핀,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으로 대체되었을 뿐 기지촌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오늘의 기지촌에는 번성기였던 60년대부터 그곳에 들어와 지금까지도 기지촌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양색시’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늙고 병든 기지촌 여성 출신 할머니들이 있다. 70년대 수천 명에 달하던 기지촌 여성들은 지금 모두 자취를 감췄고 현재 관계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기지촌 할머니들은 경기북부지역 일대에 53명이 그리고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70여명 등 지역별로 집단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지촌 여성이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할머니

들. 그러나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성매매 산업의 연쇄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몇 십년간 매춘에 종사하다가 나이가 들어 다른 생계대책이 없는 기지촌 여성출신 할머니들은 클럽과 거리를 돌아다니며 미군이나 클럽여성들에게 꽃이나 간단한 음식을 팔기도 하고, 거리에서 미군을 다른 매춘여성들에게 끌어다주는 펌프일을 하기도 한다. 이런 일조차 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구걸을 하거나 60이 넘는 나이에 술이나 약물에 취한 미군을 상대로 적은 돈을 받고 매춘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밤거리로 나온 나이든 여성들을 ‘히빠리’라고 부른다. 병이 들어 이런 일을 하는 것마저도 어려운 여성들은 돌봐줄 이 없는 전형적인 독거노인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여성들은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도움을 줄 가족이나 친구도 없이 외롭게 늙어가고 있으며 병원 한번 못가보고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남은 것이라곤 쇠약해진 육신과 지긋지긋한 병마 뿐. 차가운 쪽방에서 죽음만 기다리는 기지촌 할머니들의 질곡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진행 중인 것이다.

기지촌 여성이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소외되어 온 기지촌 할머니들. 이들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고, 나라가 가난하고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시대가 낳은 비극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의 개인적 선택을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봐 주고 조금은 헤아려 줄 수 있는 세상의 작은 관심과 이해일 지도 모른다.

3. 혼혈아 - 피를 나누는 이방인-

1) 내 어머니는 양색시

몇 년전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계 혼혈인 하인스 워드가 북미프로미식축구리그(NFL) 슈퍼볼 최우수선수(MVP)가 되자 그의 성공담이 큰 화제가 되었던 때가 있었다. ‘다른 인종의 피가 섞인 사람. 다른 인종의 장점이 합쳐진 사람.’ 하인스 워드가 내한할 당시 혼혈 가수 인순이의 눈물을 배경으로 한 TV광고 카피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성공한 혼혈 스타에게 환호를 보내는 우리 사회의 이면에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냉대와 괘시를 받는 평범한 혼혈인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특히 한국전쟁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피부색 등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온 슬한 ‘미운 오리새끼’를 탄생시켰으며 이들은 무수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고통을 겪으며 성

장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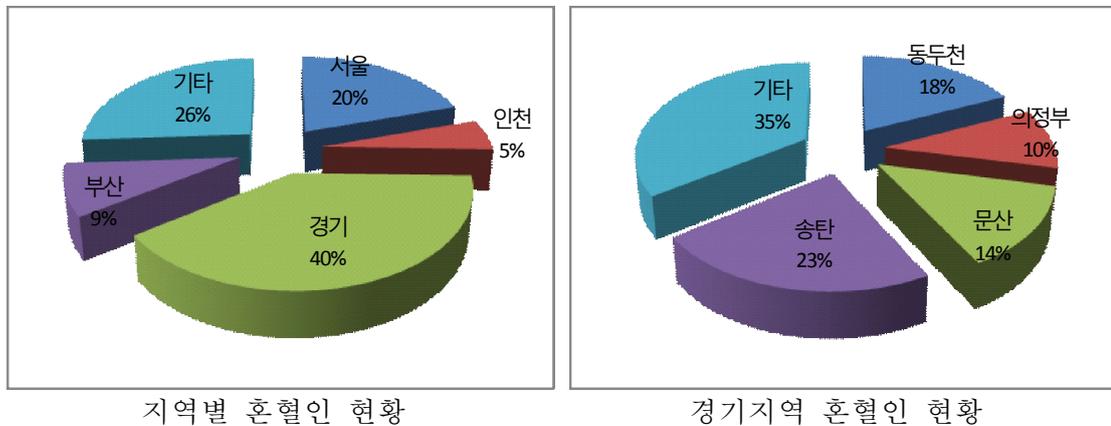
동두천에서 열네 살 때까지 살면서 “사춘기 이후 내 안에 큰 의미로 자리 잡은 동두천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쓰고 싶었다”는 작가 김중미씨는 그의 자전적 소설 「거대한 뿌리」에서 혼혈인에 대한 사회의 멸시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도대체 튀기가 뭐 어쨌다는 거야? 물건은 미제라면 사족을 못 쓰면서, 왜 우리 같은 애들은 싫어해?”(150쪽) “동두천은 말이야. 사람들을 떠나보내지 않는 곳이야. 여기 살던 사람들에게 동두천은 특별한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중략)왜냐하면 동두천은 현실이거든. 이 땅 어디를 가도 지워버릴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189쪽)

한국의 혼혈아동은 대부분 미군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계 혼혈인이며 그 출생은 1947년부터였다. 혼혈아동의 출생은 8·15해방 후의 미군정과 6·25로 인한 UN군의 참전, 그리고 미군의 계속 주둔으로 인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그 원인이다. 전쟁시에는 참전 외국군인의 한국여성에 대한 강간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매매춘이 혼혈인 출생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전쟁 이후에는 기지촌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매매춘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 혼혈아동의 문제는 혼혈아동이 출생시부터 외모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기지촌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서 비롯된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성매매의 결과물이자, ‘아비 없이’, 더군다나 ‘아비가 한국 남성이 아닌’ 기지촌 혼혈인이라는 인식이 혼혈인들을 여전히 차별과 고통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혼혈인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정서적으로 고립감과 소외감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것이다. 같은 말을 쓰며 같은 땅에 살면서도 같게 느껴지지 않는 이들은 ‘피를 나눈 이방인’으로 취급될 뿐이었다.

국내 혼혈인의 수가 어느 정도이며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어 있지는 않다. 한 혼혈인 관련 단체는 국내 혼혈인 수를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했으나 다른 한 혼혈인 단체는 최소한 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짐작할 정도로 편차가 크다. 다만 1983년 보사부(현재의 보건복지부)에서는 ‘50년대 동란으로 미군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라는 규정 하에 전쟁혼혈아를 1982년 당시 1,500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들은 호적상에 등록된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혼혈인들이 사회의 냉대 속에 버려진 채 신음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펄벅재단이 1994년 보사부에 제출한 보고서 『혼혈인 지역별 분포현황』에 따르면 전체 혼혈인 수는 625명으로 이중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혼혈인의 수가 375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체 혼혈인의 약 40%인 249명의 혼

혈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도에 문산, 동두천, 의정부, 송탄, 평택 등 미군주둔 기지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기지역 중에서도 송탄에 57명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큰 규모의 기지인 오산 미군 비행장이 주둔하여 넓은 기지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림 3-9> 혼혈인 현황

2) 혼혈아들의 삶의 질곡

한국 여성과 미군 남성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혈인의 경우 미국시민권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호적에도 등록될 수가 없었다. 한국 내 여성의 지위가 남성, 부계에 법적으로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에서는 1980년부터 혼혈인들이 어머니의 호적에 자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호적의 아버지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다. 결국 그들은 합법적 결혼이든 비합법적이든간에 아버지의 국적을 획득하지 못하고 모계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아예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국적도 없는 아동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혼혈아동들은 한 동족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한국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면서 심리적 고립감, 정서적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 때문에 혼혈아동과 그 어머니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기지촌을 중심으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기지촌에서 혼혈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half-perso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미국에도 한국에도 속하지 않는 반쪽 인생의 사람들이라는 자조적인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듯 하다.

2003년에는 혼혈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세상에 나왔다. 기

지촌 인권단체인 두레방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국내기지촌에 거주하는 혼혈인 50명을 면접·조사해 분석한 『기지촌혼혈인 인권실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혼혈인들의 73.3%가 어린 시절 피부색이나 외모적 특성으로 인해 놀림 받은 적이 있으며, 64.4%가 따돌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혼혈인이 61%나 되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교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는 청소년기에 혼혈아동들로 하여금 자칫 탈선의 길로 빠져들도록 유도하기도 하며 생계문제와 함께 학업을 포기하게끔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실제로 조사대상 혼혈인의 40% 이상이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학업포기 이유로는 절반이상이 '놀림 받기 싫어서'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혼혈인들이 구할 수 있는 직업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혼혈인들의 70% 이상이 일정한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단순노동이나 서비스 계통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출생과 피부색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의 차별로 인해 학교를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학력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도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혼혈인들은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심한 무기력과 심리적 장애를 느끼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혼혈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은 학교에서부터 직장, 결혼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혼혈인들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가학적인 차별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으로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혼혈인들의 57.8%가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하며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혼혈인도 전체의 42.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혼혈인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본래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강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혼혈인의 문제는 지금까지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오기는 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책이나 접근은 없었다. 현재까지의 혼혈인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국내의 사회복지사업기관을 통해 생계, 교육, 의료비 지원과 카운셀링, 레크레이션, 입양 및 이민, 직업훈련과 직장알선 등이다. 한국정부의 혼혈인 지원사업은 1978년부터 월정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그들의 최저 생활보장에 노력하여 왔으나 이러한 지원도 1998년 중단됐다. 1998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혼혈인은 이 제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혼혈인 관련 지원 정책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미국정부도 1982년 혼혈인 이민법이 통과되면서 혼혈인들의 미국으로의 이민을 공식적으로 허

용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1951년 1월 1일부터 1982년 10월 22일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만으로 한정하고 아버지가 미군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민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려는 혼혈인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제도적인 대책이나 뒷받침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혼혈인들이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 생겨난 시대의 희생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혼혈인에 대한 편견을 접고 그들을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의 따뜻한 마음일 것이다.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변해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어떤 피부색이든, 우리는 하나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4. 기지촌 여성운동

경기도 북부, 의정부에서도 외곽인 의정부시 고산동 116번지 속칭 뺨벌마을에는 두레방이라는 여성상담센터가 있다. 두레방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문혜림씨가 기지촌 여성들의 소외되고 억압된 삶을 지원하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86년 3월 의정부시 가능동 한미연합사 앞에 개원하였다. 두레방은 사회운동세력이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최초의 단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어떠한 사회운동도 있을 수 없었던 기지촌에 여성운동의 귀중한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기지촌 여성운동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두레방이라는 단체가 생기면서부터이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도 사회적 무관심과 멸시 속에서 기지촌 여성들 스스로를 보호하고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생적인 노력들이 있었다. 1970년대 한국정부는 보건소나 관청 같은 기존의 행정조직만으로는 기지촌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지촌에 자치회를 구성하고 자치회의 활동을 후원하였다. 물론 정부가 요구하는 자치회의 역할은 기지촌 여성의 성병진료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였다. 그러나 자치회의 임원 대부분이 기지촌여성들이었고, 기지촌 여성들이 자치회에 자신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면서 자치회의 활동은 기지촌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재활 지원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자치회는 미군범죄와 포주들의 횡포에 맞서서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목격자를 만나고 범인을 찾아내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경찰과 정부·재판부에 항의하였으며 포주들의 착취가 심해지면 기지촌여성들을 모아서 급여를 올리기를 위한 생존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치

적인 기지촌 여성운동은 1970년대부터 송탄과 군산 기지촌에서 활동해온 기지촌 성매매 여성 출신 김연자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기지촌 성매매 실태와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세상에 최초로 알린 인물이며 1971년 미군들의 화대 인하요구에 대항하여 시위를 조직하고 1977년 이복순 살인사건의 범인이 최초로 한국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도록 했다.

수십 년간 사회의 지원이 닿지 않는 기지촌에서 기지촌 여성들이 자치회를 통해 서로를 돕고 함께 공동체를 꾸렸던 이야기들은 눈물겹다. 한 성매매업소의 여성은 계를 조직해서 한 명씩 빚을 갚아 내보내주는 활동을 하였고, 80년대 ‘공병사업’을 진행했던 동두천 자치회는 빈 병을 수집하여 팔아서 빈곤한 기지촌 여성들의 방에 쌀과 연탄을 넣어주고 아픈 여성들을 치료해주는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초기모습



최근모습

<그림 3-10> 두레방 모습

김연자로 대표되는 기지촌 출신 여성들의 자치적인 활동 이외에 기지촌 여성운동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이 교회 여성운동이다. 교회 여성들은 1970년대부터 사회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성매매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이들의 역할은 선구적이었다. 앞서 언급한 두레방은 교회 여성운동 진영에서 만든 단체이다. 두레방은 개원 후 80년대 말까지 기지촌 여성들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에 알리고, 기지촌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도하였다. 두레방의 주요 사업은 상담, 영어교실, 공동식사, 탁아, 기지촌 활동, 성매매 여성 전업 사업 등이었다. 특히 1989년에는 순 우리말로 만든 무방부제 빵과 과자를 판매하는 두레방빵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는 우리 사회 최초의 성매매 여성 전업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두레방 상근 실무자들은 직접 빵을 들고 수요자를 일일이 찾아다녔으며 노태우 정권 시절 정부는 빵공장이 불법

이며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두레방을 감시하고 탄압하기도 했다. 두레방 빵은 기지촌여성들의 전업과 자립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기지촌여성들에게 전업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춘여성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90년대 들어 두레방은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기지촌활동’을 시작하였고, 대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였다. 대학생들은 두레방을 방문하여 활동하면서 기지촌 여성들의 실태를 경험하게 되었고, 기지촌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 기지촌 여성운동의 씨앗이 되었다. 두레방의 기지촌 활동은 기지촌 문제에 대한 의식을 사회 저변에 확대시켰다는 데서 의미가 있으며 두레방의 전업 활동은 국가의 강제수용 위주의 성매매 여성 정책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성매매 현장에서의 여성 인권 문제, 인신매매된 외국인 여성들의 긴급구조 활동과 법률지원, 국내외 인권·평화운동단체들과 다양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자원이 빈약한 여성운동이 전업 사업을 벌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교회여성 출신 활동가들과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두레방의 젊은 활동가들은 두레방을 떠나 새우터를 만들었다.

새우터는 1996년 동두천에서 처음 문을 열었으며,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본격적인 기지촌 여성운동단체로서 출발하였다. 새우터는 한국의 기지촌 여성운동 역량이 모아진 단체이며 철저하게 독자적인 조직이다. 새우터는 국내외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리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기지촌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현재 동두천, 문산, 의정부, 평택, 군산 기지촌의 기지촌 여성들과 아동들에게 자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동작업장,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보육지원, 기술교육 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자립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직업재활센터, 아동센터,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재활센터는 기술교육과 간단한 일거리 알선 등을 통해 탈매춘과 전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센터는 50여명의 기지촌 아동들에게 보육비, 방과후 공부방, 진학상담 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혼혈 또는 편모 아동들을 돕고 있다. 혼혈아동을 따로 격리하고 앓고 차별없이 교육해 자신감과 정체성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장기간 매춘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질병 및 범죄피해 등 여성들을 매춘에 얽어매는 요인들을 주로 상담하고 기지촌 여성과 아동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주고 있다. 그리고 혼혈아 등 기지촌 아동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대학진학

지원, 심리치유 상담 등도 진행하고 있다. 새움터의 출범으로 이제 한국의 기지촌 여성운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기지촌 여성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서서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선진적인 기지촌 여성들과 기지촌 여성운동가들의 노력이 있다.

제 3 절

주한미군과 지역경제

1. 외화획득 및 생필품의 유입통로

1) 달러의 젓줄

1960년대 초 경제재건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주한미군을 통해 배포된 물자와 무상원조는 거의 빈사상태에 허덕이던 한국경제를 소생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1956년에서 1957년 사이 3억 달러의 무상원조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소비자물가가 하락했던 사실에서 보듯 주한미군의 영향력은 한때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막강했다. 특히 전쟁의 폐허 속에서 너나없이 가난하고 살길이 막막했던 시절, 주한미군과 미군기지는 빈곤을 달래줄 유일한 존재이자 생존의 수단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먹고 살기 위해 기지촌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미군들이 나눠주는 음식물이나 심지어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찬반으로 끼니를 때웠고 살아남기 위하여 미군을 상대로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하였다. 기지촌 주변에는 제일 먼저 술집과 유흥가가 들어섰고 미군들과 주민들은 서로가 필요한 것을 교환하였는데 미군들은 달러와 같은 화폐기능을 가진 군표를 사용하여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풍부한 물자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한국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 심부름, 오락거리를 제공하였다. 합법적으로 미군 전용 술집들과 세탁소가 문을 열어 영업을 개시하였고 주변에 미장원과 옷가게 등이 들어섰으며 군부대에서 불필요하게 되어 불하된 물자를 거래하는 상점들도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비록 기초적인 농산품에 불과하였지만 미군부대에 납품하는 사업까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전쟁으로 활동이 거의 정지되었던 시장경제가 미군부대 주변을 중심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림 3-11> 1960~70년대 동두천에서 유통되던 미군 군표



특히 미군은 대표적인 기지촌인 동두천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는데 1960~70년대 동두천에는 한국 돈보다 ‘달러’가 더 많았다고 할 정도였으며 동두천이 ‘돈천’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미군들의 옷을 세탁해 주고 구두를 닦아주며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과, 부대에서 합법·불법으로 반출된 풍요롭고 질 좋은 물자들이 넘쳐나면서 동두천은 무한정 돈이 쏟아져 나오는 황금도시로 알려졌으며 한때 ‘지나가는 개도 달러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기도 하였다. 동두천에 몰려든 실향민들과, 먹고 살길을 찾아 나선 힘없는 전쟁미망인과 고아들, 그리고 기지촌의 호황 속에서 한 몫 잡아보려는 사람들 까지 모두 모여 1966년 동두천읍의 인구가 6만을 헤아렸고 이 중의 90퍼센트가 외지에서 온 유동인구였다.

밤의 동두천은 또 다른 모습이었다. 동두천의 밤은 한낮의 훈련과 군사임무로 지친 미군들을 상대로 먹고 사는 생존을 건 또 다른 전쟁터였다. 밤의 동두천에 적용되는 법은 한국 국법과 무법에 가까운 현지법이 교묘히 뒤섞인 것이었고 밤의 경제를 순환시키는 화폐는 원화도 달러도 아닌 군표였다. 미군들의 취향에 맞추어 단장한 술집들이 들어섰고 술집 영업주의 지휘아래 호객꾼이 길거리를 누볐으며 양공주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술집 안을 휘젓고 다니며 술값과 서비스 대가로 군표를 거두어 들었다. 1960년대 후반 이태원, 동두천, 의정부, 평택, 대구, 군산, 부산 등 전국의 62개 기지촌 지역에 등록된 매춘 여성의 숫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동두천에만 6천 명을 웃돌았다고 한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도 채 안 되던 아시아 최빈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의 군인들이 하룻밤 즐거움을 위해 마시고 쓰는 달러가 동두천에서만 한 달에 20만 달러를 웃돌 정도였다니 당시 동두천이 얼마나 호황을 누렸는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다.

2) 미제 암시장의 형성

미군주둔과 관련하여 기지촌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또 하나는 바로 피엑스

(미군부대 구내매점)물품이었다. 그 시절 웬만한 집에는 미제 식료품 깡통이나 화장품, 커피, 담배 등이 하나쯤 있게 마련이었다.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에는 예외없이 피엑스에서 흘러나오는 상품들로 암시장이 형성됐다.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군은 중대단위 이상의 부대가 주둔하는 전국 120개소 지역에 피엑스를 운영하였는데 총취급품의 60%가 부정 유출됐고, 그 가치는 당시 가격으로 300억원 이상이었다고 한다.

당시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자와 자재가 쌓여 있는 미군부대는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한국인들에게는 천국처럼 보였고 생존을 위한 다급한 몸부림은 다양한 방식의 절도와 불법반출로 이어졌다. 내부 군인이나 직원들과 결탁한 피엑스텔이 전문 절도단이 극성을 부렸고 외부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황당한 절도사건도 수시로 보고되었다. 피엑스 물건이나 부대물건들을 외부로 반출을 하는 일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 미군들로서는 유흥비를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불법반출 및 절도에 가담한 한국인 절도범이나 종업원들은 한 밀천 건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으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은 이를 통하여 배고픔과 생필품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두천시 향토사학자인 김택기씨의 증언에 따르면 미군부대로 부터 흘러나오는 물건(예를 들어 휘발유, 고기, 과자, 술 등)들은 서울 보따리상과 동두천 보따리상인 여자들이 그 전날 준비해 두었다가 다음날 새벽 첫째 열차나 두 세번째 열차를 이용하여 서울에 가서 팔곤 하였다고 한다. 하루 평균 40~50여명의 여자들이 매일 열차의 의자 밑에 물건을 넣고 치마로 가려서 운반하였으며 어떤 때는 기차를 타면 휘발유냄새가 진동하기도 했다고 한다. 1950~70년대 말까지 이렇게 실어 나른 미제물품들은 남대문 도깨비시장을 통해 서울과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지금도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2동에는 미군부대에서 불법으로 흘러나온 장비와 물품을 파는 소위 블랙마켓이 형성되어 있다.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점만 줄잡아 20여 곳으로 이곳에서 나온 물건들은 중개인을 거쳐 서울 청계천이나 남대문의 도깨비시장, 이태원등지로 공급된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주한미군의 감축과 함께 무제한으로 허용되던 물자보급도 최소한의 부대유지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미군부대들은 본격적으로 부대 물자관리를 강화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는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미군 물자의 한국시장 내 유출을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미군 피엑스에서 나오는 물품들은 공식적인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비행기에 실려 미군부대로 직접 날아오기 때문에 국세청이 매기는 세금이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막 태동기에 접어든 국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피엑스에서 나온 물건들은 적어도 원가의 두 배,

물건에 따라서는 세배 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70년대 후반까지 PX의 불법 유출은 계속 유지되었으며 상당한 규모와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과거 좀도둑과 양공주들을 통한 생계형 물품 유출의 형태에서 피엑스 물품 유통망을 이용한 차떼기 부정유출이 극성을 부리면서 1977년 한 해 관세청의 미군 피엑스 물품 유출 단속건수는 6,200건에 10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적발을 피해 유통되는 물품은 이보다 수백 배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당시 당국의 추산이었다.

1991년 봄, 우리나라가 한창 수입개방문제로 시끄러웠던 때 미국이 미군PX를 수입자유화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일이 발생한다. 당시 쌀개방을 둘러싸고 미국정부의 고위관리들이 번갈아 한국을 드나들며 한국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을 때 전국의 미군부대에서 엄청난 양의 쌀이 기지촌의 암시장을 통해 흘러나왔다. 주한미군은 그간 미군 PX 물품의 시중유출을 막기 위해 미군 한 사람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구매량을 제한하는 규정(RCP)을 두고, 규정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왔다. 그러던 미군측이 1991년 5월 1일 미국의 국방비 삭감으로 주한미군의 비용절감이 불가피하다며 이 규정을 일방적으로 폐지해버린 것이다. 때문에 그동안 구매제한에 묶여 있던 미제상품들, 특히 쌀이 엄청나게 암시장으로 흘러나왔던 것이다. 한국의 관세청에서는 미군 PX물품의 암거래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RCP폐지에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암시장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수입자유화와 관세인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미군부대의 이러한 조치들은 PX 물품의 불법유출을 수입개방의 압력수단으로 이용하고 수입개방 이후의 수요확대를 노린 미국정부의 정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피엑스물품이 과거 우리에게 먹고 입을 것들을 원조하였던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수단으로 사용되는 모습에서 수출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어쨌든 한 때 한국인들의 생필품의 젖줄이었고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빠진 우리 아버지세대를 지탱해주었던 미군 피엑스물품시장이 한국이 무역대국으로 부상하고 각종 외국 농산물과 전자제품의 수입이 넘쳐나면서 급속히 쇠락한 것만은 사실이다.

2. 고용창출 및 지역사회재건

1) 상권의 형성과 일자리의 창출

주한미군이 미군주둔지역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기지촌주변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형성과 함께 일자리의 창출이었다. 1960~70년대 미군부대주변은 미

군들과 윤락여성들을 상대로 한 술집과 상점이 들어서고 미군이 내다 팔거나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품들이 풍부하게 순환되면서 활발한 상권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한편 생존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던 당시의 한국인들에게 미군부대는 최고의 직장이자 일자리 제공처였다. 1960년대 말 전국적으로 미군부대에 고용된 한국인 종업원들의 숫자는 6만명을 상회하였으며 동두천시의 경우 1968년 미군부대 한국인 종업원은 2,209명으로 그 부양가족 수만 12,150명에 달했다. 당시 미군부대의 일자리는 가장 안정되고 선호하는 직장으로 인식되었는데 당시로선 보기 드물게 작업과 직장의 근무환경 등이 배려되고 피고용인들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결성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두천지역에는 1958년 5월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이를 전후하여 서울, 파주, 의정부지역에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1967년에는 주한미군 산하 15개 지부 38,500명의 노동조합원이 보고되었다.

미군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동두천문화원에서 발간한 『동두천시 지방행정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동두천시의 경우 1979년 미군부대 종사자 1,158명 외에 윤락여성수는 2,900여명에 달했고, 2,116개 업소에서 6,108명이 미군관련 상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동두천시 전체 인구의 36% 이상이 미군을 대상으로 한 생업에 종사했던 것이다. 미군전용홀도 27개소로 총 수용능력이 3,000명에 달했으며 이들 업소들의 연간 외화획득액만도 약 30만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기지촌 경기호황을 타고 한 몫잡으려는 외지인들까지 몰려들면서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시골마을 동두천은 폭력과 절도, 매춘에 인신매매까지 벌어지는 타락한 도시로 알려지면서 불법이 판치던 알 카포네 시절의 시카고를 연상하며 작은 시카고(Little Chicago)라고 불리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악명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가 우리 경제가 어렵던 시절 외화획득의 거점도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동두천경제의 호황과 발전 뒤에 미군이 있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미군에 의존하는 동두천경제는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동두천시에서 발표한 미군관련 경제 규모는 1,400억 원으로 GRDP(지역내총생산) 7,200억 원의 20%에 달하고 있다. 동두천에 주둔한 미군부대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규직과 일용직을 합해 2,500명과 관리를 포함 용역공사업체소속 2,500명으로 총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동두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65%인 3,250명으로 동두천시 인구를 감안할 때 미군부대가 창출한 직접 고용효과는 매우 큰 수준이다. 또한 미군기지지역은 미군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유흥업소 같은 곳이 많으므로 간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면서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있다. 동두천시의 미군

관련 상가 수는 400여 업소에 매출액만 800억 원에 달한다. 2007년 현재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발생한 직·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1만5천여명 수준으로 시 전체 인구 8만9천여 명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인구 3만5천여 명을 제외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층만을 고려한다면 거의 30%에 가까운 인력이 주한미군관련 종사자이다. 주한미군이 동두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2) 지역사회재건 지원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중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외에 비록 그 경제적 효과가 크고 지속적이지는 않았지만 전후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미군의 지원을 빠뜨릴 수 없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시기부터 피난민구호 및 한국사회의 피해복구와 재건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전쟁 피난민들에 대한 임시거처 및 미군식량물자 제공, 가옥보수 및 건설, 전쟁고아 보호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대민지원정책은 휴전 이후 보다 체계화 되는데 당시 미8군사령관이었던 맥스웰 테일러장군은 미국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지지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Armed Forces Assistance to Korea Program」을 창안하여 한국 사회의 재건을 적극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한미군들이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병원, 학교, 고아원, 공공건물, 일반주택 등의 건설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동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휴전 후 첫 2년 동안에만 총 3천여채의 건물이 새로이 지어졌으며 여기에 들어간 재원은 1955년 달러가치 기준으로 약 4천 8백만 달러에 달했다.

특히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군단사령부를 설치한 1군단 시절 지역사회 재건의 성과는 단연 돋보인다. 미1군단 공병대는 의정부 캠프 스탠리에 위치하여 도로 개발 및 복구, 학교 및 고아원시설 건설, 도시재건 및 복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정부, 동두천, 문산 지역에 많은 공공시설, 도로, 복지시설 건설과 재건에 많은 힘이 되어주었다. 특히 동두천에 위치한 미7사단은 이승만대통령이 아리랑을 부대가로 사용토록 허가할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표시한 부대로, 휴전 이후 동두천과 연천, 운천 일대에 주둔하면서 한국인들과 끈끈한 정을 쌓았고 군사원조 자금 299,000달러를 전환하여 동두천 일대의 댐, 교량, 고아원 등 26개 시설을 건축하고, 8개 의료시설과 99개 학교 교실을 지어주었다. 또한 1971년 철군할 때까지 15년간 8개 고아원에 54만 달러어치의 지원과 헌혈봉사를 해 왔으며 홍수와 가뭄시에 공병 장비와 급수차를 동원하여 복구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고락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지역사회 재건 지원활동은 1970~80년대를 지나면서 지역사회에서 급속도로 그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의 감소와 미군의 주요 임무가 주로 국가방위에 치중하게 된 탓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미군이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주한미군의 지역재건 지원사업은 크게 축소되었지만 전후 폐허 속에서 한국경제가 일어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표면화된 주한미군에 대한 반감과 갈등이 2000년대 들어 더욱 확대되자 주한미군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계개선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2년 취임 한달 후 여중생 전차사망사고에 대해 한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저항하는 것을 지켜본 라포트(LaPorte) 주한미군사령관은 지역사회정책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민의 이해제고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지역사회정책의 새로운 목표로 정립하였다. 라포트 사령관은 이와 같은 목표아래 주한미군의 지역사회정책의 역점사업으로 2003년1월부터 「Good Neighbor Program」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Good Neighbor Program」은 본질적으로는 1950년대와 60년대 중반까지 추진하였던 한국사회 대민지원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담고 있는데 고아원 지원, 학교운동장 보수, 사회복지시설 지원, 이재민 지원, 가로수 식수, 미국문화원 설치지원, 미군기지내 영어캠프 설치, 환경보호운동 참여, 기지개방 행사 등이 그 주요 사업들이다. 그러나 「Good Neighbor Program」의 의의는 구성사업들 보다는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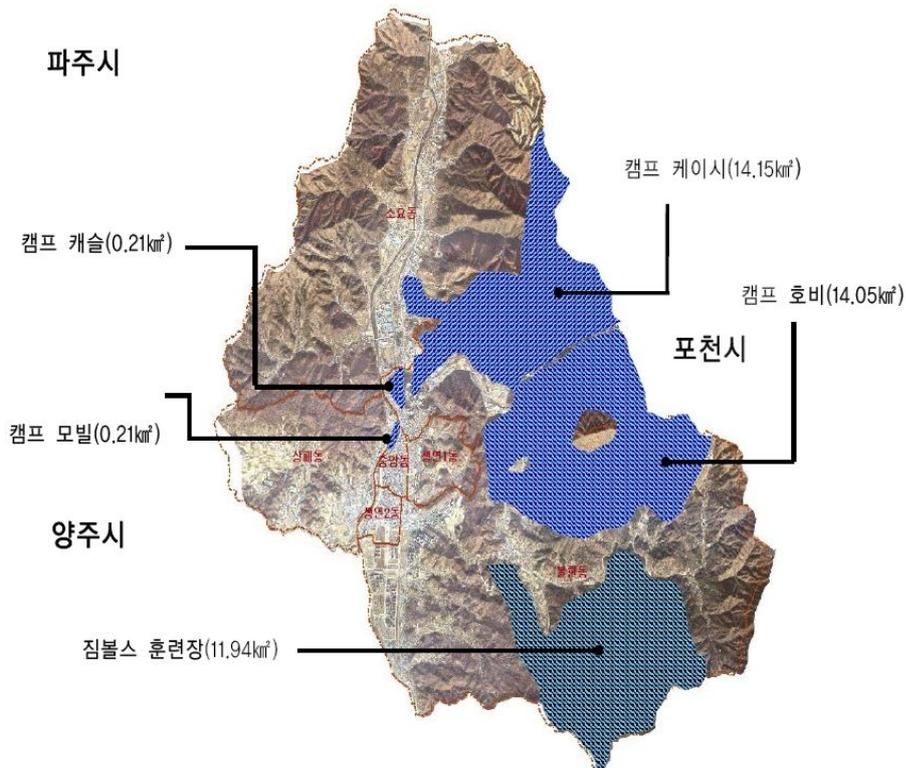
3. 미군공여지로 인한 지역개발억제

1) 도시발전의 왜곡

모두를 위해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 주고 스스로는 기형으로 성장한 지역들이 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조상대대로 살아온 산하와 문전옥답을 미군공여지로 내어주고 주한미군을 떠안았던 경기도내 미군주둔지역들이다. 전국 주한미군 공여지의 88.5%가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내의 미군공여지는 지역여건 및 입지

현황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의정부시하면 상습적인 시내의 교통 정체로 유명하다. 의정부시의 경우는 도심지역내 미군공여지가 섬의 형태로 존재함으로써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의정부에 위치한 대부분의 미군기지는 50여년 전 한적한 도심외곽에 주둔하였다.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건설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군사시설을 우선 보호하는 정책으로 인해 도로와 건축물이 군사시설을 피하여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들어섰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지금에 와서 도시의 균형 발전과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정체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파주시의 경우는 면적이 서울시와 안양시를 합한 정도로 경기도 수도권에서 제일 큰 지역이지만 전국에서 가장 넓은 땅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여지 대부분이 시가지 외곽에 위치하여 도시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동두천시의 경우는 미군공여지가 시 전체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도시개발의 정체와 기형적 성장이 초래된 것은 물론이고, 기지주변 대규모 유흥가의 존재로 인한 기지촌이라는 부정적 지역이미지는 시민들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로 남아있다.

<그림 3-12> 동두천시내 미군부대위치



동두천에는 현재 6개의 미군기지가 있다. 캠프 케이스이, 캠프 호비, 캠프 님블, 캠프 캐슬, 캠프 모빌, 짐볼스 등으로 이들 6개 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동두천의 면적

은 40.63km²이다. 동두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이 95.68km²이니까 42%가 미군공여지이며 여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합하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인 셈이다. 도시 전체가 미군기지가 다름없다. 공여지면적의 크기뿐만 아니라 대규모 미군기지들이 동두천시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어 정상적인 도시설계 및 개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두천의 경우 기지가 입지해 있는 지역의 토지이용과 공간구조, 나아가 산업 및 인구사회 구조는 크게 왜곡되어 있으며 미군의 군사훈련으로 인해 교통정체 및 막대한 도로보수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미군부대 한 가운데에 공여지가 아닌 민간인 마을이 존재하여 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의 정상적인 성장마저 불가능한 대단히 기형적인 공간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동두천이다. 또한 기지촌이란 지역이미지는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약화시켜 인구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동두천시의 현재 인구는 약 9만 명으로 1981년 시로 승격할 당시 인구 6만 명에 비교할 때 29년 동안 3만 명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가 거의 300% 가까운 인구성장을 보였다는 점과 동두천과 인접해 있는 양주시의 경우에도 동두천시의 2배 이상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동두천시의 인구증가가 얼마나 더디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동두천은 한때 미군기지 앞에 있는 보산동 한 개 마을이 지역경제의 절반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지금도 미군 관련 경제규모가 지역내 총생산량의 20%에 달한다.

2) 미군공여지로 인한 재정손실 및 지역경제피해

미군공여지는 미군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행사하여야 할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매년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서울시의 6분의 1 남짓한 면적에 여의도의 5배 크기의 땅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반세기 동두천시의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세수 손실액은 연간 226억원으로 총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간 지방세 세수손실액 226억원은 2008년도 동두천시 예산액 1,669억원의 14%, 지방세 254억원의 89%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2008년 동두천시 재정자립도가 22.2%(전국 평균 53.9%, 경기도 평균 76.3%)로 전국 최하위수준이라는 사실도 미군 주둔과 무관하지 않다.

<표 3-3> 비과세 면적 현황

행정구역 면적 A=(B+C+D)	과세면적(B)	비과세면적	
		철도·도로·하천 등 (C)	순수 공여지 (D)
95.68km ²	53.78km ²	9.53km ²	32.37km ²

경기도 2청에 따르면 동두천시가 미군 공여지로 제공한 땅을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경제손실은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1952년 이후 2009년까지 58년간의 지역경제 손실액의 총합은 총 17조 4,5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여지 미개발로 인한 연간 3,000억원의 손실은 2006년 동두천의 지역내 총생산 1조 1,194억원의 약 25%에 달하는 규모로 그간 동두천시가 국가안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국방부는 경기 북부지역 미군기지들을 통폐합 해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로 발표했다. 동두천시는 동두천지역의 미군공여지(토지 부분만) 매입비용을 2004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 3천억 원으로 공시하고 있다. 평당 계산을 해 보면 대략 평당 평균 18만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2009년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토지 매입비용만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미군공여지 내에 건축물까지 계산하게 되면 그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라고 한다. 동두천 입장에서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반강제적으로 징발해서 60여년을 돈 한푼 내지 않고 사용해 놓고 이제 와서는 되레 돈을 내고 그것도 시세대로 사가라'는 식이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등을 공포해 국고지원을 약속했지만 동두천 주민들은 불만을 표하며 추가 지원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동두천시의 경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3,528억원, 주변지역 도로사업비 1,978억원을 포함 5,506억원의 국고가 지원되지만 동두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에 맞추어 지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009년 2월 1차 수정된 동두천시의 반환기지사업 및 주변지역 사업예산을 들여다보면 2017년까지 국비 5,506억, 지방비 5,187억, 민자 2조 1,832억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동두천시의 재정상황(2010년 재정자립도 24.2%, 일반회계 순수 자체 사업비 103억원)을 고려하였을 때, 막대한 지방비의 자체 조달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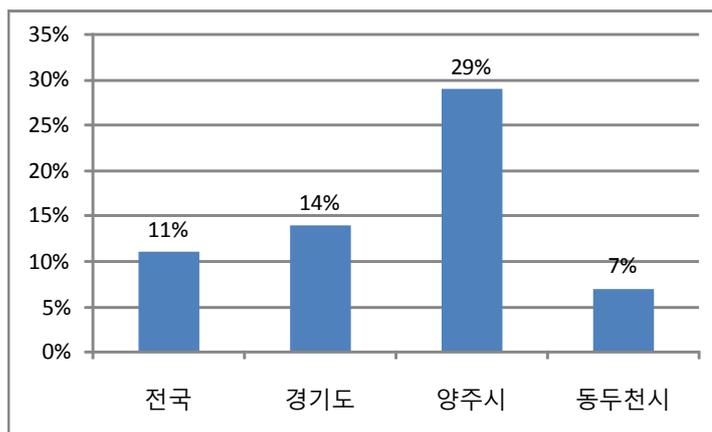
4. 미군 의존형 기형적 경제구조

1) 미군 의존형 경제

미군이 동두천에 남긴 대표적 잔재 중 하나는 경제적 종속이다. 동두천은 미군에 의해 발전한 도시이지만 역설적으로 동두천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미군 때문이다. 동두천은 기지촌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성장한 도시이다. 다른 도시들이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발전을 거듭해 온 반면 동두천은 미군에게 안방을 내준 채 발전의 기회를 찾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동두천시의 경제는 지금도 철저히 미군 예속적이다. 동두천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06년 기준으로 1,360만원으로 전국 평균 1,728만원 및 경기도 평균 1,577만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군관련 경제규모는 1,400억 원으로 동두천 지역내총생산량(GRDP)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군 관련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3천600여 가구, 1만5천여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7%에 달하고 있다.

동두천시의 산업구조 역시 미군으로 인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2007년 동두천시의 산업구조를 보면 미군관련 서비스업이 총 산업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제조업체는 7%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이 50인 이하 소규모 영세업체이다. 총사업체 대비 7%의 제조업체 비율은 경기도 평균인 14%의 절반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기형적인 현상이다. 특히 동두천시와 인접하여 있는 양주시의 29%와 비교한다면, 동두천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업종별 종사자수를 보더라도 동두천시 제조업 종사자비율은 18.4%로 경기도의 29.5%나 전국 21.5%에 비해 낮은 반면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비율은 16.1%로 경기도 10.2%나 전국 10.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3> 제조업체 비율



따라서 미군재배치가 이루어져 주 소비층인 미군을 모두 잃게 될 경우, 앞서 말한 미군관련 경제규모를 상기해 본다면 고용면에서 미군부대 종사자 3,200명과 400여개 업소, 그리고 소득면에서는 미군부대종사자의 가계소득 600억, 미군관련업소의 매출액 800억원 등 총 1,4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나타낼 뿐이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더욱 더 클 것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군부대종사자 3,200명의 고용감소에 의한 지역경제손실은 1조 6,160억 원으로 추산되며 미군관련 상가에서 발생하는 400여명의 실직으로 인해 202억원의 지역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재배치에 의해 미군관련 종사자 3,600명이 실업이 발생할 경우 동두천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총 손실액은 16,36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동두천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없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당장의 지역경제 붕괴와 도시공동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동두천의 각계각층에서 쏟아지는 동두천 지역경제에 대한 붕괴 우려의 목소리와 근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과 함께,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다. 미군기지의 조속하고 완전한 철수와 동두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안되면 이전 반대라도 외쳐야하는 절박한 심정이다.

2) 보산동과 달라진 미군의 소비풍속도

과거 보산동은 미군들의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동두천은 물론 의정부와 파주의 미군까지 밀려들어 2만명 이상의 병사가 북적였고 시청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직업여성들이 6천명을 웃돌던 시대가 있었다. 한창 장사가 잘되던 1970년대 중반엔 퇴근 무렵이면 보산동거리는 명동 변화가를 방불케 했다고 한다. 1982년 동두천읍이 시로 승격됐을 당시만 해도 보산동이 동두천시 재정의 40~50%를 담당했으며 ‘보산동의 한 달 수입으로 서울 동대문구 땅 전체를 살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게 호황을 누리던 보산동도 역사의 흐름을 타고 쇠퇴하기 시작했다. 한때 네온사인으로 분야성을 이뤄 거리를 지나다닐 때면 행인들끼리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던 보산동은 현재 250여 상점의 불빛만이 초라하게 길을 밝히고 있다. 오가는 행인도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줄었다. 보산동의 침체는 계속된 미군의 감축과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달러위력의 상대적인 감소로 인한 기지촌 경

제의 급격히 쇠락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원화가치 절상이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 ‘10년 전 미군이 5달러 10달러씩 뿌리던 틈은 큰돈이었지만 지금은 껌값에 불과합니다. 윤락여성이 없어진 이유도 이 때문이죠’. 1995년 조선일보(95.10.01.25면)가 취재한 동두천시 관계자의 말은 한국경제성장과 원화가치절상이 기지촌경제에 미친 영향을 너무나 잘 묘사해준다. 한때 6천명에 달했던 동두천 기지촌 여성들의 모임 ‘민들레회’가 1989년 회원이 없어 자진해산한 것은 그 쇠락을 상징한다.

보산동 상인들은 미군들의 돈 씹씹이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경제의 발전과 함께 원화가치 상승으로 미군병사들의 경제적 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사실 외에 주한미군이 병사들을 위해 부대 내 시설투자를 늘림으로써 굳이 외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도 현저하게 달라진 미군들의 소비풍속도 변화에 한 몫을 했다.

<그림 3-14> 보산동 관광특구내 상가모습



주한미군의 변화된 소비패턴 가운데 미 여군이 늘어났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군 공보관계자들은 주한 미여군이 전체 미군의 약 13% 정도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산동 등 기지촌 대부분은 이들 미여군들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장사가 거의 없다.

보산동 일대 상가가 본격적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건 지난 2004년 8월 미군의 이라크 파병으로 동두천 주둔 미군이 대폭 감소하면서 부터다. 당시 2사단 병력 4,000여명이 이라크로 차출돼 한국을 떠나며 상가의 40%가 잠정 폐업했다. 동두천시는 2004년 이전 1만 2,000여 명에 이르렀던 동두천 주둔 미군이 현재 5,000여 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도 2003년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06년 말 개통된 경원선 복선전철의 개통은 보산동 경제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 기지 입구에서 불과 500m 거리에 보산역이 생기고 평일과 주말 귀대시간이 사라지면서 그나마 있는 미군들도 더 즐길거리가 많고 MP(헌병)의 눈이 없는 서울 이태원이나 홍대앞, 용산, 신촌 등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옛 명성이 바랜 보산동의 모습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중대한 기로에 선 동두천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 2사단의 평택 이전이 2014년(한국 측 주장)과 2016~2019년(미국 측)을 오가는 사이, 동두천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그보다 먼저 다가올 경제 공동화의 불안감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미군관련 경제 규모가 지역내총생산량(GRDP)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7%가 주한미군관련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두천으로서는 기지 이전을 전후해 수년간 이어질 공동화 현상을 취약한 경제기반이 견뎌낼 수 있을지가 우선 걱정이다. 경기도 2청에 따르면 동두천시의 미군기지 이전이 당초 2011년에서 2014년으로 3년 지연될 경우 지역내총생산이 9,958억 원 감소하고 2016년으로 5년 지연될 경우 총 2조 2968억 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개발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동두천시는 반환 미군기지 6곳에 기업단지, 골프 빌리지, 외국대학 및 연구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에서 전국 최하위수준으로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형편의 동두천으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공여지역 토지매입비와 개발비용을 감당할 뻔족한 방법이 없다.

제 4 절

주한미군과 지역문화

1. 부대찌개, 존슨탕

1) 부대찌개의 유래

한국전쟁과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생겨난 서글픈 유래를 간직한 먹거리 중 유명한 것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꿀꿀이죽’과 ‘부대찌개’이다. 6·25전쟁 후 1970년대까지 경제가 피폐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의정부 등 미군부대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미군부대 쓰레기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골라 커다란 쇠통에 넣고 끓여서 죽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이것이 일명 꿀꿀이죽이다. 꿀꿀이죽 속에는 햄 소시지 등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경하기 힘든 기름진 음식물이 들어 있었지만 미군이 쓰던 이쑤시개나 담배꽂초가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빈궁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음식이었던 꿀꿀이죽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조리방법을 가미하며 ‘부대찌개’라는 다소 발전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부대찌개는 그 이름 자체로도 평범치가 않다. 음식 이름에 붙이기엔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군 부대가 떡하니 붙어있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요즘세대들은 군대에서 즐겨먹던 음식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대찌개는 군대에서 즐겨먹던 음식이 아니라 ‘군부대에서 재료를 가져와 만든 찌개’로 미군부대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만들어 먹던 음식이다. 미군부대에서 먹다 남거나 몰래 빼낸 고기를 부대고기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일부의 사람들은 의정부시에 주둔하던 미군부대로부터 핫도그나 깡통에 든 햄(예를 들어 스펀) 등 잉여 음식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매운 맛을 내는 고추장과 함께 찌개를 만들었다. 미군부대 쓰레기더미 속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도 소시지와 햄 등 기름진 먹거리를 공급받는 것은 과분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얻어먹는 것도 감지덕지였던 시절이지만 그 생소하고 느끼한 식재료가 도무지 우리 입엔 맞질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여기에 김치, 고추장과 각종 양념을 섞어 끓여 먹은 것이 부대찌개의 시작이었다. 이 음식은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B. 존슨의 성을 따서 존슨탕이라는 생똥맞은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2)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유래가 유래인지라 부대찌개하면 왠지 의정부가 떠오른다. 의정부시에는 1960년대 초 미군부대에서 나온 각종 고기와 소시지 등을 김치, 당면과 섞어 최초로 부대고기, 부대찌개로 만들어낸 주인공인 '원조 부대찌개 할머니'가 아직 장사를 하고 있다. 원조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최초의 부대찌개는 국물이 거의 없는 볶음의 형태였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육수를 부은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의정부시는 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OO식당이 있는 길거리를 "부대찌개 거리"로 지정하고 매년 부대찌개 축제를 하는 등 부대찌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다음은 '원조 부대찌개 할머니'로 알려져 있는 의정부시 H할머니와의 중앙일보 인터뷰기사(2004년 5월27일자) 내용이다. "당시 미군부대가 지역 사람들을 먹여 살렸지. 부대식당에서 일하는 한국 아저씨들이 은박 종이에 고기를 싸서는 배에다 차고 나왔어. 텃입은 조끼를 벗으면 고기가 우르르 쏟아졌어." H할머니는 이렇게 확보된 고기와 소시지를 팔아 1남 2녀를 길렀다고 한다.



의정부 부대찌개거리



부대찌개

<그림 3-15> 부대찌개

3) 부대찌개의 전국화

미군부대주변지역의 대표적 먹거리였던 부대찌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팔도음식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지금도 의정부, 동두천, 문산, 평택, 송탄 등 미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는 30~40년의 전통을 이어가며, 부대찌개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다. 의정부에는 '명물 의정부

찌개거리'라는 음식점거리가 형성되기도 했다. 단지 부대찌개의 유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지 의정부 부대찌개전문음식점들은 2001년부터 부대찌개라는 말 대신 '명물의정부찌개'라는 말을 사용하고 간판을 모두 바꾸어 달기도 했다. 아무튼 당시에는 먹고살기에 급급해서 되는대로 만들어 먹다 우연히 탄생하게 된 음식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부대찌개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퓨전요리의 원조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먹고살 만해진 지금의 젊은 세대가 부대찌개 같은 음식을 즐겨 먹는 것도 의외인데 그들이 그걸 먹으면서 전쟁의 아픈 상처까지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그러나 2003년 10월30일 부대찌개에 대한 서글픈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릴만한 씁쓸한 사건이 터졌다. 서울 용산 미8군식당에서 사병들이 먹다 남은 쇠고기와 햄 소시지 등 음식물 찌꺼기를 싼 값에 사들여 부대찌개를 만들어 팔아온 유명 업소와 음식물 찌꺼기를 빼돌린 미군부대 조리사 등이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붙잡힌 미군부대 조리사 김씨 등은 미군 사병들이 먹다 남긴 스테이크 조각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개 사료용'이라고 속여 빼돌렸으며 먹다 남은 부분은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한 뒤 부대찌개업주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부대에서 '개 사료용'이라고 속여 빼돌린 음식찌꺼기를 재료로 만든 부대찌개는 무려 6만명 분이었다. 개발으로 부대찌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 부대찌개'라고 선전해 점심 시간이면 손님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반세기전 미군부대주위에서 끓여대던 '꿀꿀이죽'이 21세기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2. 양키 문화 유입

1) 미8군 쇼와 대중음악

지금은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영화, 가요 등이 한류열풍을 일으키며 세계 곳곳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이 땅에 서양의 대중문화가 들어온 것은 100여년에 지나지 않는다. 1890년 전후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배재학당을 세우면서 외국의 찬송가와 신식노래인 창가를 보급시킨 것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서양음악의 효시라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자즈'라는 용어로 미국의 대중음악이 국내에도 사용되었던 흔적은 있으나 본격적인 서양 대중음악의 유입은 해방 후 미군정과 1950년 6.25전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은 오랜 기간동안 미군을 이 땅에 불러들였고 미대중음악을 좀 더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배고프고 문화마저 빈곤하던 시절, 미군부대는 풍요의 상

징이자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서구문화의 창구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 코카콜라와 양담배를 처음 접했으며 심지어는 팝송과 로큰롤까지 소개받았다

주한미군이 미국문화를 이 땅에 이식하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미8군 무대’가 한국 대중음악에 미친 영향력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미8군 무대란 말이 낯선 요즘 젊은이들에겐 ‘주한미군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연예인들이 벌인 쇼 무대’라는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이역만리에서 외로움에 젖은 미군 장병들을 위문하기 위한 연예무대가 필요하였다. 한국5전쟁 직후 몇 년간은 미국의 마릴린 먼로와 같은 유명 연예인이 직접 내한하여 공연하였지만 미군주둔 수요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미군은 비용절감 및 효율성을 위해 한국인 연예인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1953년 7월27일 휴전이 성립되고 얼마 후 화양, 유니버티, 삼진, 동영 등이 주축이 된 ‘미8군 쇼’단체가 등록되었는데, 처음에는 경음악단 위주로 미군계통에서 흘러나오는 유행음악을 연주하였으나 곧이어 플로워 쇼(패키지 쇼)라는 명칭으로 노래와 춤이 섞인 무대가 유행하게 되었다. 이들 공연단체는 주로 의정부, 동두천, 문산, 파주, 송탄, 부산, 대구, 군산 등 미군이 주둔한 캠프촌을 순회하는 쇼단체로서 처음에는 일정한 보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루저녁 공연에 위스키 몇 병, 또는 캔맥주 몇 박스로 배우는 그야말로 하루살이 흥행이었다. 그러나 전쟁 직후 시중의 연예계가 거의 전멸이었던 터라 이들은 미군 트럭을 타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이런 수단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미8군이 출연자들에게 현물이 아닌 돈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게 되면서 ‘미8군 쇼’는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곳이 된다. 1950년대 후반 미군무대가 한창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전국의 미군 클럽이 264곳에 이르렀고 미8군이 우리 연예인에게 지불하는 돈이 월평균 8만 달러~12만 달러로 연간 무려 12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당시 우리나라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2,0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8군 쇼’단체의 수입은 대단한 규모임에 틀림없다.

‘미8군 쇼’라는 주한미군을 위문하는 연예창구가 마련되면서 ‘미8군 쇼’는 후일 우리 가요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을 배출한 터전으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 1960년대 들어 미8군 쇼 무대에서 단련한 음악인들이 한국인 대중을 상대로 한 이른바 ‘일반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이후 한국 대중음악이 미국화의 가속 궤도를 힘껏 밟기 시작했다는 점은 통설이다. 이른바 한국 록의 태동기이자 중흥기라 할 만큼 실력있는 뮤지션들이 나타나게 된다. 당시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한국 록

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신중현이다. 신중현은 ‘Add4’라는 그룹을 조직하여 당시만 해도 자작곡보다는 외국곡에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번안곡 일색이었던 때 ‘빛속의 여인’ 과 ‘커피한잔’ 등과 같은 우리나라 가요사에 창작 락(rock) 음악의 시대를 활짝 열게 된다. 이봉조, 김대환, 김희갑, 신중현, 김홍택 등의 연주자 및 작·편곡가와, 한명숙, 최희준, 현미, 패티 김, 윤복희, 펄 시스터즈, 신중현 등에서 조용필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스타들은 대부분 미군무대를 통해 데뷔했고, 음악을 배웠다.

비록 미8군 무대는 한국인이 아니라 미군 청중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주의 주체가 한국인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가요사에서 중요한 한 장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의 음악은 일본의 전통가요인 엔카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암울한 시대상을 반영하여 음악의 다양성보다는 음악을 통한 위안을 찾고자 하였다. 미8군 무대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온 트로트위주의 장르에서 탈피하여 당시 서양에서 유행하던 락음악과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알리고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미8군 무대를 통해 배출된 연예인들이 화려한 한국의 대중문화를 꽃피우는 1세대 주역이 될 수 있었으며 이후 많은 후배 연예인들이 능력을 연마하고 재능을 수련한 덕에 지금의 한류열풍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된 셈이다. 한국 현대사가 그렇듯, 20세기 후반 한국 대중음악 역시 한편으로 자생적이라기보다는 이식적으로, 창작보다는 모방의 과정을 통해 첫 발걸음을 땀 셈이다.

2) 동두천 락 페스티벌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그늘진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예술로 승화하여 이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는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다.

주한미군의 주둔과 함께 소개된 락 음악은 미8군 쇼를 통해 한국형 대중 창작 락 음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선구자 중 하나가 신중현이라는 점은 앞서 말한 바 있다. 동두천시는 기지촌의 대명사처럼 불리운 동두천이 세계 락의 유입지이자 한국 락의 발원지라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한국 대중 락의 선구자인 신중현밴드 ‘Add 4’의 탄생 및 활동지역이라는 지역특성을 내세워 매년 ‘동두천 락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락의 도시 동두천’, ‘젊음의 도시 동두천’이라는 특화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전국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상품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도이다.

<그림 3-16> 동두천 락페스티벌의 모습



‘동두천락페스티벌’의 조직위가 설립된 초기에는 대부분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되었다. 교사들은 동두천의 척박한 문화현실속에서 학생들과 함께 할 프로그램을 고민하다가 3년여의 연구와 고민 끝에 락 페스티벌을 탄생시켰다. 이렇듯 순수 민간축제로 시작된 동두천락페스티벌은 1999년 1회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8월 15일 전후 3일간 열리고 있으며 매년 방문객 3만여명을 기록하면서, 현재 한국 락 페스티벌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 행사내용은 전국 고교·대학·일반부 아마추어 락밴드 경연대회와 유명 락 뮤지션의 축하공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연대회에 참가한 팀들의 수준이 아마추어 수준을 넘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간 신중현, 인순이밴드, 유현상과 같은 이 지역 출신 락가수들 뿐만 아니라 윤도현밴드, 전인권, 김종서, 김경호, 사랑과 평화, 마야, 부활 등 국내 유명 락밴드들이 출연하였으며 전국의 락 매니아와 젊음이 동두천으로 모여들면서 성공적인 전국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지촌문화’, ‘섹스 문화’로 요약되었던 미군과의 인연을 도시홍보와 예술축제를 위한 지역의 자산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가 동두천에서 시행되고 있다.

3) 미군이 가져다준 독특한 커피문화

“커피 한잔을 시켜놓고~그대 오기를 기다려 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내 속을 태우는 구려.
 8분이 지나고 9분이 오네. 1분만 지나면 나는 가요.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내 속을 태우는 구려~♪”

1960~70년대를 풍미했던 필시스터즈의 ‘커피 한잔’이다. 이 노래에서 전해지듯이 당시 커피는 사람들과 더불어 마시는 음료요, 만남의 매개였다. 커피는 이제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 눈뜨면 찾게 되는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한국인은 1년에 약 300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 커피 원두 수입량도 11만톤에 4,729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커피소비의 왕국이 된 셈이다.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 소개된 것은 대략 1890년 전후로 추정된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커피를 처음 마신 사람은 고종황제로 알려져 있다.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 웨베르가 고종에게 커피를 소개하였고 1년간의 공사관 생활에서 고종은 커피 애호가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 1920년대와 1930년대 들어 모더니즘의 영향을 타고 커피가 확산되었으나 아직은 대중화단계는 아니었고 적은 양이지만 원두커피를 마시는 형태였다.

1950년 이후 미군이 주로 마시던 인스턴트 커피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대중 커피시대를 맞게 되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커피문화를 만들어내게 된다. 간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가루로 만들어진 인스턴트커피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보급품으로 국내에 첫선을 보였다. 당시 커피는 피곤한 군인의 잠을 깨우고, 힘을 북돋워주는 역할을 했으며, 보통 사람들에게 커피는 ‘신기한 것’ 그 자체였다.

1960년대 들어서에는 커피에 관한 웃지못할 사건이 발생한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커피를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커피가 ‘공공의 적’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대로 아프리카의 가나와 함께 최빈국에 속했던 터라 수입에만 의존하는 커피가 ‘사치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다방에서는 몰래 커피를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커피 대용품으로 국산 커피가 나왔지만 맛이 없어 외면당했고, 커피는 ‘귀물 중에 귀물’이 됐다. 이 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국인만의 커피’가 등장한다. 한국식 ‘모닝커피’다. 뜨거운 커피에 날계란 노른자를 넣어 참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휘휘 저어마시는 독특한 풍경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었다.

당시 커피의 수입제한과 외국커피의 단속은 오히려 밀수와 미군 PX로부터의 불법 유통을 조장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실질적인 단속도 어렵고 밀거래가 급증하자 결국 정부는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의 설립을 허가하게 되었고 1968년 5월에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커피회사가 설립되었다. 국산커피가 생겨나면서 커피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중의 대표적인 음료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는 여전히 수입제한품목이었고 당시에도 미제커피가 최고라는 생각이 만연

해있었기 때문에 고급커피를 제공하는 다방에서는 소위 짝퉁커피가 판을 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경향신문 1976년 5월 29일자 7면에 난 커피관련 “커피에 담배가루 섞어팔아”의 기사내용이다 “... 커피원두 1파운드당 90~100잔 정도의 커피를 뽑을 수 없는데도 담배가루 등 이물질을 넣어 150~350잔까지 뽑아(중략) 커피 30잔을 내는 한 주전자를 끓일 때 알 커피를 정량보다 적게 넣고 그 대신 3분의 1개피 분량의 담배가루를 섞어 끓여 색깔을 진하게 하거나 소금과 계란껍데기를 넣어 커피맛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콩초커피라는 유행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D식품은 1976년 또 하나의 역사적인 커피를 선보인다. 커피와 크림, 설탕이 섞인 ‘커피믹스’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커피믹스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결합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고 병커피와 함께 한국의 커피문화를 만들어왔다. 이렇듯 한국의 커피는 세계의 커피역사와는 다르게 독특한 방식으로 정착이 된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보급품으로 간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가루로 만들어진 인스턴트커피가 국내에 첫선을 보인 후 우리나라에는 ‘흔스런 커피문화’가 생겨나게 된다. 커피유통업체 자택은 커피의 유래를 설명하는 홍보물에서 “미군 P.X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인스턴트커피 덕분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커피는 곧 가루커피’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인스턴트커피를 커피라 부르고 커피를 원두커피라 부르는 세계유일의 희한한 용어가 한국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4) 최고의 브랜드 Made in USA

미군부대 피엑스에서 반출된 미제물품과 미국의 경제원조는 이 땅에 미국문화의 유입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피엑스를 통해 나온 미제물건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대되면서 이들 미제물건들은 미국의 물질문명과 문화에 대한 동경심을 자극하였다. 초콜릿도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퍼지지 시작했다. 모두가 어렵던 시절 미군이 나누어 주던 껌과 초콜릿을 얻기 위해 ‘기브미 초콜릿’을 외쳐대던 반세기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세대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러나 부끄러웠던 우리의 자화상이었다.

소설가 김훈씨는 미군과 초콜릿에 관련된 유년시절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미군 지프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초콜릿을 받아먹으며 나는 자랐다. 그때의 초콜릿 맛은 천지가 개벽하고 장님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놀라움이었다. 내 유년의 추억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색깔

은 양담배 럭키 스트라이크 껍데기에 인쇄된 빨간색 동그라미였다. 그 진홍색은 내 어린 생애에서 일찍이 체험하지 못한 찬란한 광휘였다. 그 색깔의 풍요로움은 초콜릿의 맛과 같았다. 그 빨간 동그라미를 가위로 오려서 팽이에 붙여서 돌렸고, 양철 필름에도 붙였다. 초콜릿의 맛과 럭키 스트라이크의 색깔은 모두 도달할 길 없는 풍요의 낙원이었고, 그것은 모두 미군의 것이었다.”

미군부대 PX가 한국에 뿌리를 내린 지 근 60년이 넘어가지만 PX의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다. 2003년 『시사저널』에 실린 한 기사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미제 선호 및 PX의 인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는 ‘미국산 분유 씨밀락을 먹은 아이는 미국인처럼 똥다리와 통뺨이 된다. PX에서 나온 씨밀락은 군인의 아이들을 위해 고급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당시 PX에서 나온 씨밀락은 정상으로 수입된 제품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기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남대문 시장의 한 수입상은 “아직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씨밀락은 인기 상품이다. 수십 통씩 사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체 사장 김 아무개씨(46)는 1주일에 두 번 미8군 용산기지로 장을 보러 간다. 그때마다 영내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야채와 고기 등 먹거리를 사온다.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부대 안의 고기는 질이 완전히 달라. 한번 먹어보면 PX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없어. 야채도 진짜 유기농 야채인 데다 아내가 좋아하는 다이어트 음식이 많아. 의약품도 싸고 믿을 수 있어. 미군 부대에 들어온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을 거친 거야.” 그는 지난해 아예 미군 부대와 가까운 서울시 동부이촌동으로 이사까지 했다. 그에게는 ‘미군 PX 물품=최고’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다.



<그림 3-17> 동두천의 양키시장

이렇게 우리는 1950년 이래로 ‘Made in USA’라는 브랜드를 맹신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우리의 부끄러운 인식을 대변이나 하듯 동두천시에는 수십년간 미군부대를 통해 흘러나오는 미군전용품 등을 팔아 일명 ‘양키시장’이라 불리던 애신시장 입구에 ‘양키시장’이라고 못박은 대형 조형물이 세워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픈 역사도 역사이며 동두천시의 아픔을 알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시민들 모두 과거 기지촌이란 어두운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양키시장’이란 별칭을 사실상 공식 명칭으로 둔갑시킨 것은 시민들의 동두천 이미지 개선 노력을 짓밟는 처신이라는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5) 미국문화의 전파자이자 훌륭한 영어교재 AFKN

새벽 2시계면 대부분 공중파 방송은 모두 끝난다. 그 시간 이후에는 케이블방송이나 AFKN을 볼 수 있다. 지금이야 수십 개의 채널이 있는 케이블TV와 인터넷으로 볼거리가 넘쳐나지만, KBS와 MBC만 있던 시절 AFKN은 당당히 3대 채널 중 하나였다.

주한미군방송인 AFKN은 한국전선에서 싸우고 있던 미군을 비롯한 주한 UN군 장병에게 위안과 오락을 주고 긴급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방송이었다. 1950년 10월 2일 처음 미군방송대가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 후인 10월 4일 인천상륙작전부대를 따라온 미군방송요원이 당시 인민군 사령관이었던 김일성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첫 전파로 발사하였다. 이후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설립이 인정된 AFKN은 KBS보다 4년 앞선 1957년 개국하여 최초의 TV방송을 시작했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서울에 위치한 AFKN본부가 미육군성 등에서 입수한 녹화 혹은 녹음테이프를 전국의 지국에 배포하는 형태였으나 1966년부터는 모든 프로그램을 서울로부터 직접 중계하기 시작했고 1976년 4월에는 컬러방송을 시작하였다. 2001년부터 AFKN은 ‘AFN-Korea’(American Forces Network Korean)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나 아직도 사람들에게는 AFKN이 더 익숙하다.

미군의 참전과 함께 시작된 AFKN은 이후 미군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주권이자 재산인 주파수를 돈 한 푼 내지 않고 40년 동안 사용해 왔다. 뿐만 아니라 방송은 그 특성상 방송에 포함되는 정보와 내용이 시청자에게 쉽게 흡수되는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AFKN프로그램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의 심의기관에 의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결국 AFKN은 우리 땅에서 우리 주파수를

이용하여 미국의 의도대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국 문화와 가치관을 전파하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려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AFKN이 우리나라 방송역사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최초의 컬러방송과 위성을 통한 실시간 방송 송수신시스템을 도입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을 해외 각국에 홍보하는 등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담당해 온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오랫동안 군부세력에 의한 강압적인 독재가 이루어지던 시절 우리의 언론이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만 할 때도 AFKN은 독재의 실상을 검열 없이 뉴스로 내보냄으로써 그 시절 식자들의 정보창구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미국 문화와 가치관의 전파자라는 비난 속에서도 AFKN은 세계문화의 흐름과 단절되어있던 한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유일한 창이었고, AFKN의 시청은 곧 이러한 세상을 경험하는 창구이기도 했다.

AFKN이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인 영어교육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사람들 중에는 AFKN 덕분에 영어 공부나 문화적인 혜택을 입은 사람이 많다. 영어 교재라고는 카세트 테이프와 조악한 영어 책이 전부였던 시절, 원어민의 유창한 발음과 단어를 직접 들을 수 있는 AFKN은 훌륭한 영어 교재였으며 서양문화의 변방인 한국이 미국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안목을 기르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때 AFKN을 보면서 영어공부를 한 이들 중에는 현재 유명 영어강사도 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AFKN에 대한 인기는 많이 줄어들었다. 다양한 영어교재 및 외국인 학원 등 영어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케이블TV나 IPTV 등 볼거리가 무척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8년 중반 이후부터는 케이블TV에서 즐겨 보던 AFKN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주한미군 측이 “미국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AFKN을 케이블TV에서 재송신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재방송 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3. 카투사

1) 카투사의 탄생

미군 군복에 한국 계급장을 달고 미군부대에서 미군과 함께 일하는 병사. 한국전쟁과 미군의 주둔으로 탄생한 카투사라는 독특한 제도이다. 카투사 (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주한미군부대 한국군지원단)란

주한미육군부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 육군요원을 뜻한다. 한국의 지리 언어 문화 등에 익숙하지 못한 주한미군이 한·미 연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군과 미군을 연결해주는 것이 카투사 임무의 핵심이다. 주한 미지상군의 전투-행정-지원부대에 소속돼 작전, 행정, 군수 등 각종 업무를 맡고 있다. 미군으로부터 전반적인 지휘를 받지만 인사행정 및 정신교육분야만은 한국군지원단을 통해 한국군의 통제를 받는 이중의 명령체계에 놓인 군인들이다.

카투사는 6·25전쟁 중이던 1950년 8월 이승만대통령과 맥아더장군 사이의 비공식 협정에 따라 창설됐다. 당시 초기 전투에서 많은 병력이 손실돼 병력충원 문제가 심각해진 미군은 한국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특히 9월 중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맥아더장군 입장에서는 병력증원이 절실했다. 결국 미국측의 요청으로 한국인에 대한 강제징집이 실시돼 일본에 주둔해 있던 미 7사단에 배속된 것이 카투사의 효시이다.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이 발간한 <카투사의 어제와 오늘>에 나타난 ‘카투사의 탄생’ 풍경은 이렇다. 1950년 8월을 전후해 주로 피란민이 많이 몰려 살던 대구와 부산 등지의 거리. 한국군과 미군이 길 가던 장정을 불러세우고는 다짜고짜 소총(M1)을 메게 한다. 소총이 땅에 끌리지 않을 정도의 키를 가진 장정이면 그대로 징집됐다. 이들은 시 외곽의 빈 건물 등 집결지에서 대기하다가 일정 인원에 이르면 부산으로 보내졌다. 이렇게 모인 ‘최초의 카투사’ 313명이 1950년 8월16일 일본배로 부산을 출발해 일본 요코하마를 향해 출발했다. 그 뒤 이런 이동은 계속되어 8월말까지 매일 2천여명의 카투사 신병보충선이 부산항을 떠났다. 마지막 병력보충선이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한 것은 8월 24일, 이때까지 모인 한국군 보충병은 8,625명에 달했다. 일본에 도착한 카투사들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7사단에 배속돼 제식·소총조작·조준연습·가상실전훈련 등 5일정도의 훈련을 받은 뒤 한국 주둔 미군사단에 보충돼 전선으로 투입됐다. 이들은 ‘K-’로 시작하는 군번만 가진 채 구체적인 소속도 없이 전투에 내몰렸다.

카투사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가한 것은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9월 15일경이었다. 서울이 함락된 뒤 미 7사단 병력을 중심으로 인천상륙작전을 구상하던 맥아더 장군은 병력보충을 위해 카투사들을 동원키로 한다. 이들은 상륙작전에 투입된 미 7사단과 해병 5연대,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부대에 배치돼 소총수, 운반 및 보급병, 검문소 위병, 통신병, 탄약 운반병 등의 임무를 맡았다. 이들은 강제 징집된 데다 교육수준이 낮아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훈련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미 본토 증원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충알받이’로 내몰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9월18일 인천에 처음 상륙한 7사단 32연대병력 5천1백14명중 36%인 1천8백73명이

카투사였다.

초기 카투사들은 미군들로부터 믿을만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여 식량을 나르거나 탄약을 공급하는 역할에 머물렀으나 점차 전투경험이 쌓이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카투사들은 인제·원통의 가칠봉전투, 원산 상륙작전, 장진호전투, 양구의 편치불전투, 폭참힐전투 등 미군이 중심이 된 각종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미군전사에 기록되어 있다. 한국전쟁 중 4만 3,660명의 카투사가 미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만 1,365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다. 초기 카투사 대부분은 군번도 없고 계급도 없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카투사는 이렇듯 처절한 피의 역사를 갖고 있다.

2) 전 세계에 하나뿐인 ‘독특한 부대

휴전 이후에도 카투사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6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카투사의 일상 풍경은 크게 변하였다. 1950년에 최대 2만 6,021명을 기록했던 숫자가 2011년 1,920여명으로 대폭 줄었고 병영생활의 처우와 지위는 미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게 있다. 이들이 ‘누구인지’ ‘왜 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55년 동안 아무런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운영돼온 탓이다. 카투사 제도는 1950년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연합군사령관간의 비공식적인 구두 협정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이후에도 한·미간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대신 실무 차원에서 마련된 미8군 600-2 규정과 대한민국 육군 규정 302가 전부다. 그나마 있는 규정도 서로 충돌한다. 미8군 규정 600-2에는 ‘카투사 요원은 주한미군 육군 부대에 예속되어 있으나 미군은 아니며 미국 육군 군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는 정반대로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카투사)의 구성원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작 카투사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야 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모범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카투사와 같은 성격의 병력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 미군은 유럽이나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지만 주둔국의 병력을 증원받아 운용하는 시스템은 카투사가 유일하다. 미군 7만명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미군을 지원하는 일은 모두 ‘미군이 고용한 민간노동자’들이 담당한다. 고용 관계인 용병과 달리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이 타국 군대에 제도적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도 카투사가 유지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결국 한·미 양국간의 현실적인 요구 때문이다. 우선

미국 정부입장에서는 한국군을 활용함으로써 인원이 부족한 주한미군의 병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었으며 한국이라는 주둔지에서 그들이 편히 지내기 위해서는 한국관련 업무를 대행할 영어가 가능한 병력 역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국정부로서도 전쟁이 끝남에 따라 이루어진 급속한 미군철수와 일시적 병력부족현상을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필요가 없었다.

카투사가 주한미군에서 차지한 비율은 70년대 이후 평균 20%수준에 달했다. 미군의 조직체계 유지 및 역할수행 면에서 결코 작지 않은 일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비면에서도 카투사 제도는 80년대 중반 기준으로 미군에게 연간 5천만~8천만달러의 경비절감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카투사는 한국군과 동일하게 한국군에서 월급을 받고, 보급품은 미군에서 받는다. 미군 처지에서는 값싼 고급 인력을 제공받는 셈이다. 한국군지원단 분석자료에 따르면 카투사를 미군으로 전원 교체했을 경우 미군에게 9천만달러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미군은 카투사를 통해 병력의 보충과 함께 경제적 비용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이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카투사를 이렇게 말했다. “(카투사)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군기가 있었으며 지식 습득 능력이 우수했다. 그들은 미군 병사 한 사람이 동두천에서 하룻밤에 맥주를 마시며 써버릴 수 있는 액수보다 적은 3달러(1973년 기준)를 매월 받을 뿐이었다.” 카투사는 인건비 적게 드는 최고급 인력의 비정규직 노동부대로 파월 중령은 그때 이미 아웃소싱의 이점을 체험했던 셈이다.

3) 카투사 선발의 역사

1951년 100%신병으로 징집되던 카투사제도는 1957년부터 신병과 기간병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가며 선발하게 된다. 그러나 복무기간 중인 기간병을 차출해 나가는 것이 청탁비리를 유발하자 1968년에는 논산훈련소 신병을 대상으로 차출하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리가 사라질 리는 없다. 너나없이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 시절, 무엇이든 풍족한 미군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혜였으며 미군 부대는 당시 한국군에 만연했던 구타와 기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이기도 했다. 결국 1982년 민간인을 대상으로 카투사(KATUSA)선발 시험이 처음 치러졌다. 미군 용병(傭兵)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이라도 늘려보자”는 계산에 너도 나도 시험을 치다 보니 경쟁률이 20:1까지 치솟는 경우도 생겨나면서 카투사고시라는 단어까지 생길 정도였다. 결국 1987년 민간인 공개모집과 논산훈련소 차출의 두 가지 선발방식을 혼용하게 되는데 민간공개모집은 ECL(영어이해수준),

국어, 영어, 윤리 등의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선발과정에서의 비리는 끊이지 않았고 1998년에 이르러 다시 100%공개모집방식으로 전환하고 토익(TOEIC)성적을 선발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대한민국 육군을 선발하는데 미국이 인정하는 미국의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육군으로 선발 되는 것이다. 2004년부터는 신체등급 1~3급인 현역 대상자로서 일정한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획득한 대한민국 미필 남성이면 카투사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가능 영어점수는 토익 780점, 텡스 690점, 토플 IBT 83점, G-TELP Level 273점, FLEX 690점 이상이다.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보들을 점수대별로 3그룹으로 나누어 추첨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다. 개선된 것이라면 각 그룹에서 고득점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발되지 않는다는 것과 나아가 선발과정에도 지원자대표 및 관련기관이 입회하고 그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면서 문제점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가능 횟수는 1회로 제한되어 있다.

4) 병역의 양극화

시험을 치러 카투사를 뽑을 때는 경쟁률이 20~30대 1에 달할 만큼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다. 카투사 선발시험이 사법·행정·외무고시와 함께 '4대 고시'로 불렸을 정도. 판·검사 되기보다 '카투사(士)' 되기가 더 어렵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카투사가 이렇게 인기를 끈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미군이라는 선진국가의 병영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카투사가 생활하는 미군 부대의 생활여건은 한국군 부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 20명 안팎의 병사가 한 내무반을 쓰는 한국군 부대와 달리 미군 막사에서는 2~3명이 방 하나를 사용하는데, 침대 책상 옷장 냉장고 같은 편의시설은 물론 에어컨과 히터까지 완비돼 있다. 샤워실에선 24시간 온수가 나오며, 식당에서는 다채로운 육류와 생선요리, 샐러드, 패스트푸드, 각종 음료를 식성에 따라 먹을 수 있다. 또한 여가시간에는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레크리에이션 센터, 클럽 등 다양한 영내 복지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무원과 짜고 물건을 빼돌리는 사례가 종종 있어 미군의 PX는 사용할 수 없다.

둘째 카투사는 미군들과 함께 일하고 같은 막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생한 미국 현지 영어와 접할 기회가 많다는 점이다. 일정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춘 자만을 선발했지만 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도록 주기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바로 카투사이다. 물론 미군이 더 편해지기 위한 교육이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카투사는 미군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주 5일 근무제이며 업무시간

(대개 오전 8시~오후 5시) 이후에는 자유시간이다. 복귀시간만 준수한다면 업무시간 이후에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외출도 가능하다. 부대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금요일 일과 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외박도 가능하다. 한국군에게 주어지는 정기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공휴일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이나 미국 독립기념일과 같은 미국 공휴일을 모두 쉰다. 미군이 쉬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 할 일이 없어 함께 쉬는 것이다.

현재에도 카투사의 인기는 여전히 높아 입대자들도 특정 학교나 지역 출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카투사에 입대한 8,151명의 출신대학과 지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이 30%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 대기업의 SKY 출신 비중(20%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카투사의 70%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출신으로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출신이 3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시대에 '병역 양극화'라는 또 다른 양극화현상을 보는 듯하여 씁쓸하다.

제 5 절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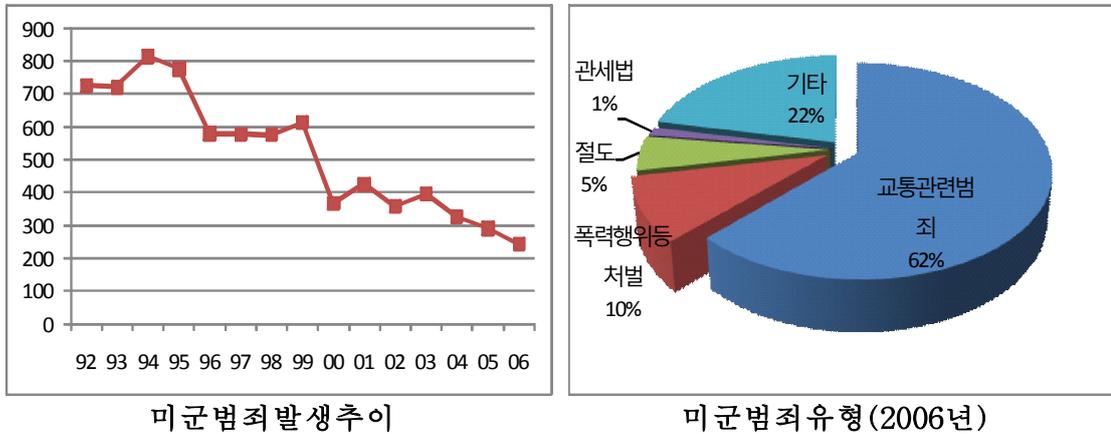
1. 주한미군 범죄

1) 주한미군범죄의 추이와 유형

주한미군 범죄는 언론과 국민들의 예민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식통계상으로는 지난 20여년간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또한 주한미군 범죄는 통계적으로 해마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는 감소하고 영향이 미미한 경범죄의 상대적 비중은 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군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관련 범죄로 2006년 전체 범죄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견 미군범죄는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하고 만연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군범죄가 감소한 요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 통계상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1999년 10월 이후 피해액 200만원 미만의 단순대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불입건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범죄통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가 290건에서 2000년에는 38건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전체 미군범죄건수가 크게 감소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주한미군재편에 따른 미군수의 감소 역시 미군범죄가 감소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8> 미군범죄 발생추이와 유형



한편 미군에 의한 교통관련범죄는 폭력, 살인, 강간 등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통관련범죄는 뺑소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적지 않다. 게다가 교통관련사고의 경우 우리나라의 재판관행사는 18%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미군부대안으로 사라진 가해차량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미군범죄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는 법무부가 기타로 구분한 항목인데 여기에는 폭행 및 상해치사를 포함하는 살인, 마약,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일반적으로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범죄가 포함된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물론 사람 사는 곳이면 범죄는 언제 어디서나 있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범죄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것은 “외국인에 의한 내국인에 대한 범죄”라는 민족적 감정외에도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로 인한 고통을 한국인 피해자가 떠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주한미군의 범죄는 그 사법적 처벌이 내국인 범죄에 비해 상당히 어려웠다. 이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는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최근까지도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주한미군 범죄 용의자에 대한 우리 측의 신병확보가 어려웠기에 그만큼 수사 및 재판, 형집행 등의 모든 단계에서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종의 “성역”이자 “치외

법권”으로 인식되었고 실제로 살인,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에 의한 단순 폭력이나 폭행, 절도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가 “재수 없는 일”로 치부하고 참고 인내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실제로 미군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율은 최근 20%초반대까지 증가하였으나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5%대에 머물렀다. 평소에는 미군범죄에 대해 별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막상 미군이 개입된 범죄를 당하고 나면 모든 게 막막해진다. 보상받기도 쉽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 부대 담장 안으로 자취를 감춰버린 가해자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다.

2001년 1월 개정된 한미행정협정(SOFA)은 국민들의 이와 같은 분노와 반발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즉 주한미군 범죄용의자에 대한 신병인도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체포시부터 계속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수정은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측 형사재판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변화이지만,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주한미군의 사법적 특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와 불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 유형별 주한미군범죄 사례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는 그 발생빈도나 피해범위에 관계없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92년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윤금이씨 살해사건은 미군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공론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실 글로 묘사하기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살해 당시 윤금이(당시 26세)씨는 나체 상태로 급소에는 맥주병 2개가 꽂혀 있었고 국부 밖으로는 콜라병이 박혀 있었다. 또한 항문에 우산대가 꽂혀 있었다. 온몸은 피멍과 타박상을 심하게 입어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다. 너무나도 잔인한 살해수법과 참혹한 살해현장은 전국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와 미군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1990년대 미군에 의한 살인사건은 주로 동두천 등 미군과 접촉이 많은 기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96년에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서 이기순씨가 미 제2사단 뮤니크 에릭 스티븐 이병에 의해 예리한 흉기로 목이 반쯤 잘린 상태로 살해당한 사건도 대표적인 기지촌 여성 살해사건 중 하나다. 또 1998년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잔동에서 미군 헨릭스 티모시 제롬이 허주연씨를 때

려 숨지게 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무기력한 한국경찰의 모습은 우리를 더욱 기막히게 한다. 주민의 제보에 의해 경찰들이 미군기지로 범인을 잡으러 갔을 때, '제품이 휴가 중이라 들여보낼 수 없다'는 미군의 말에 3일 후에야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루한 수사 끝에 사건이 발생한 지 꼭 5개월 만에 제품은 '폭행치사죄'로 기소되었고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을 들어 1999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대 들어 반미감정과 주한미군범죄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 발생한다. 비록 교통사고였지만 2002년 미군전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는 그 처리과정에서 엄청난 국민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에서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장갑차가 갓길을 걷고 있던 여중생 신호순, 심미선양(당시 14세, 조양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을 깔고 지나가 두 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진 사건이다. 미군측은 "이번 사고는 결코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닌 비극적인 사고"임을 강조하며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림 3-19> 사건현장 및 추모비 모습



사건현장



효순미선 추모비

한국 검찰은 관련 미군들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냈으나 미군당국은 "동 사고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이제껏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미군의 재판권 포기를 거부했다. 이후 동두천 캠프 케이시 내 미 군사법정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기소된 미군 2명 모두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고 이들은 무죄 평결이 있는 지 5일만에, 찝찝한 사죄성명만을 발표한 뒤 유유히 한국을 떠나갔다. 이는 곧 수많은 한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너무도 비상식적인 재판 결과에 그동안 이 사건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항의대열에 합류하면서 전 국민적인 반미열풍을 확산시키

게 되었다.

이외에도 2002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미 군용면허만 가지고 혈중 알콜농도 0.10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미군이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으며, 2003년 오산시에서는 미군이 만취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비스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세 명은 그대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 한명이 사망하고, 운전자를 포함한 동승자 4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사고 직후 미군 온켄 병장은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동승한 미군 2명과 함께 차를 버리고 도주해 버렸다. 2005년에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우유 배달용 손수레를 몰고 길을 건너던 여인이 미2사단 소속 2.5t 화물트럭(LMTV M1078)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고 다음날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지휘관들도 직접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한국식 예법에 따라 큰절까지 하며 조문을 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해 유족에게도 5백만원의 위로금을 전했다. 여중생 사건 당시 100만원의 위로금을 전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액수였다.

미군에 의한 폭행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1994년 일을 마치고 부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한국인이 동두천시 보산동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미군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척추를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미군들이 부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희롱을 하자 이에 항의하다가 몰매를 맞은 것이다.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한 피해자는 6개월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았으나 그에게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과 노동력 상실률 40%의 장애인단뿐이었다. 그러나 폭행한 미군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5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미군 워커 일병이 동료 미군 2명과 함께 각각 병맥주를 마시며 걸어가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의 얼굴을 가격, 얼굴 전면이 20cm 가량 찢어지는 피해를 입혔다. 사고 직후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되어 바닥에 쓰러진 조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2차에 걸친 봉합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상처를 없애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아야하고, 영구적으로 반흔이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다.

미군에 의한 성범죄 역시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1996년에는 경기도 평택 예바다 농아원에서 미군이 농아원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1997년 동두천시 광암동에서는 미군이 개인집에 들어와 작은방에서 잠자던 유치원생의 팬티를 벗기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주한미군 훈련 피해

1) 매향리사격장, 포연속에 사라진 매화향기

미군의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를 들 수 있다. 매향리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봄이면 매화 향기가 가득하다 하여 사람들은 예부터 이곳을 매향리라 불렀다고 한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군과 유엔군이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앞바다에서 사격훈련을 시작한 뒤 1955년 미군 전용사격장으로 미군에 공여됐다. 그때부터 미군에겐 그곳이 매향리가 아닌 '쿠니 사격장'일 뿐이었다. 총 면적 2,322만여㎡ 가운데 농섬과 곡섬을 포함한 육지가 95만여㎡이고, 나머지는 바다다. 해상지역 중에서도 사격이 집중됐던 농섬과 곡섬 주변 갯벌 면적은 국방부 추산으로 147만여㎡나 된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매향리 주민들은 매화 향기 대신 포탄 연기를 맡으며 비행기 폭음을 인내하며 살게 된다. 지붕 위를 스치듯 저공 비행하는 폭격기. 낮에도 밤에도 미공군의 기총 사격과 폭탄 투하 훈련은 계속됐다. 미국 공군의 전투기와 공격용 헬리콥터 등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한 달 평균 20일 가량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일 10회 이상 그리고 매회 20분 이상씩 폭탄 투하와 기관총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2005년 사격장이 폐쇄될 때까지 이러한 전쟁터 같은 불안과 공포는 50년 넘게 지속됐다.

매향리의 고통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0년 5월 미 공군 전폭기의 오폭으로 매향리 주민 6명이 부상을 입고 농가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반세기에 걸친 매향리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1951년 미군 전용사격장이 들어선 이래 오폭사고로 사망한 주민만도 10명. 매향리는 임산부의 잦은 유산을 물론이고 폭격 굉음으로 인한 자살, 죽어버린 갯벌과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이미 통곡의 땅이 되어 버렸다. 폭격기가 바로 위로 비행했던 집에서 아들이,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어머니가 차례로 농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이후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위한 투쟁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마을에서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고, 종교인사 등이 폭격중단을 요구하며 사격장을 점거했으며 또 각 계인사 2백여 명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미군은 2000년 8월 이곳에서의 사격훈련을 중단했고 2005년 8월 사격장은 폐쇄됐다. 그리고 매향리 주민이 국

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입은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20년간의 싸움 끝에 사격장은 폐쇄됐고 배상판결까지 받았지만 매향리 주민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2007년 5월 14일 MBC 뉴스가 그 동안의 폭격음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취재한 결과 매향리 주민들은 평생을 겪어온 폭격음 때문인지, 성격이 거칠고 난폭해졌다고 한다. 1995년 이후 10년간의 사망자 명단을 토대로 자살자를 다시 집계해 본 결과, 우리나라 연평균 자살률 보다 1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향리에서만 60년대 이후 총 170여가구에서 23명의 자살자가 있었고, 자살 미수자도 5명, 살인 가해자와 피해자도 각각 1명씩 있었다고 한다. 이들의 정신적 고통은 지난 2000년 한 의사단체의 약식조사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불안증과 공포, 적대감 등이 일반인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다. 사격장 폐쇄 뒤에도 자살이 이어졌고 주민들간의 다툼도 끊이지 않았다. 뉴스 인터뷰에 응한 한 전문가는 “소음이나 환경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치유가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의 상처와 후유증은 여전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매화향기 가득한 매향리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2) 영평사격장, 지금도 계속되는 고통

사격장관련 주민피해 중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사례는 포천의 영평사격장이다. 영평사격장은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에 위치한 409만평 규모의 미군전용 사격장이다. 영평사격장의 면적은 일산 신도시에 육박하는 것으로, 지난 1954년 세워진 뒤 50년이 넘게 전투기와 헬기, 탱크 등의 다목적 종합 사격장으로 이용되어 왔다. 해발 662 미터의 불무산을 표적으로 하는 영평사격장은 원거리에서 산의 7부 능선을 표적으로 무차별 포격이 이뤄지기 때문에 표적을 벗어난 실탄이나 바위 등을 맞고 튕겨져 나간 포탄이 산너머 민가를 덮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야미리 마을 뒤편의 높이 662m 불무산만 넘으면 바로 사격장이고, 마을과 사격장의 직선거리는 2~3km에 불과하다.

특히 사격장 주변에 위치한 보장초등학교와 영평초등학교에서 측정한 자주포 발사 당시 소음은 100dB로, 평상시 소음이 40~50dB임을 감안하면 난청 유발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의 소음에 해당한다.

소음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포탄 유탄이 날아들어 인명과 가축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에 부엌일을 하던 주민할머니가 지붕을 뚫고 들어온 전차 포탄에 어깨를 맞는 일을 당하기도 했다. 같은 마을의 또 다른 집

에서는 몇 년 전 포탄이 축사에 떨어져 기르던 염소와 개 등 가축 수십마리가 몰살당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사격장 인접지역이 아닌 곳까지도 오발탄이 날아든다는 점이다. 헬기와 전투기 등에서 잘못 발사된 실탄이 수 킬로미터 떨어진 민가까지 날아가는 것이다. 포천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군사격장은 미군 4곳과 국군 4곳 등 무려 8곳으로 이 지역에서 발생한 오발탄과 굉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지난 10년간 신고된 것만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은 포탄이 민가로까지 날아오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고가 날 때마다 약간의 위로금으로 상황을 모면해 가고 있을 뿐 관계당국의 대처는 미흡하기만 하다.

사격장 주변의 주민피해 외에도 미군훈련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민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005년에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민통선 지역 내 농사를 짓던 배밭 인근에서 미2사단 소속 헬기의 저공비행으로 수확을 앞둔 배 2천여개가 떨어지는 등 배밭 총 5천여평 중 2천여평 가까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3년에는 미군 전략 정찰기(U-2)기가 오산 비행장으로 귀환 중,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 제약단지 옆 약공단 주유소 바로 옆으로 추락하여 주민들과 주변에 정차한 차량들이 파손되었고 주변 가옥이 전소되는 사고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산불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동두천에만 최근 3년간 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5ha의 임야가 소실되었고 1996년에는 산불진화 중 동두천시 산림계장을 포함한 7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미군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안보라는 면에서 본다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매우 실제적이고 직접 피부에 와다는 불만사항일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이를 이해하는 자세를 보여야겠지만 피해를 줄이려는 최대한의 노력과 함께 피해발생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3. 환경오염피해

1) 주한미군과 영화 ‘괴물’의 탄생

몇 년 전 개봉 3일만에 관객수 100만을 돌파하며 흥행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괴물’을 기억할 것이다. 이 영화는 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뒤 정체불명의 괴물이 자라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내용으로 미군부대에서 독극물을 싱크대를 통해 그대로 흘려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영화의 봉준호 감독은 영화 속 ‘괴물’이 탄

생하는 원인이 된 미군의 독극물 방출이 2000년 실제 일어난 '맥팔랜드 사건'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맥팔랜드 사건'은 2000년 2월 미8군 영안실에서 당시 주한미군 영안소 부소장인 알버트 맥팔랜드의 지시로 군무원이 시체 방부처리용으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20박스 분량의 용액 470병(1병 용량 16온스, 475ml)을 영안실 싱크대를 통해 하수구에 버린 사건이다. 미군 사망 시 시체의 본국 송환을 위해 방부처리하는데 쓰이는 포름알데히드는 용액 30ppm정도에 노출되면 질병증상이 나타나고 100ppm 이상에서 1분 이상 노출 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한다. 원칙상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처리하게끔 되어있으나, 상급자의 지시로 싱크대로 버려져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하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독극물 방류사건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포름알데히드의 방류량이 한국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라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더구나 기소가 된 이후에도 '공무수행중인 미군속에 대한 재판권은 한국에 없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조항을 내세워 재판을 거부한 미8군사령부의 발언은 미군의 환경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불평등한 SOFA의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한국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림 3-20> 미 8군 영안실과 약품모습(사진: 녹색연합)



포름알데히드 약품



미8군영안실

최근 주한미군은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제대로 치유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반환하기로 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결국 토양 오염 등을 치유하는 데 드는 비용 수천억 원(정부는 1,000억 원, 환경단체는 5,000억 원 추정)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 것이다. 한편 경기도 2청에 따르면 환경부의 동두천, 파주, 의정부 등 미군기지 12곳의 주변오염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조사대상 12곳 모두 오염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기준치를 훨씬 넘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자칫 오염된 미군기지에서 또 다른 '기형 괴물'이 등장하는 <괴물 2>가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2)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미군에 의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은 미군부대내의 부적절한 정화시설로 인한 중금속오염 공업용수의 유출, 건축물폐자재와 음식물쓰레기의 불법투기 및 매립, 폐유 방출, 유해약품방출 그리고 송유관 파열로 인한 기름유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은 지하수 및 하천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기지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한 농작물 재배와 자연생태계 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군 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는 오랫동안 발생하여 왔으나, 피해사태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축적은 물론이고 정확한 원인 규명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90년대 들어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과 자연보전에 대한 각성과 관심이 제고되었고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 특히 '이방인에 의한 우리 땅 오염' 문제는 국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사실 앞서 말한 독극물 한강 방류사건 외에 그 이전에도 미군부대에 의한 수질 오염의 예는 많다. 예를 들어 1993년 3월에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K-55 미 공군기지에서 하루 1천6백여톤의 각종 오,폐수를 정화하지도 않은 채 흘러보내 근처 개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 내에서 분말활성탄 여과수를 신천으로 무단방류하여 신천변 동두천 지방산업단지 섬유업체에서 원단 등 제품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부주의나 고의에 의한 기름유출도 문제지만 미군기지내 기름탱크와 송유관이 낡아 땅속으로부터 기름이 새어나 오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기름유출사고는 미군기지내는 물론 인근 논밭과 지하수, 하천까지 오염을 시키며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8년 발생한 미8군 메디슨 통신부대 기름 유출 사고는 대표적인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정상 부근에 소재한 미군기지내 경유탱크를 연결하는 지하송유관이 터지면서 30여년 동안 무공해지역으로 보존되어 왔던 백운산과 왕림천 일대 계곡이 회복불능의 오염지역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환경전문가들에 의하면 사고지역의 토양층은 20-80cm 두께로 광범위하게 깊게 배여 있어 앞으로 100년 이상이 경과해도 정상회복이 불가능한 최악의 산악 환경사고라고 한다. 또한 2004년에는 영평 사격장 내에서 사용하던 PVC 재질의 직경

10m, 높이 2m 가량의 원형 유류저장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마을 도랑에 50m 정도의 기름띠가 발견되었다. 2002에는 미2사단 소속 파주시 캠프 에드워드내 주유 시설 바닥 3군데 금이 가면서 이 틈새로 1만 4천 800리터 분량의 휘발유가 누출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 7월 26일과 2007년 11월 27일에는 캠프 캐슬에서 폐유가 인근 농경지로 무단 방류되어 인근 농경지의 발작물이 고사하고 폐유로 인한 악취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렇듯 미군부대 주변의 땅들이 미군으로 인해 기름진(?) 땅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림 3-21> 영평사격장 기름유출(사진: 녹색연합)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 외에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역시 큰 문제다. 환경단체들은 미군기지는 외부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폐기물의 불법 매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98년에는 동두천 미 2사단 케이시 부대 내에서 영내 건축과정에서 나온 폐아스콘, 콘크리트 등과 암을 유발하는 석면, 우레탄 등 수천만톤의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특히 건축폐기물 중에서 석면의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다. 석면은 천연광물질로 내화성과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타일이나 보일러실 환기통 등 건축자재로 널리 쓰이지만 대기로 누출돼 사람이 흡입하면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기지의 석면오염실태는 지난 2000년 5월 미군무원 노조가 주한미군기지내 석면오염시설을 방치한데 항의하여 주한미군사령관과 기지사령관들을 미연방정부에 제소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미군이 기지내 재건축으로 인한 건축폐기물을 인근에 방치하거나 매립한 사실이 곳곳에서 발각되면서 환경전문가들은 석면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석면오염을 예방하려는 조치로 기지 안 건물과 설비에 들어 있는 석면의 실태조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실제 제거작업은 석면먼지가 발생할 위

험이 매우 높은 경우와 건물 개조 또는 철거 등의 경우에만 진행했다. 결국 대부분의 건물과 설비 속 석면은 여전히 방치돼 있는 것이다. 미군이 90년간 사용하고 떠난 필리핀 미 클라크공군기지 자리에 이주해 살던 필리핀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거나 사산이나 기형아를 출산하고 각종 피부질환이나 심장병 등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가 새삼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말한 환경오염보다는 심각성이 덜하지만 아름다운 우리의 산을 낙서로 훼손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의정부 천보산 바위에는 미2사단 마크가 산 아래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페인트로 칠해졌으며 서울 근교의 명산으로 꼽히는 수락산 바위도 의정부 스탠리 부대 소속 주한미군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의미 없는 낙서들로 훼손되었다. 소중한 우리의 몸에 지우기 어려운 문신을 새겨 놓은 것이다.

4. 미군 공여지

1) 쇠목마을과 공여지반환 운동

미군이 소유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군사상 이유로 소유권자의 동의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다. 사격훈련장 안전지대, 미군송유관, 수도관, 전선 및 기타시설물 보호를 위해 확보한 토지로 미군공여지 중에서도지역공여지가 이에 해당된다. 동두천시 쇠목마을은 지역공여지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그림 3-22> 쇠목마을과 공여지 반환운동



쇠목마을로 입구 길에 세워진 미군 푯말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 항의집회

사진: 인터넷한겨레, 2002. 07. 30, 사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쇠목마을은 동두천 시내에서 불과 승용차로 20분 거리에 있지만, 버스도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이다. 쇠목마을 주민들은 미군기지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 마을을 에워싼 미군기지(미2사단) 때문이다. 길을 따라 가노라면 “이 지역은 미국 정부의 재산임.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마을에 미군공여지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가 두드러지게 된 것은 1995년 주민 김병규씨가 자신의 소유지에 음식점과 주택을 짓기 위해 동두천시에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내면서 부터다. 동두천시는 반년이 지난 뒤에야 당해 토지가 주한미군부대 인근 사전협의 대상지역(공여지)라는 이유로 건축 불가를 통보하였다. 자신의 토지가 미군에게 공여되었음을 알게 된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다.

1996년 3월에는 동두천시 쇠목마을 논과 밭에 폐탱크와 장갑차 8대가 배치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미군이 주민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나 동의없이 기존 사격장 바로 위 쇠목마을 일대 사유지 약 9,000㎡에 포사격장을 신설하기 위해 표적물로 탱크를 갖다 놓은 것이었다. 미군의 사격장 확장 계획이 알려지면서 졸지에 자신의 땅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은 사격장 신설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경운기로 현장을 막고 가스통을 싣고 항의시위를 하는 등 격렬한 반대운동을 벌였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사격장 신설부지내에 탱크를 배치한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사격장이 설치되면 유탄이 날아들어 주민들이 위험과 공포속에 시달리게 되고 사격장 부지가 쇠목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 바로 옆에 위치하여 사격장 설치시 통행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주민들의 시위가 잇따르자 결국 포사격장 건설은 철회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쇠목마을 주민들의 수난은 계속되었다. 2000년 초 또 다시 쇠목마을에 탄약고를 짓는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쇠목마을 주민들은 겨울 석달 동안 동두천 시내에 천막을 치고 탄약고 건설 반대 농성을 하면서 탄약고가 들어설 부지 입구에 4미터 높이의 해원탑을 세웠다. 국방부와 미군에서는 이 탑을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지금도 이 해원탑은 쇠목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포크레인과 탱크로부터 지키고 있다.

<그림 3-23> 쇠목마을 공여지 반환운동기념비와 해원탑



주한미군공여지반환운동 기념비



쇠목마을 입구, 주민들이 쌓은 해원탑

사진: 동두천 시민연대

13명의 주민이 구들돌을 다듬고 난 잡석을 모아 꼬박 한 달을 걸려 만든 ‘한을 푸는 탑’이란 이름의 해원탑 앞의 비석에는 돌탑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쇠목주민에게 지워진 멍에같은 고통의 세월이 50년 동안 이어지고 있으니, 미군 사격장과 탄약고, 훈련장 등이 주민생활을 방해하는 악영향이 그것이다. 우리 선조들께서 살아온 한의 세월에 구들돌을 다듬고 난 잡석을 모아 후손들이 뜻을 합쳐 여기 탑을 조성하는 것은 통한의 시절을 회고하며 먼저 가신 선조들을 위로하고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한의 사정을 풀고자 현 주민들이 해원의 탑을 세운다.”

2) 공여지 관련 지역개발 제한 사례

미군공여지로 인한 피해 중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 케미칼공장 건설 중단 사례를 들 수 있다. (주)국제 케미칼은 피혁원단 가공 공장을 짓기 위해 동두천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동두천시 미2사단 인근에 95년 3월 완공예정으로 공장을 건축했다. 캠프 호비 미군 탄약고로부터 30여m 떨어진 지점이였다. 7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95년 2월 돌연 국방부로부터 건물 철거지시가 내려와 공사는 중단되었다. 미군당국이 공장부지가 미군공여지이고, 자신들의 규정에는 탄약고 300m 이내에는 민간인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며 국방부에 항의하면서 국방부가 철거지시를 내린 것이다. 동두천시에서는 중재안으로 공장주가 자비로 방어벽을 설치하는 안과 문제가 되는 탄약고는 이동식 탄약고이므로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두 가지 모두 미군당국은 거부하였다. 결국 국제 케미칼 측은 공장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 공여지책으로 “언제라도 미군당국이 요구하면 즉각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철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야, 공장 건설을 진행시키게 되었다. 국제 케미칼은 1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외국 회사들과의 계약이 파기되고, 기술자들이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공장가동 역시 미군당국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언제라도 철거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주한미군공여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도시의 40%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내준 동두천시의 경우 도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도로의 개설이나 확장, 수해방지를 위한 공사마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동두천은 시를 관통하는 국도 3호선의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 미군 측과 무려 4년이나 줄다리기를 해야 했고 캠프 케이시의 땅 1천40평에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으로

무려 34억원을 지출해야만 했다. 또한 3호선 국도 확장도 미2사단의 부대 일부 땅(캠프 케이시의 블록담장 227m, 초소1, 창고1, 전신주, 가로등과 캠프호비의 철조망 310m, 초소1, 세차장1, 전신주, 가로등)이 도로에 편입된다는 이유로 1992년 12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무려 5년 3개월 동안 52회 차례에 거친 협의 끝에 시설 이전비 14억5천만 원을 미군측에 지급하고 나서야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미군부대의 존재는 동두천시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도 3호선의 병목현상은 동두천뿐만 아니라 동두천 이북의 연천, 포천 지역의 개발까지도 정체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 뿐만 아니다. 신천개수공사 지연으로 동두천 지역은 3년 연속 수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신천개수공사는 1991년 1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8년 10개월 동안 49회 협의(7년간 공사 지연)를 거쳐서야 공사가 시행될 수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동두천(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당초 노선을 동두천 미군부대(캠프 케이시, 캠프호비)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미군부대의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포천군 가산면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동두천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지 못하여 상대적 발전저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국가 안보를 위해 대대로 살아온 집과 문전옥답까지 다 내어주고 기지촌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살아온 동두천시민들이 교통정체와 계속된 수해 속에서 느낀 답답함과 슬픔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미군공여지의 규모는 앞으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한·미양국이 2002년에 체결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에 의거하여 불필요한 기지들과 훈련장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군공여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민원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반환공여지의 소유권문제, 환경훼손 상태 및 원상복구, 공여지 매입 및 개발비용 등 중앙정부, 주한미군 그리고 지역사회간에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갈등요인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제 4 장

.....

주한미군 관련 정책의 역사와 발전방향

제 4 장 주한미군 관련 정책의 역사와 발전방향

제 1 절

국가정책의 역사와 발전방향

1. 미군과의 첫 만남

미군이 한국에 첫발을 들여놓은 것은 해방 후 1945년 9월 7일 미태평양총사령부의 맥아더사령관의 일반명령 1호에 따른 것이었다. 이 명령 1호의 제1조는 ‘조선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同)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시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미군은 24군단 사령관 존 리드 하지중장의 지휘아래 9월 8일에는 인천항에 9월 9일에는 서울에 입성하였다. 또 포고를 시행하기 위해 9월 19일에는 38선 이남에 대하여 앨런 아놀드소장을 군정장관으로 로렌스 슈이크준장을 경무국장으로 하는 군정청이 설치되었다.

미군정기간인 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약 3년 동안 미군은 특권적 지위를 누렸다. 2차 대전의 승리자였던 미군은 일본군의 무장해체와 점령지배를 위해 한국에 진주하였다는 점과, ‘군정’(軍政)이라는 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미군이 통치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미군의 방침자체가 법이었다.

군정기간동안 미군정은 한국의 민간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군사령부가 군정통치를 위해 필요한 경찰 등 일부 수단적인 기관들을 동원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군정청의 명령에 누구도 이의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미군의 지위는 군정 3년기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에는 같은 25일 맺은 한미잠정군사협정을 통해 미군의 우월적 지위는 지속되었고, 1949년 6월 미군의 1차 철수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한미잠정군사협정은 후의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의 전신이 되었다. 이 잠정군사협정의 내용중에 ‘미군이 한국군을 조직하고 훈련시키며, 무장시킨다’는 규정과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는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미군은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2. 주한미군에 대한 국가 정책의 흐름

1) 주한미군 관련 정책의 역사와 변화

해방 후 미군정기간 즉 한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의 미군은 주한미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점령군 혹은 진주군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정부와 더욱이 그들이 진주하고 있던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미군우위의 매우 일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국가정책이 있을 수 없었다.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난후 곧바로 미군이 철수하였기 때문에 주한미군문제는 한국전쟁 중에 다시 정부의제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에 미군이 풍전등화와 같던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때로부터 우리나라와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전쟁 후 주한미군에게 공여지가 제공되고, 지역사회와 주한미군과의 관계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가. 한국전쟁기의 미군(1945.7.12-1948.7.23)

1950년 7월에 북한의 무력침략으로부터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 미군은 다시 한반도에 발을 들여 놓는다. 전시상황에 다시 참전하고 주둔하게 되는 미군은 참전과 동시에 한국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에 대한 보장을 받고자 하였다.

같은 해 7월12일 미국은 대전에 피난중인 한국정부에 대하여 미군의 법적 지위보장을 요구하여 왔다. 당시 한국정부는 북한의 침공에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의 참전에만 기뻐하는 나머지 미국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외국군대가 자국보호를 위해 자국내에 주둔할 때에는 외국군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했다. 대전협정이라는 이 문서에는 첫째, 미군법무회의가 주한미군 구성원에 대하여 전속적인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것 둘째, 한국인이 미군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하였을 때 그 한국인을 미군이 구속할 것 셋째, 주한미군은 미군 이외의 여하한 기관에도 복종하지 않을 것 등이다.

이 대전협정은 전시하에서 매우 불평등한 상황에서 맺어진 것으로, 1기의 미군정 3년 동안 미군이 배타적이고도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였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나. 휴전후 미군의 지위(1953.7.23- 한미행정협정타결전)

전쟁은 지루하게 계속되다가 38선을 토대로 한 전선교착선을 경계로 한 휴전이 1953년 7월 23일에 체결되었다. 휴전 후 미군의 지위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전쟁 중에 미군의 요구에 그대로 응해 특권적 지위를 부여했던 대전협정을 당연히 폐지하자는 것이 한국정부의 생각이었다. 한국정부는 미군과 중국, 북한간에 맺은 휴전

협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에 대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경제원조, 그리고 미군의 지위를 정하는 한미협정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 11월 18일 조약 34호로 발효됨)이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는데, 이 조약에서 미군의 한국 주둔이 '권리'라고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특권적 지위는 계속된다. 한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정식 명칭을 갖는 이 조약의 4조에서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grant),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accept)”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훨씬 후에 주한미군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체결되는 한미행정협정의 근거가 되었다.

한편, 이보다 앞서 1953년 8월 7일에는 이승만대통령이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와 한미행정협정의 교섭개시를 하자고 약속하였으나, 미국측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분위기는 미국측은 한국의 법질서에 대한 불신, 한국 정치상황의 불안, 그리고 미군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습성화 등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지위의 변경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때마침 이승만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정정불안과 1961년 민주당정권의 등장, 5·16군사쿠데타 등으로 인해 전쟁당시의 대전협정아래 부여된 미군의 특권은 그 뒤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미군이 누리는 특권적 지위는 미군들의 각종 탈선사고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대한 한국민들의 불만은 한미행정협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하였다.

다. 민통선과 미군, 지역사회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비무장지대 이남에 주둔할 수 밖에 없었던 미군은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을 1954년 2월에 설정하였다. 전쟁 전에 이 지역에 거주하던 농민들이 휴전 후 곧바로 하나둘 돌아오게 되자 당시 미 육군 제8군사령관은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귀농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귀농선을 설정한 것이다.

그 후 1958년 6월 휴전선 방어 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면서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고, 귀농선은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민통선 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된 후에는 국토이용의 제고와 북한의 계획적인 선전촌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촌락을 건설한 것이외에는 민간인통제선내에서의 영농 등 모든 활동이 금지되었다. 북한은 선전선동의 전술에 따라 선전촌을 여러개 건설하였고, 반면 한국정부는 1959년부터 99개의 자립안정촌(自立安定村)을 건설하였으며, 1968~1973년에는 12개의 재건촌(再建村), 그리고 1973년에는 2개의 통일촌(統一村)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민간인통제선은 처음에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로 설정되었지만, 2007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서 10km 이내로 변경되었다.

2) SOFA의 체결(1962년 7월 9일)

가. SOFA의 내용과 특징

미군의 특권적 지위는 해방 후 진주군으로서 성격 때문에 시작한 것이었고, 그후 한국전쟁시의 대전협상으로 지속되게 되었다. 외국 군인들이 특권적 지위를 갖고 거리를 활보하다 보니 그들에 의한 크고 작은 범죄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 전쟁후 얼마간은 국민들도 미군의 일탈에 대해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지만, 1962년 무렵에는 미군에 의한 총격사건, 린치사건 등이 빈발하면서 주한미군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여야 한다는 국내의 여론이 형성되었다. 특히 경기도 파주의 한 미군부대에서 한국인 절도혐의자에게 미군장교가 가혹한 매질을 한 사건은 한국민의 감정을 크게 자극하였다.

그 결과 1962년 6월 15일 미국은 조건부로 한미행정협정 체결교섭을 재개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조건이란 협상을 재개하되 협정체결은 한국에 군정이 종식되고, 한협적 민정이 수립된 뒤로 하자는 것이었다. 아무튼 1962년 9월 20일 5·16군사쿠데타로 중단된 협상은 재개되었으며, 4년만인 1966년 7월 8일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및 3개 부속문서 등이 최종문안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7월 9일에 미국무장관 딘 러스크와 당시 이동원 외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되었다. 그 후 6개월 뒤인 1967년 2월 9일 자정을 기해 그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1950년 7월 체결된 대전협정은 폐지되었다.

SOFA에는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형사재판권이 ‘미군의 비공무 중의 범죄에 대하여 한국은 제1차적 관할권을 갖는다. 다만, 미측이 포기를 요구하였을 때 한국측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를 포기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제1차적 재판권이 미측에 있음으로 인해서 손상받았던 한국의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되찾은 셈이다.

또 SOFA 28조는 이 협정 시행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들을 조정 및 처리하는 기구로 한미합동위원회를 두고,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선정과 그에 따른 보상문제, PX물품의 유출 방지, 기지촌 주변의 정화대책, 재판권 포기문제 등을 처리하게 하였다. 이 합동위원회는 산하에 11개 분과위원회를 두었고, 미군을 위한 구역과 시설의 취득 및 해체에 관련된 사항들을 처리하여 왔다.

나. 주한미군주둔과 공여지

미군이 한국을 장기주둔지로 삼게 된 것은 앞서 잠깐 등장한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의 조인결과이다. 이 조약 4조에 의하여 한국정부는 주둔의 권리를 미군

에게 주었고, 미군당국이 원하기만 하면 한국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군에게 영토의 일부를 공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군은 이를 주둔지로 부르고, 한국은 이를 미군공여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즉 미군공여지는 주한미군에게 필요한 군사기지, 훈련장, 탄약고, 생활시설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제공한 것이고 이 땅의 사용권을 미군이 가지게 된다.

그리고 SOFA의 규정에 의해 이들 구역의 공여 및 취득, 반환절차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게 된 이 공여지는 미군 당국의 허락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미군기지의 보안을 위한 조치들에 대해 한국정부는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주둔지의 해당 지역사회가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의무조치에 따라 미군기지 주변에 건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미군당국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게 된 것이다. 해당 공여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는 미군공여지를 궁극적으로 제공하게 되었고, 이들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일체를 유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군과의 합의에 의해 공여하게 된 토지는 미군재배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0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 93개소에 총면적 7,447만평에 달했었다. 이 가운데 포천의 영평사격장 등의 사격장 및 훈련장으로 5,600만평이고, 주둔지는 1,847만평에 달했다. 이들 미군공여지는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전용공여지로서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땅으로 미군기지, 훈련장 및 기타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지역공여지인데, 이는 원래의 토지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미군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땅으로 일종의 안전지대(safety belt)개념이다. 가령 미군의 사격훈련장 안전지대, 미군송유관, 수도관, 전선 및 기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확보한 땅을 말한다. 셋째 임시공여지로서 군사훈련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게 사용권을 주는 땅이다. 2000년 당시에 미군공여지 가운데 전용공여지는 3,602만 7천평, 지역공여지는 1,016만 9천평, 임시공여지는 2,827만 2,000평이었다.

주한미군의 주요 공여지는 전국 93개소이지만 이들 대부분이 의정부, 동두천, 평택, 과주, 포천 등에 있어서 경기도지역이 전국공여지의 77%에 달했다. 이들 공여지로 인하여 경기도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국가나 미군당국은 오랫동안 미군공여구역을 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권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당해 온 지역사회에 대하여 한국정부나 미군당국이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시책도 하지 않았다. 2004년에야 비로소 미군공여구역등주변지역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서 해당 지역에 지원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3) 현재의 미군정책

미군과 관련한 현재의 국가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을 전후하여 고착된 탈냉전시기를 이해하여야 한다. 1990년대 동서독의 통일, 미국의 전통적인

적국이었던 구소련의 붕괴 등으로 위협이 사라지고 국지분쟁과 테러가 세계의 새롭고 주요한 위협이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서는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등에 과거 전통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둔시켰던 미군의 재배치 작업(G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미 양국 간에도 한미동맹 재조정 및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03년 2월에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발표되었다.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의 주요내용은 1단계로 2006년까지 주요 서부축선 미군기지를 의정부 동두천 지역으로 이전 통합하고, 2단계는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 주력부대를 한강 이남인 평택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것이다. 미군측이 이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한반도내 미군을 접경에서의 인계철선 역할을 중지하고, 국제 테러 및 국지전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파견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으로 재편하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2003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회의를 시작하고, 2004년 10월 용산기지와 미2사단 등을 수도 남방의 평택 일원에 주둔지를 확보하여 이전시키는데 합의하였다.

재배치계획의 요체는 한수 이북에 주둔한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과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사령부를 이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수 이북의 미주둔지역(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사회상은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60여년 동안 가장 넓은 공여구역을 내주었던 동두천 등은 지역경제의 20%를 미군기지 경제에 영향을 받았으나, 국가의 다른 대책 없이 기지경제마저 무너지게 되었다. 한편 평택으로서는 새롭게 재배치되는 미군을 대추리 주변에 받아들여지게 되자 주민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게 되었다.

한미행정협정이 주한미군의 주둔국가 내에서의 지위를 정하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된다고 한다면, 주한미군이 주둔지역에 끼치는 손해 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없었다. 주한미군의 주둔의 역사가 1차 주둔기(미군점령기), 2차 주둔기(6·25참전기), 3차 주둔기(전후 근대화기)를 지나는 동안 오히려 미군의 주둔은 지역사회에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 준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재배치논란 이후에는 그동안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미군주둔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국가로서는 미군의 한반도 안보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미군재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자 평택시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2004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이 그동안 미군공여구역에 별다른 지원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책을 버리고 미군주둔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 국가가 국가예산과 정책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가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기존에 미군공여구역이었던 평택이외의 동두천, 부산, 파주 등지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희생을 치

른 지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원 없이 신이전지만 지원하는 국가정책에 대하여 비난이 일었다. 국가가 2006년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한 배경이다. 하지만 국가로서는 미군의 재배치지역인 평택으로의 이전을 위하여는 막대한 지원책을 약속하였지만 다른 공여구역 특히 동두천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형평을 잃은 지원책만을 내놓았다. 한편, 그동안 주한미군의 사령부가 있던 용산지역에는 주한미군사령부이전 흔적지를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2007년)도 제정되었다.

가. 평택지원법

서울 용산기지와 주한 미 2사단의 평택지역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본예산과 별도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평택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두가지 골자는 첫째가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다른 곳으로 편입하여야 하는 주민의 권익보호, 둘째는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규정하는 것이다.

모두 5장 36개항으로 이뤄진 이 법에서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조항은 이주정착특별지원금(세대당 1,500만원), 생활안정특별지원금, 택지개발지구내 단독택지 및 근린상업용지 공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금 등이 규정되었다.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근거로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세입으로는 공여해제 반환재산의 매각대금,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전입금, 채권, 차입금 등), 시의 장기 개발계획 수립 때 정부가 시 주력사업을 지원하고, 평택지역에 대해 수도권 정비계획 법상 불허된 14개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과 4년제 대학의 증설·이전을 허용토록 했다. 또 경기도가 추진 중인 500만평 규모의 평택 국제평화도시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미군기지 배후도시 지역의 택지 지정을 가능토록 했다. 이러한 지원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2018년까지 18조 8천억원의 국비 및 민간 투자를 계획하였다.

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정부는 일찍이 1987년부터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제안하였다. 미국 역시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을 개선하고 한·미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1988년 3월부터 양국간에 협의를 시작하여 1990년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위한 한·미 양국간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전비용과 세무 이행에 대한 합의 지연으로 사업이 보류되다가 주한미군의 재배치계획에 따른 협상과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시 용산기지의 조기 이전이 합의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군의 한국주둔을 시작한 용산기지에 대한 역사성과 문화성을 인식하고 이전후 흔적지를 도시내 국립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도시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 법의 내용은 용산부지 86만평 중 81만평을 국가재정으로 공원화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해 공원추진기획단의 설치, 정비구역의 지정, 종합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의 수립 등을 명시하였다. 이 법에 따라 국가는 2007년 11월에 평택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지건설 착공식을 갖고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국가는 공원조성을 위해 1조 5천억원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특별법

평택지원특별법의 제정은 전술한 것처럼 평택이외의 기존 공여구역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기존의 미군주둔지 즉 미군공여구역의 주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특별법을 많은 논란 끝에 2006년에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의 골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였고(법 4, 5조), 또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법12조),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에 대해 도로·공원·하천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비용을 일부 지원하게 하였고(14조), 수도권 규제지역에 있어서 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의 신증설을 업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허용하고자 하였으며(15조),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교육문화관광시설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24조),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지원,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을 할 수 있게 하였다(35조 등).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은 재정적 뒷받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법에 정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오랜 논의 끝에 2009년 2월에 들어서야 행정안전부가 수립하고 발표했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이 법에 따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모두 343건 34조2천803억 원(국비 3조8천688억 원, 지방비 3조89억 원, 민자 27조4천26억 원)의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에드워드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스탠튼에는 국민대학교, 의정부시 스탠리에는 광운대학교, 하남시 콜번에는 중앙대학교, 포천·연천 등 6곳에서 대학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또 동두천 캐슬에 산업클러스터 등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포천시 신평지방산업단지, 연천군 현가리지방산업단지 등 모두 5개 시·군 7개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 허준 선생묘 약초마을, 남양주시 월문문화예술관광단지, 포천시 에코디자인시티·덕둔리 관광지, 동두천시 소요산권 테마형 관광휴양단지·탑동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의정부시 북부행정타운·홀링워터 근린공원, 파주시 하우스 문화테마공원, 양주

시 김삿갓 공원, 동두천·양주시 일원 자유도시 조성, 연천군 동이리 생태공원 등 근린공원, 체육공원, 행정타운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의정부시 도서관, 파주시 남북협력단지, 포천시 축산 및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업, 양주시 농산물유통센터, 남양주시 유기농생태체험마을 등의 조성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에 반영된 것이고, 실제로는 국비확보의 어려움, 도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3. 주한미군 관련 정책의 시각과 발전방향

1) 주한미군을 보는 시각의 변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이 한국영토에 주둔하게 된 이유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자율성을 어느 정도 희생할 수 밖에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탈냉전시대의 마지막 분쟁지역이고, 적대적인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대치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전쟁억지력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하여 미군 공여지 주변에 끼치는 손실 등은 어쩔수 없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한편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첫째 미국에게 대서양 이상으로 경제 및 안보상 상호의존관계가 진전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한반도에서 전쟁의 억지력을 유지하고 유사시에는 즉각 대응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며, 셋째 이 지역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패권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미군의 전방전개를 통해 안정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을 놓고 양국의 입장이 잘 정리되어 왔던 것은 아니다. 또 한국정부로서는 미군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해도 미군들 자신이나 지역사회로서는 미군의 한국내 주둔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특히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미군의 재배치로 인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확인해보는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시각은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제1시각은 미군을 초청군으로 보는 시각이다. 2004년 4월30일 미 8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참모장인 캠벨(Campbell)중장은 한국의 주요학회 임원들을 초대할 자리에서 주한미군을 초대된 군대(Invitation Army)로 본다고 하였다. 이는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 스스로 자신들을 규정한 첫 사례로 미국의 시각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연합사의 한국군 장성들 일부도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아마 군사안보상 한국군도 미군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도 한국내 미군주둔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은 옳지 않고, 그들의 이익도 얻기 위하여 미군을 전방전개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초청군으로 본다면 방위비 부담은 있을 수 없고 주둔비용 등을 초청국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초청군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손님처럼 행동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권적 지위를 갖도록 한 SOFA의 개정 필요성은 분명해진다.

제2시각은 반미 및 혐미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으로 주한미군으로 점령군(Occupation Army)로 보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보는 시각은 역사가 깊다. 해방후 인천항에 상륙한 미 24군단사령관 하지 중장이 선포한 포고1호가 점령군으로서 진주하였다는 성격을 드러내었다. 그 후 많은 상황이 변했지만 점령군으로서의 성격은 여전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습성에 의해 매향리사격장 사건, 윤금이 양 살해사건 등 발발과 처리에서 보여준 미국과 미군의 태도가 점령군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시각이다.

또다른 예는 한미간에 맺어진 현재의 SOFA의 성격이다. 미군은 전세계 80여개국에 주둔하고 있고, 주둔국가와의 사이에 SOFA가 체결된다. SOFA는 개별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법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협정체결의 목적은 갖다 하더라도 주둔군으로서의 지위, 기구, 협정내용 등은 다르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후 점령군으로 진주한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SOFA가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되었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점령군으로서 진주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다. 물론 2001년 SOFA개정을 통해 비로소 일본이나 독일과 유사하게 한국의 입장이 강화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한국의 안보현실과 지역사회와 주한미군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3의 시각은 협력군(Cooperation Army)으로 보는 것인데, 한·미 양국간에 안보적 이익을 공통의 것으로 보고, 국가간 및 미군과 지역사회간 파트너십을 중요시 하자는 시각이다. 미군 스스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Good Neighbor Program'을 가동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미군에 대한 교류협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 등이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다. 이러한 입장은 미군이 한국에 진주한 역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한국과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군이 도움을 준 것을 인정하자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한편 미군으로서도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고 동맹군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한다. 한국군의 미군과의 합동훈련, 이라크파병, 전시작전권의 이양검토 등도 한국을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현재의 SOFA도 역시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보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주둔지 주변의 지역사회에 대한 미군 및 국가의 정책도 변화하는 것이 타당하게 된다.

<표 4-1> 주한미군에 대한 주요 시각과 입장

시각	주요 주창자	입장의 차이	결과성향
초청(Invitation Army)	미정부, 미군, 국내우파	주둔 비용 한국부담유지, 주둔지역손실보상에 미온적	보수적, 지역사회반발
점령(Occupation Army)	반미주의, 일부 NGO	미군철수 주장, SOFA의 전면 개정	자축국방, 동맹파기까지 주장
협력(Cooperation Army)	한국군, 실용주의인사, 지역사회	SOFA의 개정, 주둔지역손실보상	협력적 관계발전

2) 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SOFA가 규정한 미군의 지위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한국의 주권이 훼손될 정도로 미군의 우월적 지위가 보장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오랫동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특히 2002년에 미군전차에 의해 희생된 효선미순양 사건의 처리는 한미 행정협정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의식하여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미군은 이 사건이 공무중 일어난 사건이란 점을 들어 재판권 포기를 거부했다. 게다가 미 군사법정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기소된 2명의 미군에게 무죄평결을 내렸고, 이들은 사죄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을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한국사회는 촛불집회를 열어 이에 항의하였고, SOFA의 개정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여중생 사망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측의 주권침해는 한미간에 맺은 SOFA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어났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국가의 법률질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외국군대가 주둔국가에서의 특수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쌍방 법률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편의를 제공받는다. 이때 그 편의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기 위해 주둔국가와 미군간에는 SOFA(행정협정)이 체결된다. 이것이 한국과 미군간에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의 목적인 것인데, 문제는 주둔군의 편의제공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첫째 제1차 재판권의 포기문제이다. 한국의 재판권 행사가 극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경우 앞서 소개한 것처럼 한국정부는 제 1차적 재판권을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미군의 주둔군 지위협정 중에는 이렇듯 당사국의 제 1차적 재판권 행사의 포기를 원칙적으로 규정한 예는 없다. 다만 독일보충협정(NATO LONDON 협정을 보완하는 독일 정부와 미군당국의 부속서)에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으나, 최초 독일측이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통지를

했다라도 후에 다시 이를 번복하여 승인한 포기를 철회할 수 있다는 보완책이 있어, 최초 포기 통지 이후에는 재판권 행사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는 한국과는 그 상황이 다르다. 만약 한국이 효순미선양 사건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였다면 배상판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는 공무상 범죄에 관한 문제이다. 공무상 범죄란 미군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일으킨 혐의 사실을 말하는데, 교통사고나 미 헌병수사대의 한국인 불법 조사행위가 주를 차지한다. 한미행정협정은 미군이 공무집행 중에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한 관할권을 미국 측이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공무상의 범죄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인데 사실상 공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여러 유권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서 미군당국에 의해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오용될 소지를 가진다.

현재 미군당국이 특정 범죄 사실에 대해 그것이 공무 중에 일어난 것임을 증명하는 '공무집행증명서'를 발행할 경우 한국은 재판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이 증명서의 발행 권한의 최종적인 주체가 미국이어서 한국측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일행정협정의 경우 '공무집행증명서' 발행의 최종적인 권한이 일본 형사소송법에 의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행의 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이 없는 한국의 협정과 대조적이다.

셋째는 범죄자 신변확보 및 심문절차의 문제이다. 미군이나 군속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수사를 위해 이들의 신변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은 범죄자의 신변을 최종형이 결정된 이후에야 당사국에 인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항소까지 갈 경우 사건심리는 줄잡아 1년 6개월 후에야 종결되고, 그제야 범죄인의 한국 구치소 수감이 가능해진다. 결국 범죄사실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실제의 죄과보다 훨씬 줄어든 형을 사는 경우가 많다. 현행 NATO LONDON협정이나 미일행정협정에서는 범죄자의 신병을 공소가 제기된 시점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도 공정하고 정확한 사건 심리를 위해 공소의 시점에서 범죄자를 인도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행정협정은 범죄자가 범행 후 미군 시설 내로 도주할 경우 미군당국이 배타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독소조항이다. 또한 한미행정협정에서는 한국측이 범죄자를 심문할 경우 반드시 피심문인의 상관의 입회하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한국 내 미군범죄자는 협정을 통해 자신을 변호할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미군범죄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불필요한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3) 주한미군공여구역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006년에 제정되고 2009년에야 비로소 종합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나 여전히 그 실효성 등에 의문이 있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공여구역등주변지역에관한특별법'이다.

이 법의 실효성이 의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 때문이다.

첫째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중앙정부는 평택(18조 8천억원), 용산공원(1조 5천억원), 군산직도사격장(3천억원) 등 주요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전액 국비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사업에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국비 보조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더욱 심각한데, 예를 들어 2009년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92%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이며, 예산규모는 28조 7,172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서울시에는 반환미군기지를 무상제공하고 공사비도 국가가 부담하여 공원을 조성하면서, 재정자립도 24%에 불과하고 예산규모도 열악한 동두천시에 대하여는 반환기지를 매각 조치하고, 공사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

둘째는 실효성의 문제이다. 현행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의 활용과 관련하여 국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하천, 도로, 공원에 한정하고 있다(제14조). 그 결과 재정이 열악하여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없는 지자체들의 반환공여구역 활용 방안은 대부분이 도로, 공원 등에 한정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인 것이다. 또한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은 대학의 이전, 증설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대학이 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도 그 예이다. 발전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으나(제8조), 종합계획의 심의 확정 과정에서 관계 부처가 각종 사유로 협의를 장기간 지연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부재한 것도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한편, 규제특례(제13조) 조치가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된 토지이용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매우 어렵고,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제18조) 조치는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규제가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설립이 불가능할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두가지 방향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다. 둘째는 형평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폐해가 가장 컸던 동두천을 위해서는 별도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항목을 달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미군공여구역등주변지역지원특별법’은 평택지원특별법이나 용산공원조성특별법과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 법안은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동일한 국가안보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특정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야 한다. 또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적용은 국가안보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선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낙후지역 개선의 문제로 접근할 경우 적용 대상지역의 면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이 특별하게 부담하여야 했던 피해에 대한 경증을 따질 수 없다. 또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할 경우, 특별히 과중한 안보부담이 가해진 지역에 대하여 발생한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

을 것이다.

일본의 유사한 사례를 보면 일찍이 1970년에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미군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시설까지 포함하여서 “자위대 등의 행위 또는 방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의 방지 등과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등의 정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자위대의 특정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 관계 주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점이다.

4) 동두천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

미군공여구역등주변지역지원특별법은 특히 손실이 많은 지역은 분리하여 평택이나 용산과의 형평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별입법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공여지 면적이 28.82km²에 불과한 반면 경기도의 경우 동두천시 한 지역에만 40.63km²의 지역이 공여되었다. 이것은 동두천시 면적의 42.5%에 해당하며, 전국 미군공여지 면적의 16.15%이다. 동두천시 인구의 약 17%가 주한미군 관련 종사자들이다. 또한 동두천시의 미군관련 경제 규모는 지역내총생산의 20%에 달한다. 시 면적의 42.5%에 달하는 면적이 장기간 미군 공여지로 제공됨으로써 정상적인 도시발전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경제의 미군 의존도가 높아 자치단체로서의 경제규모 및 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즉, 동두천시는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한미군 의존도가 매우 높은 도시로 형성되어 왔다.

그나마 동두천시 경제를 지탱하던 미군은 2004년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약 50%(1만여명 → 5,700여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관련 400여 업체의 매출액도 60% 가량감소(연간 800억원 → 320억원)하였고, 지역 상권의 붕괴로 미군관련 업체의 40%가 휴·폐업(영업중 400업소 → 240업소)중이다. 뿐만 아니라 동두천시는 도시 면적의 상당부분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한 결과 지자체가 당연히 행사하여야 할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어 세수확보도 어려운 형편이다.

미군공여지로 인한 종합토지세 등 세수 손실액은 연간 226억원으로 이는 2009년 예산액 1,669억원의 약 14%, 지방세 254억원의 89%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 2월 현재 24.2%에 불과한 상태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나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한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가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학, 공장 설치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정원 50인 이하의 대학만 허용하며 수도권 안에서의 이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4년제 대학은 신설이 금지되어 있다. 대기업 신설이 금지되어 있으며, 500m²이상의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동

두천시 면적의 24%에 해당하는 약 23km²(700만평)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이 역시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캠프 케이시(블록담장 227m, 초소1, 창고1, 전신주, 가로등)와 캠프호비(철조망 310m, 초소1, 세차장1, 전신주, 가로등) 지역의 3호선 국도 확장을 위해 1992년 12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무려 5년 3개월 동안 52회 차례에 거친 협의 끝에 시설이전비 14억 5천만 원을 미군측에 지급하여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국도 3호선의 병목현상은 동두천뿐만 아니라 동두천 이북의 연천, 포천 지역의 개발까지 정체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주한미군의 60년 주둔으로 지역경제가 왜곡된 동두천시에 대해 국가가 평택수준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형평을 타개하기 위해 2008년 12월 ‘주한미군공여구역반환에따른동두천시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회계의 설치’와 동두천시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례조치’들이 보장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재원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주한미군 기지이전 예산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이것은 한수 이북 반환 미군기지 매각 대금으로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며, 둘째, 재정이 넉넉한 서울시를 지원하면서도 경제규모도 작고 재정도 열악한 동두천지역을 차별하는 논리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한 중첩적 규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설립 및 운영, 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등의 특례 등이 보장되도록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자치단체 정책의 역사와 발전방향

1. 주한미군 관련 정책의 흐름

주한미군의 진주로 인하여 안보이외에 경제 및 사회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주둔지의 지방자치단체이다. 하지만 1995년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주한미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유의미한 정책을 펼칠 수는 없었다. 지방자치 실시이전에 도와 시·군은 주한미군을 외생변수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역의 자치단체들로서는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한미군 및 공여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주민들로서도 한국군의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미군의 주둔지에 대해서도 그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점에 대하여 부당함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로서도 주한미군의 범죄 및 주둔으로 인한 지역의 손실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를 주문하기에 이르렀고, 한편으로는 주한미군과의 협력적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1) 택시기사의 국가상대 소송

주한미군정책에 대한 국가의 변화를 촉구한 것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반영하듯이 시민쪽에서 먼저 나왔다. 1995년 1월에 아리랑 택시기사 정양환씨가 미군 민간차량과 차선시비 끝에 미헌병대에 체포된 사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씨 사건은 서울 용산 한남빌리지라는 영외에서 미군과의 사이에서 1994년 3월에 일어난 단순한 차선시비였는데도 미군은 내국인을 체포하였고, 미군들이 '공무중'이었다는 이유로 한국 당국의 형사관할권 자체를 부인했고, 한국 검찰이 미군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권을 포기해 버렸다. 하지만 미군당국은 단순시비로 보고 결과적으로 정씨에게 공식사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씨는 국민에 대한 보호권을 행사하지 못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대항한 한 시민의 첫 사례였고, 주한미군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다. 당시의 한국사회의 성장과 시민들의 의식변화는 앞으로 주한미군정책을 바꾸라는 신호였던 셈이고, 이후로 지자체의 실시에 따라 주한미군주둔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와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대한 요구가 빈발하게 되었다.

2) 지자체의 환경오염시정 요구와 공여구역의 반환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피해 중에 주둔지 주변의 환경오염문제가 있다. 1995년 5월에 경기 송탄시(현재 평택시)의 주한미군기지(K55)주변 평택평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미군기지에서 하루 5천t가량의 생활하수를 정화하지 않은채 진위천을 통해 인공담수호인 아산호로 흘러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부대의 배출하수가 아산호를 오염시키는 바람에 각종 농사를 망치고 있다며 당국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진정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이 미군부대에서 방류하는 생활하수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농업용수허용기준치 8PPM의 12배 이상인 1백PPM으로 분석, 진위천의 오염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으로 확인했다(경향신문, 1995. 5. 15).

낙동강에서 2km가량 떨어져 있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 캠프 캐롤 부대는 부대안에 2개의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용량이 적고 낡아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를 하루 수백t씩 낙동강 지류인 동정천으로 흘러보내 농업용수를 오염시켜

몇년째 왜관 8, 9리 주민들의 농사를 망치게 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미군부대안에는 병원, 비행기 정비, 사진현상소, 세차장, 골프장등 악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들이 산재해 하수오염도가 어느 지역보다 심각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심각한 미군부대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라 영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몇차례 촉구했으나 미군담당자는 “영구히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아닌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며 묵살하였다(경향신문, 1995. 5. 15)..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한미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보상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미군주둔 이래 유래가 없던 것이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 혹은 철수주장은 지방자치 실시된 직후 과거보다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기지반환 혹은 이전문제는 여전히 국가간의 의제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초의 기지반환은 1996년에 시작되었다. 경기 동두천일대 주한미군 훈련장 용지 5백70여만평이 이르면 1996년에 공여지에서 해제돼 원소유주에게 반환된다고 김동진 국방장관과 페리 미 국방장관이 1996년 11월 1일 워싱턴에서 제28차 한·미 안보연례협의회를 가진뒤 발표한 것이다. 미국은 향후 훈련장을 한국군과 공동사용한 것을 전제로 합의했다(서울신문 1996, 11.2). 1967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체결이후 미군용지가 반환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한국일보, 1996.11.4일자 보도). 그 이후 1999년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경기도 포천의 사격훈련장과 서울 서대문 ‘서울의 집’ 등 107만평을 되돌려 받기로 한·미 당국간에 1999년에 합의됐다.

3) 국가의 주한미군정책의 변화추구

국가를 상대로 주한미군정책의 변화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논의되기 시작한 2003년 무렵 부터로 볼 수 있다. 당시 한미동맹협상(FOTA)에 의해 용산기지 및 미2사단의 평택이전이 논의되고 합의될 무렵에 경기도로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수도권규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규제로 인해 낙후하게 된 경기북부의 사정을 고려하고, 향후 반환될 공여지의 자주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경기도로서는 도정책으로서 주한미군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다.

경기도의 움직임은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한 국가정책의 변화에 대한 유도이다.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합리성을 높여 경기도에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촉발되었다. 용산미군기지가 2004년에 평택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이를 감지한 경기도는 2003년 11월에 ‘용산미군기지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 2004년에는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경인행정학회에 의뢰하여 특별법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려는 세미나를 열기도 하였다. 2005년 7월에는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이라는 연구

를 통해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반환되는 공여지를 자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국가에 표명하였다. 2006년에 ‘주한미군공여구역등주변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된 후에는 동두천문제 등의 불형평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동두천특별법’의 제정 운동을 지역출신 국회의원, 동두천시,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도청내에 주한미군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두어 지속적인 대응을 하자는 것이었다. 경기도 제2청사에는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지역과가 만들어져 있고, 한편으로는 주한미군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관협력담당관실이 설치되었다. 이들 부서는 광역단체가 최초로 주한미군 관련 정책을 펼친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강원도와 기초자치단체인 동두천시에도 영향을 미치어 유사한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노력들의 의미는 그동안 국가의 주한미군정책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던 국가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었고, 다른 한편 주한미군문제가 국가만의 것이 아닌 지방정부의 정책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4) 주한미군과의 직접교류정책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주한미군과의 직접교류정책을 펼 사례는 역설적으로 효순미선양 사건(2002년 6월 13일 발생)의 파장이 컸던 2002년에 있었다. 당시 불행한 사건은 자치단체로서는 역설적으로 미군과 주둔지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두가지 괄목할 만한 미군과의 직접교류정책을 펼쳤다.

첫째는 경기도와 미군간에 한미협력협의회(KAPCC; Korea·America Partnership Council)를 그해 11월 4일에 발족시킨 것이었다. 이 협의회의 목적은 훈련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협의하고, 양측간에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동의장은 경기도 제2부지사와 미2사단장이 맡고, 양측 18명씩 36명으로 구성하였다. 이 회의에는 도에서 뿐만아니라 동두천, 연천, 포천, 양주, 의정부, 과주 등 인근 지자체의 부단체장과 이들 6개 시군의 한국군의 군단참모 등도 참여하여 지자체, 미군, 한국군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망라되어 지역사회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협의회에서는 특히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갈등 및 분쟁에 대하여 협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2년부터 2010년까지 30회의 협의회가 열렸고, 연평균 약 18건씩 11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115건의 안건 중에서 81건이 해결되고 30건이 의제종결되었으니 협의회의 운영효과는 큰 셈이었다(표 4-2, 4-3 참조). 한미협력협의회는 지자체차원에서 주둔 미군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 미군간의 현안을 해결하는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 표 4-2> 한미협력회의 개최실적

(단위 : 회수)

구 분	연도별 개최실적										비고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30	2	4	6	3	2	4	3	3	3	
본 회의	13	2	2	3	1	1	1	1	1	1	
실무회의	17	-	2	3	2	1	3	2	2	2	

< 표 4-3> 한미협력회의 안전처리 실적

(단위 : 회수)

연 도	상정안전	처 리 결 과			비고
		해 결	처리 중	의제종결	
계	115	81	4	30	
2002년	6	4	-	2	
2003년	30	21	-	9	
2004년	21	13	-	8	
2005년	11	7	-	4	
2006년	10	8	-	2	
2007년	7	4	1	2	
2008년	8	7	-	1	
2009년	10	8	-	2	
2010년	12	9	3	-	

※의제종결 : 안전 의도대로 처리될 수 없거나 처리에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

둘째는 한미협력협의회의와는 별도로 한미친선교류행사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양측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2003년 2월 15-16일 주말을 기해 주한미군 위문행사를 열었다. 당시 존 우드 미군 2사단장 부부 및 미군 장병 300여명을 뮤지컬 공연에 초청한 것이다(한겨레, 2003. 2. 18). 이들 두 가지 직접교류사례는 당시 여중생사망사건의 여진이 가시지 않던 때라 비판이 있었지만,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과의 직접교류 정책을 펴는 시작이었다.

하지만 주한미군과의 직접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한미간에 여중생사망사건이 촉발한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된 2005년 무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시 경기도 제2청사는 주한미군과의 자매결연을 비롯, 한·미 여군 문화교류행사, 한국어 및 한국역사문화강좌 운영, 미군의 문화 산업시설 시찰, 미군 신병 관공서 초청 등의 주한미군 가족화사업과 한·미친선가교의 밤, 한·미 한마음 등반대회, 미군 공연 초청 등의 한·미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7월에는 미군측에서 이에 호응하여 당시 경기도 제2부지사에게 주한미군사령관이 주는 ‘좋은 이웃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2008년경부터는 주한미군과 지자체와의 교류가 양과 질 면에서 매우 분화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경기도는 2008년에는 미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미군장병 한국어 강좌’를 미2사단 캠프 호비 교육센터에서 실시하였고, 또 한미가족 및 어린이 문화체험행사를 시작하기도 하는 등 꾸준히 한미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해부터는 도전체 차원만이 아니라, 도의 한부서(도시환경국)와 주한미군의 한 부서(캠프 클라우드 시설사령부)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그 일환으로 친선볼링대회(2010년에 3회 실시) 및 미2사단 박물관견학 등의 교류의 분화도 일어나고 있다.

< 그림 4-1> 한미 부서간 자매결연활동모습



기념품 전달



2사단 박물관

2010년에는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 6만 7천여명을 대상으로 한·미 문화체험, 한국어·문화·역사 강좌, 한·미 친선 문화교류 등 3개 부문에 걸쳐 모두 41차례 진행된다. 이중 한 미 문화체험은 문화, 산업시찰, 한·미 가족 및 어린이 문화체험, 중고생을

대상으로 미군 부대 내 홈스테이, 한·미 화합 전통문화체험 등 11차례 진행되었다. 한편, 한국어·문화·역사 강좌는 미군장병들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회 3일씩 모두 25회에 걸쳐 운영하였다.

2. 주한미군 관련 정책의 발전방향

1) 주한미군 관련 국가정책의 보완촉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한미군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은 현재 주한미군재배치가 계획된 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고, 또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데 있다. 원래 계획된 것은 용산기지(YRP)는 2008년 말까지 평택지역으로 이전해서 LPP(한미연합토지이용계획)사업도 목표시기를 2011년 말로 고려하였으며, 미 2사단 전투부대들의 평택이전은 양국 국가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처음에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용산기지이전사업의 경우에 2008년 12월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PMC : Program Management Consortium)는 사업기간과 연장 및 예산 증액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용산기지는 2014년 말까지 LPP사업은 2016년 1/4분기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예산면에서 14.4조원(한국측 7.6조원, 미국측 6.8조원)을 증액요청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업 시행회사의 제안도 필요성만 인정되고 있을 뿐 2010년말 현재 한미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연장기간마저도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미군기지 이전 일정이 지연되고 불확실해짐으로써 이전지역과 반환지역 모두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택지역에서는 주한미군의 영외거주 등을 목표로 조기투자한 임대주택사업자들이 부도 혹은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정부의 2008년 이전목표 발표 후 396동 1,400세대 건설), 그리고 이주자들을 위한 고덕 신도시 개발사업도 동반하여 지연되고 있다. 한편 동두천지역으로서는 반환기지의 활용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운영으로 지역경제만 침체하는 등 지역주민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로서는 이전사업의 지연에 따른 국가의 대책을 유도하는 한편 경기도로서도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한미군정책에 대한 안보상의 한·미공조협상이나 주한미군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국가정책에 대한 변화와 자체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이전사업의 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런 경우 국가가 지원하였던 사례를 따져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사업의 추진방법도 국가가 균형발전정책의 수단으로 선택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있어서 국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치하여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국책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재정력이 약한 동두천을 위하여서는 도비사업의 직접 수행과 도비보조를 수단으로 하여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선 현재 계류중인 '동두천지원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전국적인 연대를 이끌어내야 하고, 경기도 제2청사가 추진하고 있는 송추-동두천간 민자고속화도로 사업의 기한내 완공, 동두천시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휴양레저도시사업 등을 위해 도의 적극적인 추진 및 지원이 필요하다.

2) 직접교류사업의 발전방향

2003년부터 시작하고 2006년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경기도의 한·미친선교류협력은 협력의 상대방인 미군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류사업에 참가한 미군 및 가족들은 설문조사결과 참가자의 96%가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아시아투데이, 2010.6.30). 짧은 기간에 미군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간의 관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미군간의 직접교류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로 보아야 한다. 교류라고 하는 것은 교류당사자가 갖고 있는 상대적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정보, 물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주의에 입각하여야 한다. 현재 경기도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험기회, 관광기회, 한국어강좌, 위문물품 제공, 주둔지 주변 도로 및 환경정비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군측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는 과거와 달리 크게 변한 것이 없다. 특히 동두천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주둔미군수가 감축됨으로써 주한미군에 의한 소비지출은 대폭 감소되었고, 주한미군에 의한 지역사회봉사도 대민 영어강좌 등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직접교류의 방향은 주한미군의 지역사회에 대한 민사관계 상에 있어서의 투자와 봉사 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는 상호협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역군인들의 주말 영어교육 등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한국주둔경험이 있는 퇴역군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이나 교류기회를 확대하여 그들의 한국복무경험을 추억하게 하고, 교류자원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해외참전재향군인회(Veterans of Foreign Wars) 대구지구(지구사령관 대린 콤프)는 1999년에 결성된 이후 한국인 참전 용사, 주한미국대사 등을 만나면서 교류 사업과 퇴역 군인을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VFW는 국내에서 서울과 경기 동두천·의정부·평택·성남·오산시 등 7개 권역에 결성돼 있으며 대구의 콤프 사령관이 한국 7개 지구를 대표하고 있다. 이중 200여명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 현역 미군에 대한 교류협력은 병사의 주둔기간이 그간 1년에 불과하여 그 효과가 크기 어렵다. 반면 퇴역후에 한국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인과 결혼하여 정착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특히, 2013년에 주한미군주둔 60주년을 맞는 동두천 등에서 도 및 기초자치단체와 미국 및 주한미군과 협력하여 주한미군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도 기지 이전이 논의되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을 거쳐간 미군부대들이 한국전에 참전한 기록이나 사진, 서적, 부대 및 개인유물 등을 수집하여 안보 및 평화에 대한 되새김은 물론 세계 평화교류의 장소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매년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복무경험이 있는 퇴역군인들과 그 가족, 세계평화NGO 등과의 국제교류페스티벌은 과거 주한미군 주둔지들의 안보에 대한 희생을 위로해주고, 향후 그들 지역에 대한 국가정책지원의 연대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저서 및 연구논문>

- 강준만,오두진 (2005)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인물과 사상사
 구영록·배성수(공저), 『한·미관계: 1882-1982』, 서울: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1982.
- 기지촌. 기지촌여성.혼혈아동 실태와 사례, 새움터, 1997,
- 김운태, 『한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2005.
- 김창훈, 『한국외교 어제와 오늘』,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 김동성외,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 갈등관리 및 협력제고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6.6
- 김동성외, 『주한미군과 지역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1.10.
- 김용한, 『주한미군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잉걸, 2005.
- 김일영·조성렬(공저),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김창훈, 『한국외교 어제와 오늘』,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 김철범(책임편집),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 서울: 박영사, 1989.
- 김현선, 미군 기지촌의 국가간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실태, 미군 기지촌 성매매 실태와 성적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원탁토론회, 2002.
- 김현선 “주한미군과 여성인권”, (2001년 제주도 인권학술회의 발표문)
- 다큐인포지움, 부끄러운 미군문화답사기, 북이즈, 2004.

- 미8군한국군지원단, 카투사의 어제와 오늘, 1993
- 미해외참전용사협회(편), 박동찬·이주영(공역), 『한국전쟁 I: 1945-1953, 맥 아더·클라크·리지웨이 보고서』, 서울: 눈빛출판사, 2010.
-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I』, 서울: 도서출판 나남, 1997.
- 백선엽, 『내가 물러서면 나를 쫓라 I·II』, 서울: 중앙일보사, 2010.
- 안청시(편), 『현대한국정치론』, 서울: 법문사, 2007.
- 오코노기 마사오, 현대사연구실(역), 『한국전쟁: 미국의 개입과정』, 서울: 청계연구소, 1986.
-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1948-2008』,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9.
- 이형삼, “꿈도 영어로 꾸는 엘리트 병사들“. 신동아, 2001.5.
-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 1979.
- 신현준 외저, 한국 팝의 고고학 1970 - 한국 포크와 록, 그 절정과 분화-, 한길아트. 2005.05.15
- 심지연·김일영(편), 『한미동맹 50년: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서울: 백산서당, 2004.
- 정옥임. 한반도 평화와 주한미군: 동맹재정립의 방향. 세종연구소. 2001.
- 최용환외, 『한미동맹 재조정과 주한미군: 경기도의 입장과 정책방향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11.
- 최용환, 미군기지이전동두천지원대책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0.
- 최용환. 미군기지이전 동두천 지원 대책 개선방안. Policy Brief. 경기개발연구원. 2010.
- 한경아, 韓國混血人의 實態와 問題--필벽財團에 登錄된 美國계 韓國 混血人을 中心으로-
-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0. 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한미군사와 미군정기 연구』, 서울: 백산서당, 2002.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사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논총 제5집, 서울: 평민사, 1989.
- 한국정치학회(편), 『정치학 이해의 길라잡이: 한국정치』, 서울: 법문사, 2008.
- 한정일, 『한국의 정치와 행정』, 서울: 전예원, 2000.
- 허 훈. 미군공여구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규제완화방안. 한국행정학회·경인행정학회.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관련세미나. 2004.

<공공기관보고서 및 기록물>

- 경기도. 2005.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 경기개발연구원. 2003.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 국무총리실, 『주한미군 재배치사업 백서』, 서울: 국무총리실 용산공원건립추진단, 2007. 5.
- 국방부, 『국방정책 1998~2002』, 서울: 국방부, 2002.
-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서울: 국방부, 2002.
- 국방부, 『국방백서 2010』, 서울: 국방부, 2010.
-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1948-2008』, 서울: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2009.
-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의정부시.
- 필벽재단, 혼혈인 지역별 분포현황, 보사부 제출보고서, 1994년 4월.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주한미군사와 미군정기 연구』, 서울: 백산서당, 200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현대사』, 서울: 고려원, 1987.
- 한국커피의 역사, <http://blog.naver.com/winoart/130074172603>

<신문 및 인터넷, 기타>

- 경인일보 2007.04.22 22:00 [기지촌할머니들 고단한 삶].
- 동아일보 2003-10-31 29면.
- 경향신문 2003-10-31|19면.
- 매일경제, 2010년 09월 09일.
- 시사저널 734호 2003/11/11 “우리는 PX 가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한국 특권층의 ‘미군PX 사랑’ 현장 추적
- 위클리경향 뉴스메이커 757호 2008/1/8 [문화]‘AFKN의 추억’
- 조선일보, 95-11-05 . 10면.
- 중앙일보 2004년 5월 27일.
- 한국일보, 1993-06-25. 30면.
- 한겨레 21 2005.05.24. 제561호 불법과전, 카투사 컴홈.
- 한겨레 21. 2000년 07월 13일. 제316호.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한국팍의사건·사고60년⑧ 2005. 7. 6.]

인터넷한겨레, 2002.07.30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07/2002/07/005100007200207301942273.html>

< 외국도서 및 논문 >

日本辯護士聯合會. 1998. 日本の安全保障と基地問題. 東京 : 明石書店.

Weeks, Stanley B. and Charles A. Meconis. 1999. *The Army Forces of the USA in the Asia-Pacific Regions*. I.B.Tauris.

Lowe, Peter,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ondon: Longman, 1986.

Bruce Cumings, *Child of conflict : the Korean 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1983.

_____, *The Korean War*, New York : Modern Library, 2010.

Ryo, Hagiwara. 1994. *Korean War: Conspiracies of Kim Il-sung and MacArthur*. Tokyo: Bungei Syunzyu.

Schnabel, J. F. *U.S. Army in the Korean War: Policy and Direction*. Washington, D.C.: OCMH, U.S. Army. 1966.

Shin Bok-ryong. *The Politics of Sepa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Seoul: Hanul Academy Publishing Co. 2003.

Simmons, Robert. "The Korean Civil War." Frank Baldwin ed. *Without Parallel*. New York: Pantheon Books, 1974.

Thompson, Kenneth W. *Cold War Theories*, Vol. 1.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1.

Truman, H. S. *Memoirs: Vol. II, Years of Trial and Hope, 1946-1952*. Garden City: Doubleday & Co. 1956.